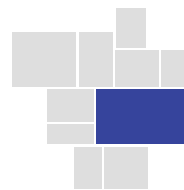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1 1

**한국의 사회동향
2011**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을 발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일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 소득 2만 불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도 보다 정밀해지고 다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은 교육 부문을 특집으로 하여 주요 동향 및 세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동, 소득 및 소비,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 환경의 총 6개 부문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발전단계에 와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통계를 쉽게 풀이하여 통계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전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최연복

목차

특별섹션

I. 교 육

교육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김태현 • 2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서문희 • 15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김경근 • 22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김경근 • 35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김한별 • 46

일반섹션

II. 노 동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홍승아 • 56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박시내 • 65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박영실 / 한승훈 • 75

III. 소득과 소비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 변화	김신호 • 84
가계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김순미 • 94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강석훈 • 103

IV. 사회복지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강신욱 • 112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정순돌 • 122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고경환 • 131

V. 문화 및 여가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 14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부상과 확산	최항섭 • 149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서우석 • 157

VI. 환 경

기후변화의 문제와 대응의 추이	김해동 • 168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박희제 • 179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 사회	박진희 • 187

용어해설 • 199

표 목차

- 003 <표 I-1> 30-39세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의 변화: 1980-2010
- 004 <표 I-2>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과 진학률의 변화: 1985-2010
- 005 <표 I-3> 연도별 고3 학생수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비교: 2000-2010
- 007 <표 I-4> 학교급별 교원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1985-2010
- 007 <표 I-5>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수의 비교: 2009
- 008 <표 I-6> 학생 1인당 건물 및 체육장 면적 추이: 1985-2010
- 009 <표 I-7> 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비율: 1985-2010
- 010 <표 I-8> 학교교육의 효과여부: 2000, 2010
- 010 <표 I-9> 학교급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추이: 2000, 2010
- 011 <표 I-10> 학교급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2000, 2010
- 012 <표 I-11>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변화: 1970-2060
- 013 <표 I-12> 지역별 초등학교 교원 및 시설자원 비교: 2010
- 018 <표 I-13> 미취학 자녀를 보낼만한 교육기관 여부: 2009
- 019 <표 I-14> 미취학 아동 가구에서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2009
- 020 <표 I-15>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1
- 023 <표 I-16> 연도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 025 <표 I-17> 연도별 중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 026 <표 I-18> 연도별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 028 <표 I-19> 연도별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 030 <표 I-20> 대안학교 재학생 현황: 2006, 2010
- 031 <표 I-21> 2-3년제 대학의 성별 및 전공계열별 학업중단 실태: 1985-2010
- 033 <표 I-22> 4년제 대학교의 성별 및 전공계열별 학업중단 실태: 1985-2010
- 036 <표 I-23> 연도별 고등교육 납입금 물가지수: 1990-2010
- 040 <표 I-24> 설립유형별 장학금 수혜율: 1990-2010
- 041 <표 I-25> 2-3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자 1인당 수혜액: 1990-2010
- 043 <표 I-26>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자 1인당 수혜액: 1990-2010

- 061 <표 II-1>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 산업별 구성변화: 1980-2010
- 066 <표 II-2>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2010
- 068 <표 II-3>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2010
- 070 <표 II-4>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 2010
- 070 <표 II-5>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 분포: 2010
- 072 <표 II-6> 성별 취업인구 전망: 2010-2050

076	〈표 II-7〉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078	〈표 II-8〉 전일제 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079	〈표 II-9〉 전일제 근로자의 학력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080	〈표 II-10〉 사업체 특성별 전일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086	〈표 III-1〉 전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087	〈표 III-2〉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087	〈표 III-3〉 5분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097	〈표 III-4〉 가계 자산총액과 금융자산 및 저축액(비중, 보유가구 비율): 2010
104	〈표 III-5〉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득변화 추이: 1990-2010
106	〈표 III-6〉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득비중 추이: 2010
107	〈표 III-7〉 미국, 일본, 한국 고령가구의 소득구성 비교: 2009, 2010
108	〈표 III-8〉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비 변화 추이: 1990-2010
109	〈표 III-9〉 전국가구의 연령별 소비 관련 비율 변화: 2010
114	〈표 IV-1〉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011
123	〈표 IV-2〉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1998-2011
125	〈표 IV-3〉 생활비 마련방법: 2002-2011
126	〈표 IV-4〉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 1998-2011
126	〈표 IV-5〉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02-2011
129	〈표 IV-6〉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2009
133	〈표 IV-7〉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 현황: 2010
133	〈표 IV-8〉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인력 분포: 2010
134	〈표 IV-9〉 사회복지시설 수 현황: 2010
135	〈표 IV-10〉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 현황과 추이: 2000-2010
136	〈표 IV-11〉 사회복지시설 수 현황과 추이: 2000-2010
143	〈표 V-1〉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1일 평균 여가시간: 2009
145	〈표 V-2〉 소득계층에 따른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2011
158	〈표 V-3〉 문화산업 매출액: 2005-2009
160	〈표 V-4〉 사업형태별 매출액 비중: 2010
162	〈표 V-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2007-2009
164	〈표 V-6〉 디지털 음원의 수익 배분 구조: 2010
165	〈표 V-7〉 문화산업 수출 규모: 2005-2009

- 170 <표 VI-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1990-2007
- 171 <표 VI-2> 장래 예상되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05-2020
- 174 <표 VI-3>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활동 연표
- 175 <표 VI-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제도적·법적 정비 연표
- 176 <표 VI-5> 우리나라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
- 177 <표 VI-6> 부문별 소요예산(안): 2011-2015
- 180 <표 VI-7> 한국인의 체감환경: 2010
- 185 <표 VI-8> 성별, 연령대별 친환경행동 참여정도: 2008
- 186 <표 VI-9> 한국인의 녹색생활 성과지표: 2006-2011
- 188 <표 VI-10>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1981-2008
- 192 <표 VI-11> 국가별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2009
- 195 <표 VI-12>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2007

그림 목차

- 004 [그림 I-1]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10
- 006 [그림 I-2] 인구 만명당 성별 대학생수의 변화: 1985-2010
- 007 [그림 I-3]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1985-2010
- 016 [그림 I-4] 연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증가 추이: 2000-2010
- 016 [그림 I-5]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증가 추이: 2005-2010
- 017 [그림 I-6] 연령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2004, 2010
- 018 [그림 I-7] 항목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2009
- 021 [그림 I-8] 취학 전 교육(3세 이상) 비용의 공공, 민간 지출 비율 국제 비교: 2008
- 027 [그림 I-9]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1981-2010
- 029 [그림 I-10]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1981-2010
- 034 [그림 I-11] 후기 중등학교 졸업률: 1995-2008
- 037 [그림 I-12]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설립유형별 평균 등록금: 2010
- 038 [그림 I-13] 4년제 대학교 전공계열별 등록금 및 인상률: 2009-2010
- 044 [그림 I-14] 대학등록금 국제 비교: 2006-2007
- 044 [그림 I-15]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중 '가계에 대한 장학금·기타 학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2007
- 047 [그림 I-16]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추이: 2007-2010
- 048 [그림 I-17] 지역별 형식교육 참여유형 비율: 2010
- 050 [그림 I-18] 성별에 따른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2010
- 050 [그림 I-19] 소득 수준에 따른 스포츠강좌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 참여율 변화: 2010
- 051 [그림 I-20]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2010

- 053 [그림 I-21]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평생학습 참여비용 변화: 2008-2010
- 057 [그림 II-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1990-2010
- 057 [그림 II-2]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0
- 058 [그림 II-3] 성별 임금근로자 구성 비율: 2010
- 059 [그림 II-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 1990-2010
- 059 [그림 II-5] 성별 비임금근로자 구성 비율: 2010
- 060 [그림 II-6]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 변화: 1990-2010
- 061 [그림 II-7] 월평균 총근로시간의 추이: 1990-2010
- 062 [그림 II-8] 국가별 연근로시간: 2010
- 062 [그림 II-9] 성별 임금변화의 추이: 1980-2009
- 063 [그림 II-10] 산전 후 휴가자 수 및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2001-2010
- 066 [그림 II-1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2010
- 067 [그림 II-12]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화 추이: 1960-2050
- 070 [그림 II-13] 연령별 고용률: 2010
- 071 [그림 II-14]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
- 073 [그림 II-15] 노동력 구조 전망: 2010-2030
- 076 [그림 II-16] 전일제 근로자 중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수준 국제비교: 2008
- 078 [그림 II-17] 성별에 따른 월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2010
- 079 [그림 II-18] 근속기간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 2010
- 080 [그림 II-19] 사업체 특성별 임금수준 추세: 2004-2010
- 082 [그림 II-20] 사업체 규모와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 2010
- 088 [그림 III-1]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 1990-2010
- 089 [그림 III-2] 음식·숙박비 지출액: 1990-2010
- 089 [그림 III-3] 주거, 수도 및 광열비 지출액: 1990-2010
- 089 [그림 III-4] 의류·신발 지출액: 1990-2010
- 090 [그림 III-5] 교통비 지출액: 1990-2010
- 090 [그림 III-6] 통신비 지출액: 1990-2010
- 091 [그림 III-7] 교육비 지출액: 1990-2010
- 091 [그림 III-8] 오락·문화비 지출액: 1990-2010
- 091 [그림 III-9] 보건 지출액: 1990-2010
- 092 [그림 III-10] 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 1990, 2010
- 095 [그림 III-11] 민간저축률과 정부저축률: 1991-2010
- 096 [그림 III-12]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2010

- 098 [그림 Ⅲ-13] 저축동기의 추이: 2001-2008
- 099 [그림 Ⅲ-14]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및 저축액의 비중: 2010
- 099 [그림 Ⅲ-15]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저축액 비중: 2010
- 099 [그림 Ⅲ-16] 고령화에 따른 가계 저축률: 1990-2010
- 100 [그림 Ⅲ-17] 개인순저축률과 개인가처분소득 증감률: 1990-2010
- 101 [그림 Ⅲ-18] 공적연금가입자 비율과 개인순저축률: 1990-2010
- 101 [그림 Ⅲ-19] 개인대출금리 비율과 개인순저축률: 1996-2010
- 101 [그림 Ⅲ-20] 주택담보대출연리와 개인순저축률: 2001-2010
- 105 [그림 Ⅲ-21] 미국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변화: 2009
- 105 [그림 Ⅲ-22]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변화: 2010
- 108 [그림 Ⅲ-23] 미국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 변화: 2009
- 109 [그림 Ⅲ-24]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 변화: 2010

- 113 [그림 Ⅳ-1] 상대빈곤율 및 중위소득 변화 추이: 1990-2010
- 114 [그림 Ⅳ-2]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의 변화 추이: 2000-2010
- 114 [그림 Ⅳ-3] 빈곤율의 국제 비교: 2008
- 115 [그림 Ⅳ-4] 주요 OECD 국가들의 노인 및 아동 빈곤율 비교
- 116 [그림 Ⅳ-5] 집단별 평균소득 비교: 2010
- 116 [그림 Ⅳ-6] 빈곤층과 비빈곤층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2010
- 117 [그림 Ⅳ-7] 빈곤층과 비빈곤층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2010
- 118 [그림 Ⅳ-8]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의 생활 실태 비교: 2010
- 119 [그림 Ⅳ-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인원수의 변화: 2001-2010
- 119 [그림 Ⅳ-10] 정부 개입 전후의 빈곤율 변화: 1990-2010
- 124 [그림 Ⅳ-11]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구성별 분포: 1990-2010
- 124 [그림 Ⅳ-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998-2010
- 125 [그림 Ⅳ-13] 향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견해: 2002-2011
- 126 [그림 Ⅳ-14] 노후준비 여부: 1998-2011
- 127 [그림 Ⅳ-15] 지역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 127 [그림 Ⅳ-16] 성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 128 [그림 Ⅳ-17] 연령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 128 [그림 Ⅳ-18]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 129 [그림 Ⅳ-19] 현행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 134 [그림 Ⅳ-20]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 분포: 2010
- 135 [그림 Ⅳ-21] 전산업과 보건복지산업의 월평균 급여액 비교: 1993-2009
- 136 [그림 Ⅳ-22] 사회복지시설 수 현황과 추이 비교: 2000-2010

141	[그림 V-1] 영역별 1일 생활시간구조의 변화: 2009
142	[그림 V-2]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충분도: 2010
142	[그림 V-3] 여가활동 참여율 및 희망률: 2010
143	[그림 V-4] 여가공간 이용률 및 희망률: 2010
144	[그림 V-5]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1일 평균 여가시간: 2009
145	[그림 V-6] 소득계층에 따른 휴가유무: 2010
146	[그림 V-7]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비율의 변화 : 2006-2010
146	[그림 V-8]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 2006-2010
150	[그림 V-9] 트위터 이용자수의 변화: 2010-2011
151	[그림 V-10]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경험: 2011
153	[그림 V-11] 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세대 분포: 2011
153	[그림 V-12]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인맥의 구성: 2010
154	[그림 V-13]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관계맺기에서의 자긍심: 2010
155	[그림 V-14]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사회적 이슈 관련 활동 참여 현황: 2010
155	[그림 V-15]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을 통한 타인과의 사적인 소통: 2010
159	[그림 V-16] 연도별 한국영화 제작 투자: 1996-2010
161	[그림 V-17] 연도별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2001-2009
162	[그림 V-18] 국내 10만 장 이상 판매 음반 추이: 2001-2009
163	[그림 V-19]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2000-2010
163	[그림 V-20] 영화산업 시장별 매출액: 2007-2009
163	[그림 V-21]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형태: 2005-2008
165	[그림 V-22] 전체 영화 관객 수와 한국영화 점유율: 2000-2010
166	[그림 V-23]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2007-2009
169	[그림 VI-1]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간 농도 증가량 추이: 1960-2005
170	[그림 VI-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1990-2007
172	[그림 VI-3] 전 세계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 1900-2010
172	[그림 VI-4] 자연재해 피해액의 증가추세: 1980-2011
181	[그림 VI-5] 한국인의 체감환경 변화 추이: 1997-2010
182	[그림 VI-6] 사회적 쟁점이 된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도: 2008, 2010
183	[그림 VI-7] 한국인의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용정도: 2001-2010
183	[그림 VI-8] 한국인의 친환경행동 참여정도: 1997-2008
189	[그림 VI-9] 에너지원단위 국가 간 비교: 2009
189	[그림 VI-10] 부문별 에너지소비: 1990-2010
190	[그림 VI-11]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비의 변화: 1983, 2008

목 차

- 191 [그림 VI-12] 산업 부문 업종별 에너지 소비: 1990-2009
- 191 [그림 VI-13]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원별 구성: 1981-2010
- 193 [그림 VI-14]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1990-2009
- 196 [그림 VI-15] 에너지원별 가격 변동: 1981-2009

알려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자들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I . 교 육

Education

교육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 김태헌	02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 서문희	15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 김경근	22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 김경근	35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 김한별	46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요 약

- 우리나라 30대의 평균 교육년수는 14.0년(대학 2학년 수료 정도)으로 높으며, 남녀의 평균 교육년수 차이는 1980년 2.1년에서 2010년에 0.2년으로 감소하였다. 대학진학률은 정부의 신규대학설립정책의 변화로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80%를 상회하였으며, 지금은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를 앞지르고 있다.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보다 많았다. 2009년에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각각 6.5명, 6.4명, 3.2명씩 많았다.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치보다 12-34%가 낮았다.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학교교육의 효과는 ① '지식 기술습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국가 및 사회관 정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②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③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으로 50%정도를 유지하였으나 학교시설과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30-40%에 불과하였다.
- 학령인구는 1980년대 초부터 크게 줄어든 출생아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시차를 두고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차 급감한 출생아수의 영향으로 2010년 전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단계적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개선노력에서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전쟁 후의 폐허가 된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가난하였지만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무한 투자를 한 부모세대의 교육에 대한 열성과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적

노력이 오늘의 교육부문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잉경쟁으로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인교육보다 지식교육 중심의 교과성적 일변도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우리의 사회를 바꾼 교육부문의 주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분야의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교육부문의 실태를 교육수준, 교육자원 및 교육효과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저출산현상이 지금과 미래의 교육현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교육수준의 변화와 특성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에 속해 있다. 중학교까지의 9년간 의무교육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수함으로써 완전취학률에 접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90% 이상의 취학률로 학교급별 취학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필요없을 정도가 되었다. 국민 교육수준의 신장을 평균 교육년수의 변화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지나 전문과정인 고등교육의 확산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평균 교육년수와 대졸이상 구성비의 변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하는 세대인 30-39세 청년층의 평균 교육년수의 변화를 보면(표 I-1), 1980년에 9.2년으로 30대 인구가 평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수준이었다.

그 후에도 평균 교육년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매 5년마다 약 1년씩 증가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평균 교육년수가 14.0년으로 우리나라 30대 인구는 평균 대학 2학년을 마친 정도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남자의 교육이 우선이었으므로 남자의 교육수준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1980년에도 명확하였다. 30대 남자인구의 평균 교육년수가 10.2년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8.1년으로 2.1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남녀 평균 교육년수의 차이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년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그 차이가 0.2년에 불과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자녀교육에서 성별 차이가 빠르게 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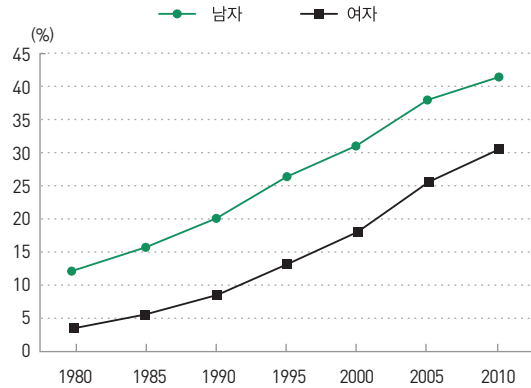
〈표 I-1〉 30-39세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의 변화: 1980-2010 (년)

연도	계	남자	여자
1980	9.2	10.2	8.1
1985	10.1	10.9	9.3
1990	11.1	11.8	10.4
1995	12.2	12.8	11.6
2000	12.9	13.2	12.5
2005	13.6	13.8	13.3
2010	14.0	14.1	13.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우리나라 성인(25세 이상) 인구의 7.7%(남녀 각각 12.0%, 3.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때인 1980년에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대학이상 교육을 받

[그림 I-1]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은 인구의 차이는 분명하였다. 남자인구 중에서 12.0%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데 비하여 여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3.6%만이 대학이상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성인의 대졸이상 인구의 구성비도 폭증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졌다. 성인의 대졸이상 인구 구성비는 30년 후인 2010년에 35.8%(남녀 각각 41.4%, 30.6%)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약 4명이 대졸자가 되었다(〈표 I-1〉 및 [그림 I-1]).

이렇게 대졸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남자는 지난 30년 동안 10명 중 1명에서 4명 이상이 되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30명 중에서 약 1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0명 중에서 3명이 대졸자가 되어 2010년에 성인 여자의 대졸구성비가 남자의 약 74%까지 육박하였다. 이렇게 성별 대졸비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의 수준에 접근하게 되고, 대학이상 취학률도 남녀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I-2). 25세 이상 성인 중에서 대졸이상 구성비의 남녀차이는 1980년에 8.4%p에서 1995년 13.5%p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8%p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녀별 대학진학률의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남자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성인의 대졸 이상 구성비의 성별차이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과 진학률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구성비 변화를 결정하는

〈표 I-2〉 고등교육기관¹⁾의 취학률과 진학률의 변화: 1985-2010

(%)

연도	취학률 ²⁾			진학률 ²⁾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85	22.6	28.7	16.1	36.4	38.3	34.1
1990	22.9	26.5	19.1	33.2	33.9	32.4
1995	35.9	40.1	31.4	51.4	52.8	49.8
2000	50.2	54.2	46.1	68.0	70.4	65.4
2005	61.8	65.0	58.3	82.1	83.3	80.8
2008 ³⁾	67.6	69.3	65.6	83.8	84.0	83.5
2010	67.4	68.5	66.2	79.0	77.6	80.5

주: 1)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 과정)이 포함됨.

2) 취학률=(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18-21세 인구)×100, 진학률=(고등교육기관 진학생수÷고등학교 졸업생수)×100

3) 2008년 자료는 진학률이 최고에 도달한 년도의 자료이며, 취학률은 2009년도 자료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지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과 해당 연령층(18-21세)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수의 비율인 취학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까지의 대학진학률은 30%대를 유지하였고, 취학률은 20%대 후반에 머물렀다(표 I-2).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진학률과 취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대학진학률이 1995년에 51.4%로 50%를 넘어섰고, 5년 후인 2000년의 취학률이 50%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대학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선택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립대학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졸자의 진학기회가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한 대학진학률은 2008년에 83.8%까지 상승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원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증가만 하던 진학률이 2010년에 79.0%로 80% 밑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극히 높은 고학력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표 I-3〉에서 2000년 이후 고3 학생수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을 비교하였다. 2000년과 2010년에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이 고3 학생수와 비슷(96-99%)하였으며, 2005년에는 오히려 고등교육기관 정원이 고3 학생수보다 21%나 많았다. 2005년에 고3인 학생은 1987-1988년생으로 출생아수가 약 65만 명에 불과하였던 시기이므로 역전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출생아수가 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년 이후의 출생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인 2010년대 후반에는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면, 앞으로 전 성인의 약 80%가 대졸자가 된다는 계산이다.

〈표 I-3〉 연도별 고3 학생수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비교: 2000-2010 (명, %)

연 도	고3 학생수(A) ¹⁾	고등교육기관 ²⁾ 입학정원(B)	B/A(%)
2000	743,490	713,275	95.9
2005	569,844	691,081	121.3
2010	649,515	641,554	98.8

주: 1) 고등학교는 일반계 및 기술계를 포함.

2)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대학, 기술대, 교육대 및 각종대를 포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대학교육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업이 이루어지고, 취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하면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전 국민의 약 80%가 대졸자가 된다는 것은 학력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3 학생수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이 비슷한 현상은 취학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85년에 22.6%의 취학률이 2000년에 50%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67%를 상회함으로써 우리나라 18-21세 총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표 I-2).

진학률과 취학률의 특징은 두 지표 모두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 외에 성별 차이가 빠르게 감소하거나 최근에는 오히려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5년에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하여 4.2%p나 낮았으나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8년에 0.5%p까지 접근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자의 진학률(80.5%)이 남자(77.6%)보다 오히려 2.9%p나 높았다. 성별 진학률의 역전 효과는 취학률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2008년 이후 취학률이 67%가 넘는 수준에

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취학률의 차이는 1985년에 12.6%p에서 2010년에는 2.3%p까지 감소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진학률이 여자에게서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수준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을 수 있고, 늘어나는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은 사회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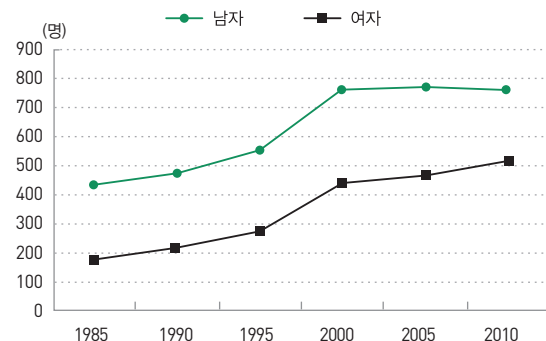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관련 지표의 변화는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림 I-2]에 의하면, 1990년 전후까지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녀 평균 약 3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0년 이후에는 평균 600명을 상회하였다. 1985년 여자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179명으로 남자 436명의 4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여자대학생수(513.7명)가 남자(767.7명)의 67%까지 접근하였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최근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대학취학률이나 대학생 수의 성별 차이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1995년 이후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대학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대학의 설립으로 학생 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교육자원(인적, 시설, 재정)의 변화와 특성

학교교육을 위한 자원은 교원과 시설, 그리고 재정을 포함한다. 교원의 확보와 자질의 관리의 질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여기에서는 교원의 수와 교사와 학생간 의사소통의 주요지표이고, 교수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동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대표하였다. 시설 자원은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건물의 면적, 교지의 면적, 체육장의 면적 등을 포함하였으며, 여기서는 학생 1인당 이용이 가능한 건물과 체육장의 면적을 주요지표로 사용하였다. 끝으로, 재정자원이 교육환경과 질의 관리에 중요하므로 정부의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교육예산(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교육의 발전지표로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자원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수준 또는 주요 국가의 지표와 비교하였다.

[그림 I-2] 인구 만명당 성별 대학생수¹⁾의 변화: 198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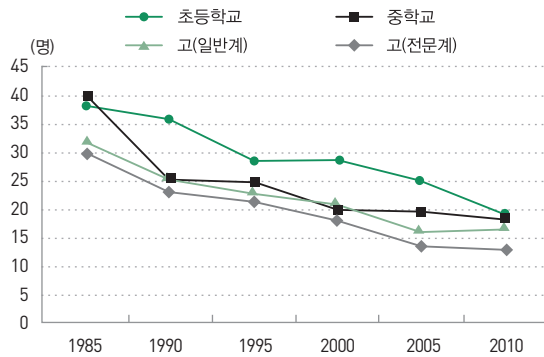
주: 1) 대학생수는 전문대, 일반대학, 교육대, 대학원의 재학생수를 포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41만 명이다(표 I-4). 1985년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수가 총 26만 6천 명이었으나 최근 25년 동안 학교급별로 각각 39.4%, 56.4% 및 81.8%씩 증가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같은 기간에 초등학교에서는 38.3명에서 18.7명으로 51.2% 감소하였으며, 중학교는 40.0명에서 18.2명으로 54.5%, 고등학교는 일반계의 경우 47.8%, 전문계의 경우 56.3%

[그림 I-3]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1985-2010



주 및 출처: <표 I-4> 참조.

씩 감소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85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약 4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 약 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I-4> 및 [그림 I-3]). 1980년대 후반에 중등교사의 증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5명으로 낮췄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35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 후 저출산¹⁾으로 초등학생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교원 1인당 학

생수는 2010년에 중학교의 경우와 비슷한 18명대로 낮아졌다. 그 동안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의 교원수와 학생수의 변동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일반계와 전문계가 각각 16.5명과 13.1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보다 낮아졌다. 국제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 2009년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우리나라보다 낮다(<표 I-5>).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3.2명이 많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그 차이가 6.4-6.5명으로 크다. 우리나라의 교사수 증가와

<표 I-5> OECD 국가의 교사¹⁾ 1인당 학생수의 비교: 2009 (명)

국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²⁾
OECD 평균	14.3	16.0	13.5	13.5
한 국	17.5	22.5	19.9	16.7
핀란드	11.2	13.6	10.1	16.6
독 일	13.6	17.4	15.1	13.9
일 본	16.3	18.6	14.5	12.2
미 국	13.2	14.8	14.3	15.1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만 포함.

2) 고등학교는 일반계 프로그램만 포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표 I-4> 학교급별 교원수¹⁾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1985-2010

연도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일반계)	고(전문계)
1985	126,785	69,553	69,546	38.3	40.0	31.6	30.0
1990	136,800	89,719	92,683	35.6	25.4	25.4	23.4
1995	138,369	99,931	99,067	28.2	24.8	22.1	21.4
2000	140,000	92,589	104,351	28.7	20.1	20.9	18.2
2005	160,143	103,835	116,411	25.1	19.4	15.9	13.5
2010	176,754	108,781	126,423	18.7	18.2	16.5	13.1

주: 1) 교원수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기간제 교원을 포함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1)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초에 더욱 빠르게 낮아지면서 1990년경부터 초등학교령인구도 빠르게 감소하였다(<표 I-11>참조). 1980년에 초등학교령인구가 550만 명이었으나 1990년, 2000년 및 2010년에는 각각 479만 명, 407만 명 및 328만 명으로 매 10년마다 70-80만 명씩 감소하였다.

학생수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OECD 국가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1인당 건물 및 체육장 면적

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은 1985년에 2.6㎡(중학교)에서 4.7㎡(전문계 고등학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0.2㎡(중학교)에서 18.0㎡(전문계 고등학교)로 약 3~4배나 증가하였다(표 I-6) 참조. 건물 면적의 증가는 교실, 실험실, 강당 등의 증축,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의 결과이며,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장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면적의 증가가 뚜렷하였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비슷하였거나 오히려 최근에는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995년까지 체육장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그 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초등학교 학생수의 급감으로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이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오히려 체육장 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물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시설의 확충과 학생수 감소의 영향이 크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과 건물의 증축은 체육장 면적의 감소원인이 된다. 신체와 정신적인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공교육비

교육비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지표로 보통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또는 정부예산 대비 공교육비 또는 교육예산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1985년에 약 2조 5천억 원이었으나 25년이 지난 2010년에 41조 6천억 원으로 16배나 증가하였다(표 I-7). 교육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하면,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이래 약 20%를 유지하고 있다. 1985년에 19.9%에서 1995년에 22.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19.6%로 감소하였다.

2008년 현재 미국의 달러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²⁾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우 각각 5,420달러, 7,931달러 및 9,081달러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733달러(24%), 1,041달러(12%), 4,636달

〈표 I-6〉 학생 1인당 건물 및 체육장 면적 추이: 1985-2010

(㎡)

연도	건물 면적				체육장 면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일반계)	고(전문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일반계)	고(일반계)
1985	2.9	2.6	3.6	4.7	12.4	8.5	10.1	10.0
1990	3.3	3.6	4.0	5.2	12.8	10.5	9.8	10.3
1995	4.7	4.1	5.4	6.3	15.0	10.1	11.3	11.0
2000	6.0	6.7	7.3	10.0	12.2	12.8	11.2	12.6
2005	7.9	8.5	11.3	16.0	12.4	12.2	12.6	16.5
2010	11.1	10.2	11.7	18.0	14.4	12.6	10.5	15.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I-7〉 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비율: 1985-2010
(10억 원)

연도	정부예산 ¹⁾ (A)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²⁾ (B)	
		금액	B/A
1985	12,532	2,492	19.9
1990	22,689	5,062	22.3
1995	54,845	12,496	22.8
2000	93,937	19,172	20.4
2005	134,370	27,982	20.8
2010	211,993	41,628	19.6

주: 1) 정부예산(2000년 이전)=일반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정부예산(2005년 이후)=일반회계+특별회계

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러(34%)나 적었다. 중등교육의 경우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기초교육인 초등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OECD, 2011).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교육비를 늘리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효과와 특성

취학률,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의 발달을 교육의 외형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질적인 면에서의 교육발전을 꾀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육효과로 세 가지 지표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교육효과에 대해 학생 각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과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 전공과 직업의

일치정도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논의하였다.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이며, 교육 부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3-4만 가구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기서는 2000년과 2010년, 10년간의 변화와 특성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교육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한 졸업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표 I-8〉에 수록하였다. 네 가지의 특성은 ‘지식과 기술습득’, ‘인격형성’, ‘생활 직업에 활용’ 및 ‘국가 및 사회관 정립’을 포함하였다. 2000년과 2010년의 학교급별 네 가지 특성에 대한 졸업생의 인식을 비교하였으나 10년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다만, 특성별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였고, 학교급별 졸업생의 인식도 10년간 분명한 차이가 지속되었다.

응답자의 40-50%가 ‘지식과 기술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인격형성’과 ‘생활 직업에 활용’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대체로 30-40%였으나 ‘국가 및 사회관 정립’을 위하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아 20-30%에 불과하였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반대로 ‘국가 및 사회관 정립’에서 가장 높았다.

2000년과 2010년의 조사에서 학교교육은 ‘지식과 기술습득’ 위주의 교육에 효과가 있었으며, ‘생활 직업에 활용’ 면도 ‘지식과 기술습득’ 면 보다 낮았다. 더욱이 ‘인격형성’이나 ‘국가 및 사회관 정립’과 같은 가치태도형성면의 교육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네 가지 특성에서 모두 학교급에 관계없이 그 수준이 유사하였으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수]÷PPP

단, 경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PPP는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임.

〈표 I-8〉 학교교육의 효과여부¹⁾: 2000, 2010

(%)

연도 및 학교급	지식 기술습득		인격형성		생활 직업에 활용		국가 및 사회관 정립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00								
초졸 이하	51.1	5.9	36.6	14.6	33.0	16.3	25.8	15.4
중졸	49.6	10.5	33.9	22.8	28.5	25.1	22.9	25.0
고졸	46.7	11.9	30.2	26.3	25.6	29.6	21.1	28.7
대졸 이상	47.6	13.9	29.1	32.6	26.2	35.2	21.8	34.0
2010								
초졸 이하	48.8	7.7	40.1	12.0	38.5	13.0	31.0	13.7
중졸	46.1	12.5	35.9	19.6	32.5	21.3	26.5	23.1
고졸	43.9	14.6	31.8	22.3	29.6	25.5	23.5	27.1
대졸 이상	50.1	13.9	34.6	25.4	34.3	26.8	27.8	30.2

주: 1)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매우 효과있음-전혀 효과없음)로 측정한 내용 중 '매우 효과있음과 약간 효과있음'을, '별로 효과없음과 전혀 효과없음'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나 '없다'의 경우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았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이 '인격형성'이나 '생활 직업에 활용', '국가 및 사회관 정립' 등에 관한 교육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더욱이 '지식 기술습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지식 기술습득' 분야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했으며, 나머지 세 분야에서는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의 효과가 낮아졌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가장 적은 그룹은 고졸자로서 네 가지 전 분야에서 다른 학교급 졸업자에 비하여 낮았다. 대학진학을 위해

많은 공부시간을 보낸 고졸자가 지식 기술습득을 위한 학교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격형성과 취업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취업과 연계되는 전공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의 일치성을 〈표 I-9〉에 정리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4년제 미만과 이상 포함) 졸업자의 경우를 비교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정도가 높았지만 50%를 넘지 못하였

〈표 I-9〉 학교급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¹⁾ 추이: 2000, 2010

(%)

연도 및 학교급	계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관계없는 편	전혀 관계 없음
2000						
전문계 고졸	100.0	3.1	14.3	25.9	30.8	25.8
대졸(4년제 미만)	100.0	14.0	21.8	21.5	23.8	18.9
대졸(4년제 이상)	100.0	20.2	25.1	21.6	20.7	12.3
2010						
전문계 고졸	100.0	4.0	14.4	23.2	36.2	22.2
대졸(4년제 미만)	100.0	13.8	21.4	26.4	24.1	14.3
대졸(4년제 이상)	100.0	18.9	26.8	24.6	19.5	10.1

주: 1)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과 전공이 서로 관계없는 경우가 50%를 상회하였으며, 대졸자의 30-40%가 취업과 전공이 관계없다고 답하였다.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졸자 등 모두 큰 변동이 없었다. 최근 정부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전문계 고졸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현상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제 이상 대졸의 경우 비교적 일치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매우 일치한다는 응답이 2000년에 20.2%에서 2010년에 18.9%로 줄어들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낮은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교육적 낭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은 학교생활의 만족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표 I-10>에 정리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분야별로 만족의 수준은 다르지만 지난 10년간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대학 재학생의 경우 만족도의 상승이 뚜렷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10년에 43.1%가 만족하여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재학의 경우 10년 전의 42.2%에서 48.5%로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것은 대학입시준비의 부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 만족도는 교우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았다. 교우관계의 만족도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낮아졌으며, 반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올라갔다. 교육내용과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지만,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는 그 변화가 분명하지 않았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표 I-10> 학교급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¹⁾: 2000, 2010

(%)

연도 및 학교급	학교생활 전반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 관계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2000										
중·고등학생	40.7	14.8	27.4	22.2	21.3	44.0	69.7	3.0	37.2	16.0
대학생	42.2	10.9	35.3	18.1	25.3	37.3	65.1	4.6	34.7	14.7
2010										
중·고등학생	43.1	7.2	40.1	12.3	31.3	26.5	70.2	3.0	43.2	9.5
대학생	48.5	6.9	50.9	8.6	35.2	20.4	67.2	4.6	42.8	9.6

주: 1)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만족-매우 불만족)로 측정한 내용 중 '매우 만족과 만족'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경우 여전히 40%만이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학교시설의 경우도 여전히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이 낮을 때 만족도가 높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교우관계 만족도도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전히 50%를 하회하는 교사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인구변동과 교육부문 변화의 관계

학령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전체 학령(6-21세)인구는 1980년에 14,401천 명(총인구의 37.8%)으로 최대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년 후인 2010년 현재 총인구 중 20.3%인 10,012천 명이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 2060년 총인구 중 11.1%인 4,884천 명으로 지금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표 I-11). 초등학교 학령(6-11세)인구는 197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3,276천 명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 1,805천 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도 유사하지만 감소가 시작하는 시기가 연령에 따라 점차

늦어지고 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1980년에 각각 2,599천 명과 2,671천 명으로 가장 많은 후 감소하며, 대학교의 경우 1990년의 3,663천 명부터 감소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1955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지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지나면서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다만, 정부에서 출산억제를 위한 무상지원이 중단된 1990년대 초부터 4-5년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학교급별 학령인구는 2000년이 지나면서 감소폭이 둔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별 학령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나고 나면 인구의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학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이 100%에 접근하고, 학령인구는 곧 학생수를 결정하므로 학령인구의 변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건물면적 등은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2010년의 초·중학교 교원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2020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금보다 초·중학교 별로 각각

〈표 I-11〉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변화: 1970-2060

(천 명, %)

연도 및 학교급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60
학령인구 (6-21세)	12,604	14,401	13,361	11,383	10,012	7,757	7,116	4,884
(총인구대비)	[39.1]	[37.8]	[31.2]	[24.2]	[20.3]	[15.1]	[13.6]	[11.1]
초등학교 (6-11세)	5,711	5,499	4,786	4,073	3,276	2,719	2,663	1,805
중 학교 (12-14세)	2,574	2,599	2,317	1,869	1,974	1,359	1,333	906
고등학교 (15-17세)	2,101	2,671	2,595	2,166	2,090	1,370	1,324	910
대 학교 (18-21세)	2,218	3,632	3,663	3,275	2,672	2,308	1,796	1,26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8.0%와 27.5%가 감소하여 지금의 교사 1인당 학생수인 18.7명과 18.2명에서 각각 15.5명과 13.2명으로 줄어든 것이며, 이것은 2009년 현재 OECD 평균(초등 16.0명, 중등 13.5명)보다 낮아지게 되며(〈표 I-4〉 및 〈표 I-5〉),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와 가까운 장래 학령인구의 변동(주로 감소)에 따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교육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별 인적, 시설자원의 차이

저출산과 인구이동은 학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표 I-12〉 지역별 초등학교 교원¹⁾ 및 시설자원 비교: 2010
(명, m²)

시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생 1인당	
		건물 면적	체육장 면적
서울	19.3	9.0	6.7
부산	18.0	12.0	9.1
대구	19.2	10.3	9.8
인천	19.3	10.0	7.5
광주	20.8	10.2	7.0
대전	19.6	11.1	7.6
울산	19.5	12.0	9.7
경기	21.0	9.7	9.7
강원	15.3	15.1	36.8
충북	17.7	12.5	25.6
충남	16.3	13.9	27.5
전북	16.0	14.8	28.5
전남	15.0	16.6	36.5
경북	15.9	13.6	34.0
경남	18.1	11.8	15.5
제주	18.6	11.3	16.9

주: 1) 교원수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기간제 교원을 포함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0.

3) 기준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일정할 때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임. 합계출산율이 2.1명보다 높으면 장래인구는 증가하고, 낮으면 감소하게 됨.

미쳤다. 우선 198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³⁾이 2명 밑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취학 아동수는 감소하였고, 주로 젊은 연령층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으로 지역별 취학아동의 수가 급격히 차이가 커지면서 학교 교육의 인적자원과 시설자원의 지역별 차이가 커졌다. 〈표 I-12〉에서 시도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건물과 체육장의 면적을 비교하였다. 7개 대도시와 인구집중이 가장 심한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약 2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도의 경우 모두 19명 미만이고, 강원, 전남, 경북 등에서는 16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건물과 체육장 면적의 경우 대도시(경기 포함)와 도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였다. 대도시의 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은 9-12m²이지만 도의 경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12m²를 크게 상회하고, 특히, 체육장의 경우는 도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학교별 학생수 감소의 결과이며, 학생수가 극히 줄어들 경우 통폐합으로 학교수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교육수준, 교육자원 및 교육효과의 변화, 특성(성, 학교급 등)별 차이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정도를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부문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먼저 인구변동을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노력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과 함께 앞으로의 낮은 출산율의 지속은 학교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교육환경이 학생수의 감소로 자연히 개선된다는 계산으로 지금의 뒤떨어진 교육환경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의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투자가 멀지않은 장래에 과잉투자로 나타나는 것도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다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공교육 효과의 제고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정도가 응답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대학의 전공과 졸업 후의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도 반을 넘지 못하였다. 학교교육이 인격이나 사회관과 같은 가치와 태도형성에 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비교적 큰 부분이 지식과 기술습득이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교육년수의 증가와 같은 교육의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사회성원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지식과 가치를 포함한 학교교육의 효

과를 높이는 교육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의 조정과 취업의 고려이다. 중·고등학교까지의 완전 취학은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지만 극도로 대학진학률이 높으면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취업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5년 이후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었다.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진학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전공과 직업과의 일치율을 높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으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계속 되는 것도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대학 전공과 직업의 일치, 여성취업의 활성화 등은 앞으로 교육부문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교육

요 약

- 2010년 현재 아동의 65.7% 정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은 각각 10.7%, 23.4% 정도이다.
- 장학지도, 평가(인증)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기관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모들의 1/5은 주변에 보낼만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질적 수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좋지 않다.
- 2004년 이후 보육·교육 비용 지원 확대 정책으로 소요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OECD 권고 수준인 GDP의 1%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2년부터 취학 직전 1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의 개발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왔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 수준을 제고해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인간에 대한 투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외국의 종단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 이 글은 최근 미취학 아동 교육(보육) 정책을 교육(보육)기관 설치와 운영, 이용자 만족과 요구, 이용 비용 지원 및 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취학 아동 교육(보육)기관 설치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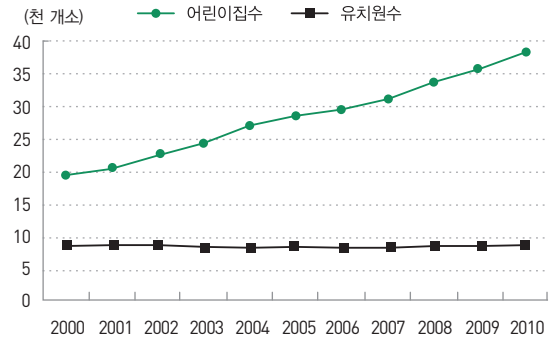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미취학 아동 교육과 보육기관이 연령이 중복된 채 이원화된 국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기 다른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 주무 부처도 다

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보호와 교육이란 기능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었으나 해방이후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법령에 의해 규정됨으로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육시설은 보호기관으로 이분화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다른 체계를 갖추면서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기능을 우선하면서 장시간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오전반 중심의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부모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두 기관의 서비스 기능은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에서 종일제 운영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보육시설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도입, 초등학교 연계의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면서 두 기관의 서비스 기능은 점점 유사해지는 추세이다.

어린이집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고, 특히 2004년 이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없이는 출산 수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미취학 아동 교육(보육) 지원을 주요한 저출산 대책 수단으로 간주하고 투자를 늘려 왔다.

[그림 I-4]는 최근 10여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2월 현재 38,021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치원 수는 최근 수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4월 현재 유치원 수는 8,388개소이다.

[그림 I-4] 연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증가 추이: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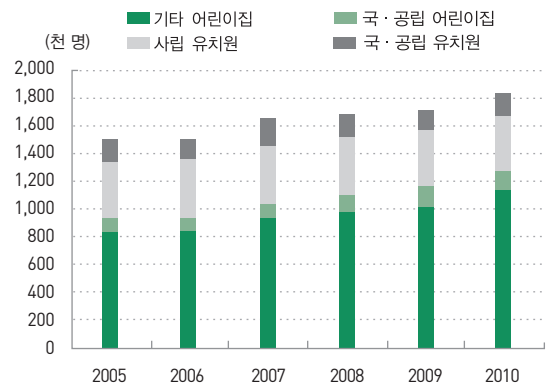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그림 I-5]는 2005년 이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수의 변화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2010년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각각 126만여 명, 53만 8천여 명으로 모두 179만 7천여 명이다. 이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전체 아동 약 273만 5천여 명 중 65.7%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공급은 국·공립 비율은 낮고 민간 개인이 주를 이룬다.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이 50%를 넘지만 주로 초등학교 병설로

[그림 I-5] 연도별 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증가 추이: 2005-20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설치되어 소규모이기 때문에 3~5세 유치원 이용 아동의 23.4% 정도만을 교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수는 5.3%에 불과하고 보육 아동의 10.7% 정도만을 보육한다. 미취학 아동 부모들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기를 희망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 부담과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들의 반대로 확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6]에는 2004년과 2010년 연령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을 제시하였다. 지난 수년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2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이 0세아는 4.8%에서 27.9%, 만 1세아는 15.0%에서 51.7%, 만 2세아는 34%에서 71.2%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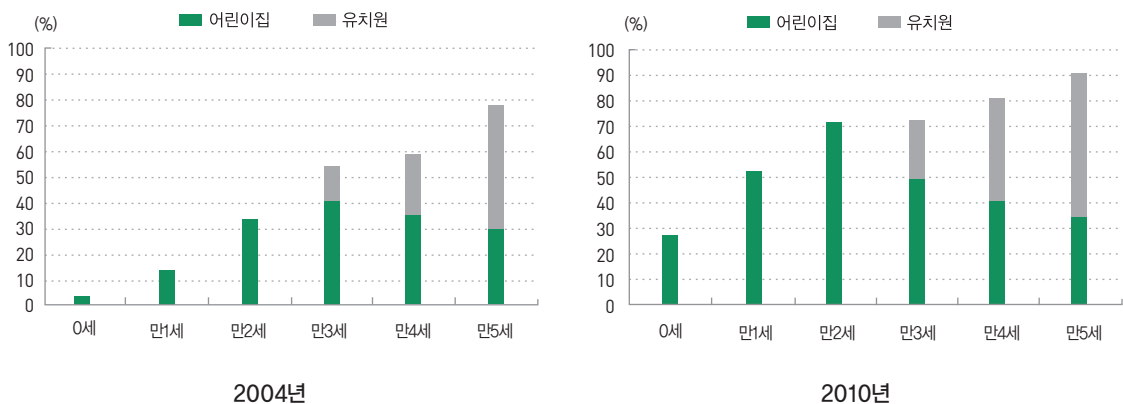
아동은 대체로 만 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만 3세가 되면 유치원 이용은 증가하고 어린이집 이용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만 5세가 되면 유치원 이용률이 보육시설 이용률을 넘게 된다. 3세 이상 전체 아

동의 81%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닌다. 만 5세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90.5%인데,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으므로, 실제 아무 곳도 다니지 않는 아동은 4.4%로 파악되었다. 2008년 OECD 25개국 평균 기관 이용률이 58.2%임을 볼 때(OECD, 2011)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의 기관 이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취학 아동 교육·보육은 각각 법으로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의하여 실시된다. 유아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언어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표현, 자연탐구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이 질 높은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 및 지방 교육청에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장학을 실시하며 2008년에는 유치원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011년 4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0%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그림 1-6] 연령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2004, 20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교육(보육)기관 이용자 만족과 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의 약 1/5은 주변에 아동을 보낼만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한다(표 1-13). 이는 양적으로 교육·보육기관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보육) 수준도 많이 높아졌으나 이보다는 부모들의 기대가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9년에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전체의 5점 만점 평균은 유치원 3.72점, 보육시설 3.68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04년 동일한 13개 항목 조사결과인 유치원 3.64점, 보육시설 3.58점에 비하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어린이집은 국·공립 3.73점, 민간 3.61점이고, 유치원은 국·공립 3.80점, 사립 3.69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보다 높았다.

항목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용, 주변환경 및 부모 관

〈표 1-13〉 미취학 자녀를 보낼만한 교육기관 여부: 2009

구분	(% , 명)				
	없음	1-2곳	많음	잘모름	계
유치원	21.5	54.3	9.7	14.5	100.0(2,351)
보육시설	20.7	57.2	11.9	10.2	100.0(2,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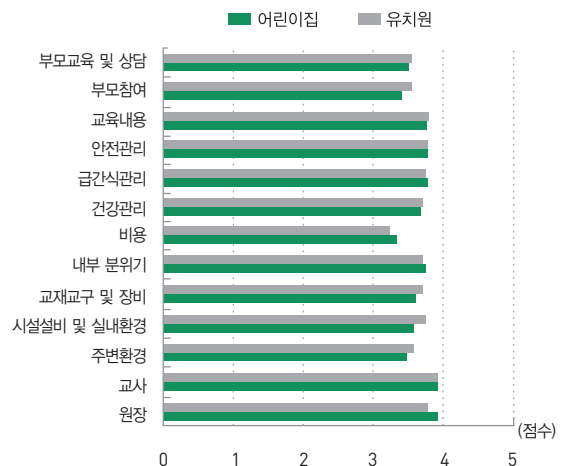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2009.

련 만족도가 낮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주변환경, 시설설비의 순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부모서비스, 교육내용, 건강관리, 시설설비, 주변환경에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원장, 내부분위기, 급간식에서 유치원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다(그림 1-7).

항목별 만족도를 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원장, 교사, 실내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와 급간식, 안전관리 등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이었다. 한편 비용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자는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유치원 이용부모의 비용 만족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보육료·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증가한 데 반하여,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은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비용 지원 수준이 낮은 데서

〔그림 1-7〕 항목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¹⁾: 2009



주: 1)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평균값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2009.

〈표 I-14〉 미취학 아동 가구에서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¹⁾: 2009

(%, 명)

구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유아 교육비 지원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 향상	육아정보 · 상담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제도 정착·확대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전체
전체	12.4	41.4	18.3	6.6	0.5	12.5	5.6	2.6	0.2	100.0(2,547)
영아	12.3	40.9	18.9	6.3	0.5	12.1	6.3	2.6	0.1	100.0(1,562)
유아	12.6	42.2	17.3	7.1	0.5	13.0	4.5	2.5	0.3	100.0(984)

주: 1)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2009.

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현금 지원 18.3%, 보육의 다양성 확대 12.5%, 국·공립기관 확충 12.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10% 미만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표 I-14).

미취학 아동 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및 재정

2004년 이후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미취학 아동 보육료와 교육비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되어 2011년부터는 미취학 아동가 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80만원 이하이다. 이 기준은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도 전액 지원 대상이다. 이러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87만 9천여 명이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종일반비를 2009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월 3만원, 사립 유치원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실제 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부모 비용 지원 이외에 국·공립 기관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영아보육시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2011년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교육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유아교육 예산이 1조 9,240억 원이고,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2조 4,780억 원이다. 각각 2005년 대비 3.0배, 4.1배로 증가하였다(표 I-15). 보육예산은 지방 정부 부담금까지 합하면 5조가 조금 넘는 규모이다.⁴⁾

4) 국고 지원 보육사업 예산의 국고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49:51 정도임.

〈표 1-15〉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1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아교육	637,790	824,220	947,754	1,012,089	1,235,852	1,529,272	1,923,903
보육(국고) ¹⁾	600,091	791,008	1,043,474	1,468,370	1,704,840	2,127,510	2,478,380

주: 1) 보육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방정부보담금은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2009-2010 유아교육연차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개요, 2009-20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개요, 2005-2006, 200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07.

이는 이러한 예산을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유아교육예산이 0.17%,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0.22%이다. 보육 지방정부 부담금을 포함하여도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이 권고하는 GDP 대비 비율 1%(OECD, 2006)에는 못 미친다.

한편, 초등 이상 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미취학 자녀에게도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미취학 아동 사교육은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미취학 아동 사교육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특기적성 교육 형태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이외 학원, 방문학습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특별활동을 받는다는 비율은 58% 정도 되고, 아동에 따라서는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며 월 평균 4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 차이가 커서 강남구 어린이집의 경우 28만원까지 수납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은 특히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확대된 것으로, 부모들의 자녀 조기교육 요구 충족 및 교육의 편리성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상 필요성, 그리고 특별활동 강사 파견 업체라는 세 집단의 요구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외에 시간제 특기학원이나 보습학원에 다니는 아동이 영아 14.3%, 유아 51.5%에 이르고, 비용은 영아는 월 56,000원, 유아는 10만 원 정도이다. 또한 학습

지, 교재교구 방문교육도 영아 9.9%, 유아 47.5%가 이용하는데 이 비용도 월 평균 5-6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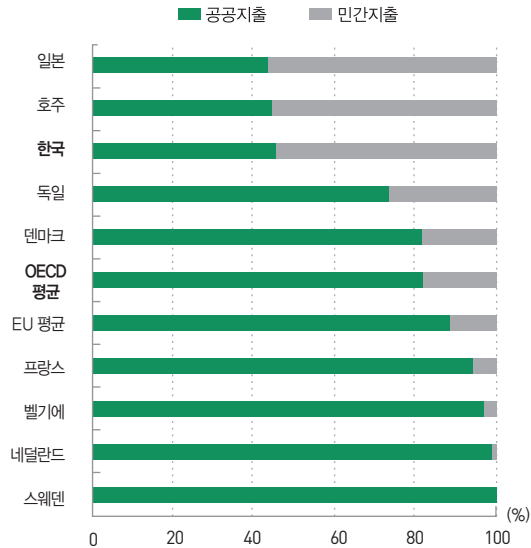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나친 특별활동이 아동 발달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보급한다. 보건복지부도 24개월 미만의 영아 특별활동은 금지하며, 유아에 대해서는 오후 일과 시간대에 허용하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8]은 2008년 OECD 각 국가들의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의 공공 및 민간 지출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비율은 45% 수준으로, OECD나 EU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취학 직전 아동 교육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만 5세의 어린이에게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도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아동은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 적용받게 될 것이고, 부모들은 비용 부담 완화로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나가서 후속

[그림 1-8] 취학 전 교육(3세 이상) 비용의 공공, 민간 지출 비율 국제 비교: 2008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자녀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 현재 소

득 하위 70%의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데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저출산 국가로, 출산수준을 제고하고 태어난 아동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출산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다.

재정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이다. 아직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수준은 OECD 권고 수준에 미달되지만, 앞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갈 지가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된다.

참고문헌

- OECD, 2006, *Start Strong II*.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요 약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단히 낮고 고등학교는 그보다 높은 편인데, 특히 전문계고의 학업중단율이 높다.
- 한국 대학생의 학업중단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고, 성별 및 전공계열별로 학업중단율에 가시적인 차이가 있다.
-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미미하나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이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거나 제적되는 것을 일컫는다. 서구에서는 이 같은 학업중단에 대해 사회적·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아온 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간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 한국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OECD 국가의 중등학교 중도탈락률은 20% 내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yche, 2010).

그런데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1990년대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초·중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점증하기 시작해 2006-2008년에는 1.2%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8만 명 대를 유지하던 학업중단자수도 2006년 이후에는 9만 명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비율 자체는 미미한 실정이지만,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떠나고

있는 현실은 학업중단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울러 국내 제도권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응에 실패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학업중단의 실태와 배경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실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업중단 문제가 주로 초·중등학교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대학생의 휴학 및 중퇴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는 바, 대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들과

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학업중단의 상대적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제도적으로 제적이나 중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학업 유예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기존 분류에 2005년도부터 별도로 조사된 유학·이민자를 포함하여 학업중단자를 산출하였다.

〈표 I-16〉에 제시된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실태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1980년대에는 1~4천 명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 34,819명으

〈표 I-16〉 연도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명, %)

연도 ¹⁾	학업중단자 ²⁾	학업중단율 ³⁾					
		전체	성별		지역 규모 ⁴⁾		
			남	여	서울	광역시	기타 시·도
1981	4,437	0.08	0.08	0.08	0.20	0.06	0.05
1988	1,766	0.04	0.04	0.03	0.10	0.02	0.02
2000	14,734	0.37	0.40	0.33	0.61	0.31	0.31
2005	28,176	0.70	0.73	0.67	1.16	0.54	0.63
2006	34,819	0.89	0.92	0.85	1.58	0.66	0.77
2007	31,656	0.83	0.86	0.79	1.38	0.65	0.74
2008	27,498	0.75	0.77	0.72	1.41	0.53	0.65
2009	20,101	0.58	0.60	0.56	1.16	0.40	0.48
2010 ^{5), 6)}	36,062	1.09	-	-	2.29	0.76	0.89

주: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함.

2) 1981-2000년 학업중단자는 취학유예자를 의미하며, 2005년 이후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사망자 제외)와 유학·이민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3) 초등학생 학업중단율=(초등학생 학업중단자수÷전체 초등학생수)×100

4) 재적학생수 산출과 학업중단자수 산출 시 동일한 지역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81년 7월 1일자로 광역시(구 직할시)로 지정된 대구, 인천은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수 산출에서는 각각 경북, 경기도에 포함되었고, 1989년 1월 1일자로 지정된 대전은 1988학년도 학업중단자수 산출에서는 충남에 포함되었음.

5) 교육통계연보자료 집계 시 초등학생의 미인정 유학은 2009학년도까지는 유예 및 면제자에 포함되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유학·이민자로 분류됨. 이 같은 통계작성 지침 변경으로 2010학년도 자료에서 미인정 유학자는 유예 및 면제자와 유학·이민자에 중복 포함되어 학업중단자수와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6) 2010학년도 자료에서는 유학·이민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지 않아 성별 학업중단율 산출이 불가능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0년에 이례적으로 학업중단자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유학·이민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 및 면제자로 분류되었던 미인정 유학생들이 2010학년도부터 유예 및 면제자와 유학·이민자에 중복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0년대에 비해 출산을 감소로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자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할 개연성이 높아져 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 학업중단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수년 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개연성이 이전보다 높게 나타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현상은 2005년부터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자료에 이민·유학이 포함되기 시작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2000년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학업중단이 크게 늘어났지만,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이탈하는 것은 대단히 드물게 발생하는 일임을 방증한다.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둘 만큼 문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 중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관되게 학업중단율이 높았

다. 이처럼 서울에서 학업중단율이 특히 높은 것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도한 경쟁적 풍토와 학업중시 성향이 서울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표출되고, 다른 지역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한 교사-학생 관계 등이 더해지면서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근자에는 조기유학이 초등학교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는데, 이 같은 조기유학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고학력·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실도 서울의 높은 학업중단율에 일조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학생의 학업중단

〈표 I-17〉에는 중학생의 학업중단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는 2004년부터 전면 의무교육으로 지정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제적·중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4년부터 중학생의 학업중단은 제적·중퇴가 아닌 학업유예 및 면제를 의미한다. 한편 이민·유학의 경우에는 2004년 이전 자료에서는 제적·휴학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유예·면제와 별도로 조사된 이민·유학자를 학업중단자에 포함시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중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면, 규모면에서 1981년에 37,037명이었던 학업중단자는 이후 하향 추세 속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2년에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학업중단율은 지난 30여 년 동안 1% 안팎에서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학업중단자가 감소했음에도 학업중단율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그간 중학교 학령기 인구가 감소했음을 시

〈표 1-17〉 연도별 중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명, %)

연도 ¹⁾	학업 중단자 ²⁾	학업중단율 ³⁾					
		전체	성별		지역 규모 ⁴⁾		
			남	여	서울	광역시	기타 시·도
1981	37,037	1.44	1.51	1.37	1.37	1.64	1.44
1990	22,348	0.98	1.13	0.83	0.97	0.86	1.04
1995	23,938	0.96	0.98	0.95	1.11	1.01	0.88
2000	18,810	1.01	0.99	1.04	1.59	0.87	0.87
2002	15,753	0.86	0.87	0.84	1.45	0.70	0.72
2004	18,538	0.96	0.98	0.94	1.59	0.73	0.85
2006	22,824	1.10	1.12	1.07	1.87	0.81	0.98
2008	22,536	1.11	1.10	1.12	1.75	0.88	1.01
2010 ^{5), 6)}	27,093	1.37	-	-	2.17	1.12	1.24

주: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함.

2)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는 중퇴·휴학자를 의미하며, 1990학년도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를 지칭함. 사망자를 구분할 수 있는 1995학년도 이후 자료에서는 사망자가 제외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1995-2002학년도 자료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하여 산출하였고, 중학교 교육이 전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2004년 이후 자료는 취학유예 및 면제자(사망자 제외)에 유학·이민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3) 중학생 학업중단율=(중학교 학업중단자수÷전체 중학생수)×100

4) 재적학생수 산출과 학업중단자수 산출 시 동일한 지역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81년 7월 1일자로 광역시(구 직할시)로 지정된 대구, 인천은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수 산출에서는 각각 경북, 경기도에 포함되었음.

5) 교육통계연보자료 집계 시 중학생의 미인정 유학은 2009학년도까지는 유예 및 면제자에 포함되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유학·이민자로 분류됨. 이 같은 통계 작성 지침 변경으로 2010학년도 자료에서 미인정 유학자는 유예 및 면제자와 유학·이민자에 중복 포함되어 학업중단자수와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6) 2010학년도 자료에서는 유학·이민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지 않아, 성별 학업중단율 산출이 불가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사한다. 한편 학업중단율 추이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 보면 2002년 이후에 미세하나마 일관되게 학업중단율이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합류한 중학생들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기유학을 떠난 중학생수는 1995년 1,200명, 2000년 1,799명 수준에 머물다가 2005년 6,670명, 2008년 8,888명으로 크게 증가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업중단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성차가 뚜렷해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남녀 간에 일관된 차이가 관찰되지 않고 때로는 여학생의 중단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적·중퇴 또는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사, 품행, 부적응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같은 품행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최근에 목도되는 학업중단은 교육적 견지에서 조기유학이나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적 견지에서 비롯된 학업중단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학업중단의 성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규모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생 역시 지난 십여 년 동안 일관되게 서울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광역시와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각각 0.87%이었던 반면, 서울은 1.59%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양상은 2006년 자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광역시와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각각 0.81%, 0.98%를 보인 반면, 서울은 1.87%로 이들 지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울이 여타 지역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학업중단 사유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민·휴학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부적응이 서울 지역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앞서 지적한 것처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적·중퇴·휴학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제적·중퇴·휴학을 일컫는 통상적 의미의 학업중단은 고등학교 자료를 통해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았다. 학업중단은 고교 계열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계와 전문계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I-18>과 [그림 I-9]에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실태와 그 사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자는 1981년과 1990년에는 그 규모가 2만 명을 넘지만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1만 명대에 머물며 증감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학업중단자수

<표 I-18> 연도별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명, %)

연도 ¹⁾	학업중단자 ²⁾	학업중단율 ³⁾					
		전체	성별		지역 규모 ⁴⁾		
			남	여	서울	광역시	기타 시·도
1981	26,270	2.61	3.31	1.68	2.19	1.91	2.83
1990	27,649	1.88	2.43	1.17	1.59	1.41	2.25
1995	17,218	1.38	1.68	1.02	1.27	1.15	1.57
2000	18,635	1.41	1.58	1.22	1.84	1.07	1.37
2002	16,880	1.38	1.48	1.28	1.71	1.10	1.39
2004	14,915	1.21	1.26	1.15	1.56	1.00	1.16
2006	19,846	1.55	1.67	1.41	1.98	1.31	1.50
2008	22,592	1.59	1.74	1.43	1.89	1.30	1.63
2010 ⁵⁾	25,951	1.73	-	-	2.33	1.40	1.69

주: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함.

2)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는 중퇴·휴학자를 의미하며, 1990학년도에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를 지칭함. 사망자를 구분할 수 있는 1995학년도 이후 자료에서는 사망자가 제외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1995~2002학년도 자료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하여 산출하였고, 2004년 이후 자료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사망자 제외)에 유학·이민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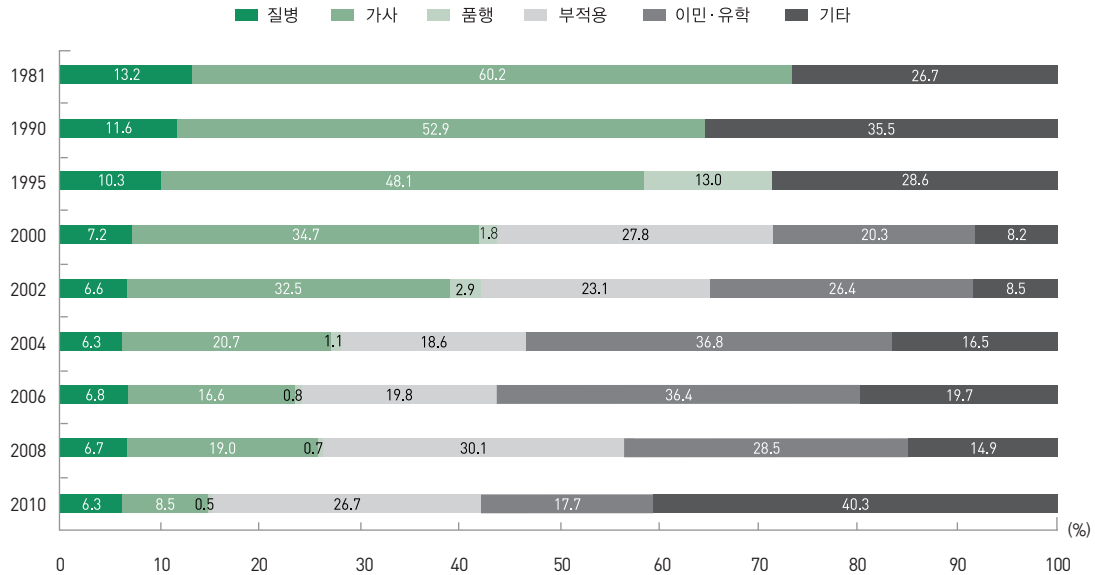
3) 일반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일반계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수÷전체 일반계 고등학생수)×100

4) 재적학생수 산출과 학업중단자수 산출 시 동일한 지역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81년 7월 1일자로 광역시(구 직할시)로 지정된 대구, 인천은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수 산출에서는 각각 경북, 경기도에 포함되었음.

5) 2010학년도 자료에서는 유학·이민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지 않아, 성별 학업중단율 산출이 불가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I-9]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1981-20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는 2004년에 14,915명으로 저점에 도달한 후에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학업중단자의 증가에 따라 학업중단을 역시 2004년에 1.2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에 점증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에 학업중단자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해외유학,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일반계고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1990년대까지는 대도시에 비해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 서울의 학업중단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가 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그림 I-9]에 제시된 학업중단 사유에 관한 시계열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체 학업중단자 가운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1990년까지는 자료의 제약으로 학업중단 사유가 질병, 가사, 기타의 3가지로만 분류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 품행이 추가되었고 2000년부터는 부적응, 유학·이민이 더해져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9]에 제시된 것처럼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한 학업중단의 경우에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과 같은 ‘가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0년도 이전에는 일반계고 학업중단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사’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대도시보다 기타 시·도에서 더욱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

해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최근에 발생하는 학업중단은 이전과 달리 경제적 형편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학교부적응이나 해외유학, 대안학교 진학 등 교육 관련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기타 시·도보다는 서울 지역에서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I-19>와 [그림 I-10]에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실태 및 그 사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 학생은 대체로 1%대의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반면 전문계고 학생은 그 비율이 3~4%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이 집안 형편, 학교부적응 등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시계열적 관점에서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4%가 넘는 상당히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다가 2002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04년에는 2.89%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렵에 도입된 ‘실업계 특별전형’과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03년에 당시 참여정부는 실업계 학생들을 대학입시에서 우대하는 이른바 ‘실업계 특별전형’을 200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

<표 I-19> 연도별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1981-2010

(명, %)

연도 ¹⁾	학업 중단자 ²⁾	학업중단율 ³⁾					
		전체	성별		지역 규모 ⁴⁾		
			남	여	서울	광역시	기타 시·도
1981	31,516	3.86	4.75	2.69	2.86	4.73	3.96
1990	26,216	3.23	4.73	1.90	2.56	2.97	3.63
1995	35,629	3.91	4.98	2.95	4.38	3.96	3.69
2000	32,896	4.40	5.20	3.57	6.09	4.24	4.01
2002	21,315	3.70	4.01	3.37	4.71	3.53	3.54
2004	14,863	2.89	3.14	2.60	4.12	2.64	2.71
2006	15,681	3.17	3.43	2.87	3.88	3.03	3.07
2008	18,686	3.83	4.21	3.39	3.88	4.30	3.62
2010 ⁵⁾	17,732	3.80	-	-	3.28	4.37	3.68

주: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함.

2)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는 중퇴·휴학자를 의미하며, 1990학년도에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를 지칭함. 사망자를 구분할 수 있는 1995학년도 이후 자료에서는 사망자가 제외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1995-2002학년도 자료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하여 산출하였고, 2004년 이후 자료는 제적·중퇴 및 휴학자(사망자 제외)에 유학·이민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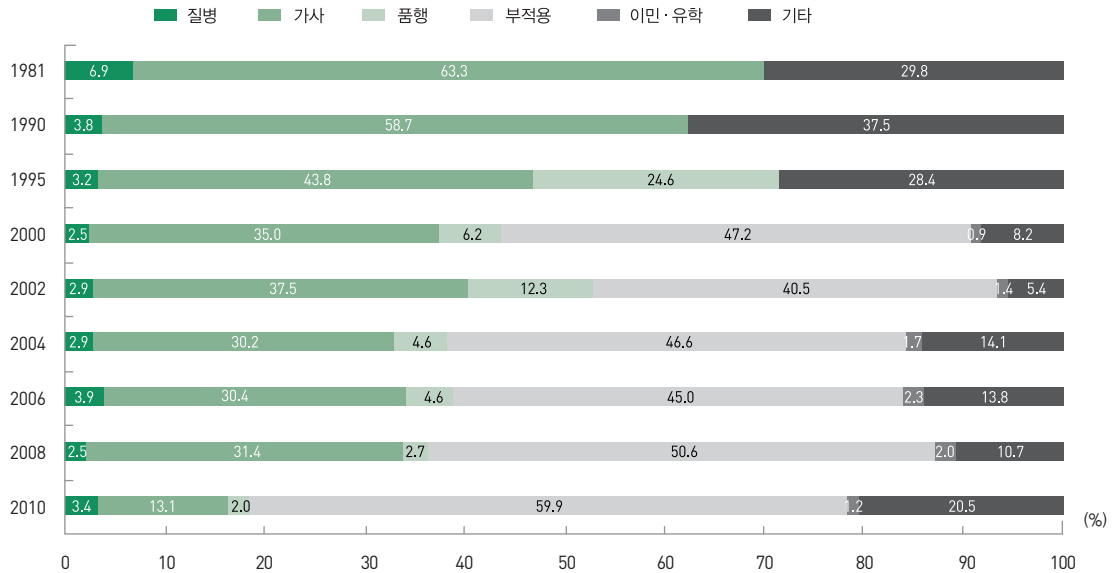
3) 전문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전문계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수÷전체 전문계 고등학생수)×100

4) 재적학생수 산출과 학업중단자수 산출 시 동일한 지역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81년 7월 1일자로 광역시(구 직할시)로 지정된 대구, 인천은 1981학년도 학업중단자수 산출에서는 각각 경북, 경기도에 포함되었음.

5) 2010학년도 자료에서는 유학·이민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지 않아, 성별 학업중단율 산출이 불가능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10]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1981-20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계(당시 실업계) 고교의 인기가 상승했었고,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점차 이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계고의 인기도 차츰 수그러들게 되었다. 이처럼 전문계고 학생들의 이탈 현상을 억제하던 제도의 효력이 약화되고 전문계고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0년대 후반 들어 전문계고의 학업중단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중단 실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계고 역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문계고 남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2004-2006년 동안은 제외하고는 줄곧 4%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보다 광역시,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6년까지는 서울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 동안은 다시 광역시나 기타 시·도에서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중단 추이는 일반계고 학생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교 이탈은 이민·유학 등 서울 소재 학교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그림 I-10]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전문계고 학업중단자 중에는 경제적 빈곤과 같은 ‘가사’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일반계고 학업중단자보다 훨씬 높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2000-2008년까지 전체 학업중단자 가운데 30%를 웃도는 학생들이 가사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도 일반계고에 비해 훨씬 높다. 전문계고에서 부적응은 해당 사유가 조사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고에 비해 전문계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 배경에 기인한 학교부적응 외에 전문계고의 교육여건이나 정체성 논란,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졸업생에 대한 대우 등 전문계고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를 떠났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계고에 비해 학업중단의 사유로서 이민·유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낮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계고에서는 2000년도 이후 이민·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전체 학업중단자 가운데 약 18-37%를 차지하며, 특히 2004-2006년에는 36-37%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문계고 학업중단자 중에서 이민·유학자의 비율은 0.9-2.3%로 제반 학업중단 사유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유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전문계고 학생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가운

데 상당수는 기존의 학교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대안학교를 들 수 있다. 물론 학업중단 학생들이 대부분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유학을 떠나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재입학을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학생 현황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대강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I-20〉에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말 기준 인가형 학교와 비인가형 학교를 모두 포함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총 6,023명이었다. 같은 해 초·중등학생 가운데 학업중단자가 모두 93,17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학업중단자의 약 6.5%만이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중단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민·유학을 떠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남

〈표 I-20〉 대안학교 재학생 현황: 2006, 2010

연도	인가형 학교			비인가형 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초등	중등
	(명)	(명)	(명)	(명)	(명)
2006	559	1,919	844	1,264	1,437
2010 ¹⁾	1,007	2,558	-	-	-

주: 1) 2010년 자료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 비인가형 학교 현황은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 백서 1997-2007」, 2007;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현황」, 2010.

아 있는 학업중단자에게 대안학교가 의미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인가형 대안학교의 재학생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안학교 학생수도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비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대안학교의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학업중단

그간 학업중단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초·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를 함께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학업중단은 제적과 휴학을 일컫는데, 제적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유급제적, 재학년한 초과로 인한 제적을 통칭하고, 휴학은 군입대 및 일반휴학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표 1-21>에는 2-3년제 대학 재적생의 학업중단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휴학 및 제적 인원을 살펴보면, 1985년에는 35,570명에 불과했던 학업중단자가 2000년에는 2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학업중단자의 증가는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이 상승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등교육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2-3년제 대학 재적 학생수 자체가 크게 증가한 데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업중단율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약 15-19% 안팎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25-29%로 10%p 가량 증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일관되게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980-1990년대에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약 20-28% 수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표 1-21> 2-3년제 대학의 성별 및 전공계열별 학업중단 실태: 1985-2010

(명, %)

연도	휴학 및 제적 인원	성별 학업중단율 ¹⁾			전공계열별 학업중단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1985	35,570	14.7	19.9	5.4	21.2	13.7	5.0	17.8	7.8	13.1	
1990	56,933	17.6	26.2	2.9	15.7	16.0	2.5	22.1	8.1	13.6	
1995	109,777	19.3	27.6	5.4	17.8	15.2	4.0	24.0	9.2	18.4	
2000	229,512	25.1	33.3	11.2	21.5	19.8	8.9	29.7	12.3	27.3	
2002	238,271	24.7	32.1	12.0	21.9	22.2	8.9	27.5	12.8	28.1	
2004	228,257	25.4	31.7	14.6	24.2	23.4	10.5	29.2	24.9	15.0	28.9
2006	217,756	26.6	33.8	14.9	24.7	22.8	11.5	32.8	28.3	16.2	29.3
2008	210,870	27.3	35.4	15.0	23.7	23.4	14.1	35.4	28.7	15.3	29.9
2010	221,833	28.9	38.0	15.1	26.5	24.7	14.7	38.3	30.6	15.6	31.7

주: 1) 2-3년제 대학의 학업중단율=((2-3년제 대학 휴학생수+제적생수)÷2-3년제 대학 재적학생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5% 안팎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남녀 간 차이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00년대 이후에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은 30%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여학생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남녀 간 학업중단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남학생들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별을 막론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중단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985년에 19.9%에 불과했지만 2010년 38.0%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에 5.4%에서 15.1%로 2.8배 증가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학생의 학업중단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여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휴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학업중단율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실제로 제적 또는 휴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는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를 엄습한 외환위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났고 노동시장의 고용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 같은 연유로 재학 중 군입대를 하거나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3년제 대학 재적생의 학업중단은 전공계열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표 I-21>에 제시된 자료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어, 지난 십여 년 동안 공학·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의 학업중단율이 3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인문·사회계

열이 20%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10%대로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낮았다. 전공계열별로 이처럼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공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많은 공학·자연계열은 군입대 휴학으로 인해 학업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공별로 직면하게 되는 취업 여건도 전공별 학업중단율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처럼 비교적 진로가 분명한 전공은 학업중단율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체능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아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표 I-22>에는 4년제 대학생의 학업중단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4년제 대학교의 학업중단자는 1990년대까지는 10-20만 명대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0년에는 6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학업중단자의 절대 규모가 확대된 것은 전반적으로 학업중단율이 상승한 것과 더불어 고등교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4년제 대학교 재적생의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4년제 대학교의 학업중단율 추이는 2-3년제 대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1980-1990년대에는 10%대에 머물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대로 뛰어오른 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이처럼 4년제 대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급증했던 현상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아울러 최근 들어 대졸자

〈표 1-22〉 4년제 대학교의 성별 및 전공계열별 학업중단 실태: 1985-2010

(명, %)

연도	휴학 및 제적 인원	성별 학업중단율 ¹⁾			전공계열별 학업중단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1985	145,104	15.6	19.2	5.6	16.0	17.4	9.6	17.5	5.3	11.6	
1990	156,391	15.0	19.5	3.9	13.3	16.0	8.4	17.7	5.6	11.1	
1995	234,045	19.7	25.5	7.3	18.9	20.6	11.9	22.3	5.2	15.2	
2000	421,538	25.3	30.7	15.6	25.4	26.8	15.7	26.8	9.2	24.5	
2002	445,677	25.2	29.7	17.3	26.4	26.6	14.8	26.7	7.7	23.0	
2004	490,204	26.7	31.3	18.8	27.5	29.2	15.1	28.9	25.1	8.5	25.4
2006	508,623	26.9	31.4	19.2	27.4	29.8	14.9	29.4	24.9	9.6	25.1
2008	555,923	28.6	33.3	20.8	29.0	31.4	16.7	31.1	26.6	11.4	27.0
2010	586,240	28.9	33.7	21.2	29.0	31.2	17.7	31.3	28.3	12.8	27.4

주: 1) 4년제 대학교의 학업중단율=((4년제 대학교 휴학생수+제적생수)÷4년제 대학교 재적학생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3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군입대 휴학이 포함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확연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성별을 불문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상승하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난 25년 동안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9.2%에서 33.7%로 약 1.8배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5.6%에서 21.2%로 무려 3.8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여학생의 학업중단이 증가한 데는 앞서 지적한 경제적 문제와 취업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 같은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학생 가운데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전반적인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면에 여학

생들의 학업중단 급증이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계열별로는 2-3년제 대학과 유사하게 공학계열의 학업중단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학계열에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여타 전공에 비해 군입대 휴학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계열의 학업중단율도 공학계열과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일 만큼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사회계열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학업중단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의약계열은 여러 전공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열은 여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의약계열도 비교적 진로가 분명하고, 특히 의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학업중단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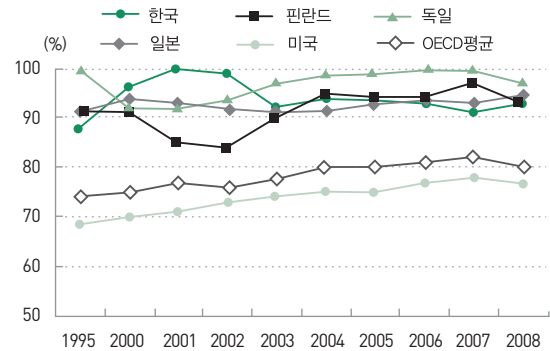
국제비교

앞서 각 학교급별로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학업중단 수준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OECD 교육지표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OECD가 조사한 각국의 후기중등학교(고등학교) 졸업률을 보여준다. 여기 제시된 자료가 직접적으로 학업중단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졸업률과 학업중단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률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각국의 학업중단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졸업률을 보여 그 만큼 학업중단율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핀란드와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보다 졸업률이 낮았지만 이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확연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십여 년 동안 OECD 평균 고등학교 졸업률이 74~82%를 보인데 비해 한국은 88~100%로서 일관되게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다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졸업률은 대

[그림 I-11] 후기 중등학교 졸업률: 1995-2008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한 후에 93% 수준을 전후하여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통계자료들은 그간 한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학업 중단율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 반대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학령기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적절히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Lyche, C.(2010). "Taking on the completion challenge: A literature review on policies to prevent dropout and early school leaving".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53, OECD Publishing.

김경근(고려대학교)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요 약

-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다.
- 등록금 상승과 함께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및 1인당 수혜액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가운데 학생 재정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다.

최근 들어 과중한 대학 등록금 부담이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4,001원에서 2010년 148,522원으로 5년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아울러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 또한 2003년 7.4%에서 2007년 10.3%, 그리고 2009년에는 13.5%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매년 꾸준히 상승해온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학업을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생의 학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중한 등록금 부담은 가계 경제에 주름살을 지워 부모의 노후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물론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이를 보조하는 장학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실제 체감 정도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 실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상승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개괄적인 수준에서 등록금의 상대적인 상승 속도를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설립유형과 전공계열별로 등록금 추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장학금의 지급 실태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록금 부담의 시계열 추이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에 대해 체감하는 부담은 전반적인 물가와 등록금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I-23>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전체 물가지수와 대학 등록금 물가지수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기준년도 대비 물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는 '등록금' 대신 '납입금'이라는 용어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등록금' 대신 '납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I-23> 연도별 고등교육 납입금 물가지수: 1990-2010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	고등교육 납입금 물가지수			
		전체 ¹⁾	4년제 대학교		2-3년제 대학
			사립	국·공립	
1990	51.7	25.9	27.2	29.0	20.1
1995	69.9	52.6	54.1	47.7	50.1
2000	84.9	71.8	73.7	64.8	71.4
2001	88.3	76.1	78.1	69.1	75.5
2002	90.8	81.4	83.1	75.1	81.1
2003	93.9	87.6	89.0	83.0	87.1
2004	97.3	94.2	95.0	92.4	93.7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2.2	106.5	106.4	107.3	106.7
2007	104.8	114.1	113.9	116.5	114.5
2008	109.7	122.6	122.0	126.4	123.1
2009	112.8	125.0	123.9	129.1	127.4
2010	116.1	126.3	125.3	130.2	128.8

주: 1) 고등교육 전체 납입금 물가지수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표 I-23〉에 제시되어 있듯이, 1990년의 경우 전체 물가지수는 2005년의 약 절반 수준인 51.7인 반면 고등교육 납입금 지수는 25.9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990년도의 물가는 절반 수준이었던 반면 고등교육 납입금은 1/4 정도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등록금이 전반적인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추이는 최근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전체 물가는 16.1%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납입금은 26.3%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5년 간 전체 물가에 비해 등록금이 약 10%p 가량 더 상승했음을 뜻한다. 특히 4년제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상승률은 30.2%로,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처럼 등록금이 전반적인 물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 과거에는 등록금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고, 대학교육의 질 경쟁도 비교적 느슨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립대학의 수업료를 제외한 사립대학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결정권을 개별 대학이 갖게 되면서 등록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형근, 2004). 이렇게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전체 물가는 약 2.2배 오른 반면, 등록금 부담은 4.9배나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음을 시사한다.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설립유형별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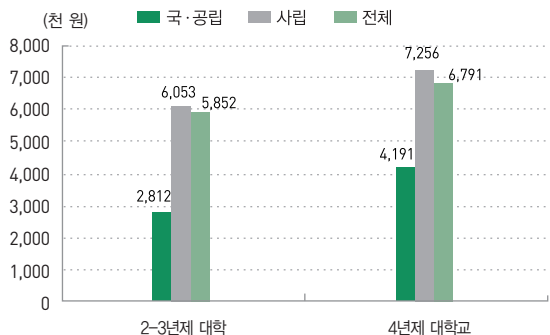
앞서 물가지수를 통해 등록금의 상대적 변동 양상

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에게 실제 부과되는 등록금 액수의 규모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I-12]에는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설립유형별 평균 등록금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0년 현재 대학등록금의 전반적인 규모는 2·3년제 대학이 연평균 약 600만원, 4년제 대학교는 약 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립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 모두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 재학생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3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학교는 연평균 281만 2천원의 등록금을 받는 데 비해 사립학교는 연평균 605만 3천원을 받고 있어,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등록금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4년제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419만 1천원 수준이며, 사립대학은 725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사립대학의 등

[그림 I-12]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설립유형별 평균 등록금¹⁾: 2010



주: 1) 평균등록금=대학별 1인당 연평균등록금의 총 합산액÷대학수(단, 원자료에 본교와 분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례로 간주함)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등록금은 국·공립대학보다 1.7배 가량 더 비쌌다. 2010년 기준 4년제 대학 재적 학생의 79%가 사립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연평균 7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설립유형에 따라 등록금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공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재정지원을 받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미미하고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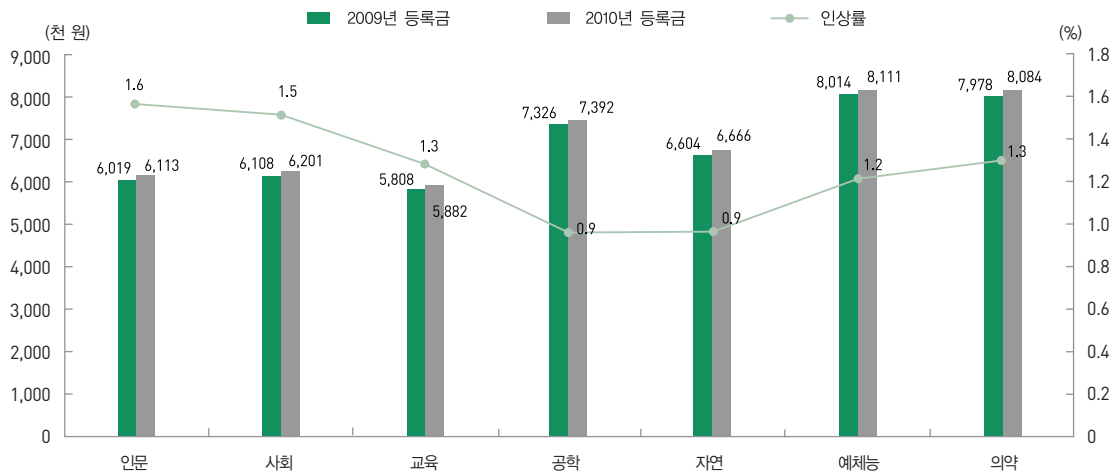
전공계열별 등록금

등록금은 전공계열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이를 전공계열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계열별 등록금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1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공계열에 따라 등록금 부담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인문·사회·교육계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 공학·자연·의약·예체능계열 등록금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계열 등록금은 2009년 580만 8천원, 2010년 588만 2천원으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잇고 있는데, 대체로 연간 평균 610~62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예체능계열은 2009년 801만 4천원, 2010년 811만 1천원으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수준을 보여주었고, 의약계열 등록금도 2009년 797만 8천원, 2010년 808만 4천원으로 꽤 비싼 편이었다. 그 결과 등록금 액수가 가장 적은 교육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의약계열 학생들은 약 37%,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약 38% 가량 더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공계열별로 등록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

[그림 I-13] 4년제 대학교 전공계열별 등록금 및 인상률: 2009-20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4.29, 원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유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그 특성 상 실기수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많은 공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 강의식 수업을 위주로 하는 전공에 비해 교수 1인이 가르치는 학생수도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은 의약계열이나 공학계열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이들 전공에서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기자재, 공간 등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강의식 수업이 주종을 이루는 교육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등록금도 더 비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등록금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금이 비싼 예체능·의약·공학 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의 상승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이 0.9%로 가장 낮은 인상을 보여준 가운데, 예체능계열(1.2%), 의약계열(1.3%)도 인문계열(1.6%)이나 사회계열(1.5%) 보다 낮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가시화되면서 대학들이 이미 납부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공학·자연·예체능·의약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낮은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설립유형별·장학금 지급 주체별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앞서 살펴본 등록금에 관한 통계자료들은 그간 대

학등록금이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상승하였으며, 그 정도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최근 들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는 것이 결코 근거 없는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등록금이 높은 수준에서 부과되더라도, 이를 지원해주는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수준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으로 인한 실질적 부담을 좀 더 균형감 있게 이해하려면,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 실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표 I-24>에는 2-3년제 대학,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각종 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설립유형별 장학금 수혜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학생들 가운데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에는 평균 21.1% 수준이었던 장학금 수혜율이 2010년에는 39.1%로 약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크게 외부장학금과 내부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장학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정부재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이를 제외한 여타 사설 및 기타 장학금을 일컬으며, 내부장학금은 대학이 제공하는 학비면제나 근로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고려해서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학비면제나 근로장학금과 같은 내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외부장학금을 받는

〈표 1-24〉 설립유형별 장학금 수혜율¹⁾: 1990-2010

(%)

연도	전체			국·공립			사립		
	외부	내부	합계	외부	내부	합계	외부	내부	합계
1990	2.6	18.5	21.1	5.0	28.3	33.3	1.9	15.8	17.8
1995	2.5	15.6	18.1	3.7	16.6	20.3	2.0	15.1	17.1
2000	2.2	21.2	23.4	2.1	14.9	17.0	2.2	23.6	25.9
2002	2.1	15.2	17.2	2.1	15.2	17.3	2.1	15.1	17.2
2004	2.4	22.8	25.1	2.7	18.1	20.8	2.2	24.4	26.7
2006	2.8	20.5	23.4	3.8	19.1	22.9	2.5	21.0	23.6
2008	3.7	27.3	31.0	5.1	22.4	27.5	3.3	29.0	32.2
2010	7.4	31.7	39.1	8.2	26.3	34.6	7.2	33.5	40.7

주: 1) 장학금 수혜율=(장학금 수혜 인원÷(재적 학생수×2))×100. 여기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은 1학기 수혜 인원과 2학기 수혜 인원이 모두 합산된 값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적 학생의 2배수로 평균 장학금 수혜율을 산출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학생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자료를 살펴보면, 고등교육 기관 재적생 가운데 외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6%에 그친 반면 내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8.5%로 내부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약 7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와 기업이 이전에 비해 장학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외부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3.7%에 불과했던 외부장학금 수혜율은 2010년 7.4%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장학금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설립유형별로는 1990년대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대체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수혜율이 더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1990년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33.3%이었던 반면, 사립대학 학생들은 17.8%만 장학금 혜택을 받았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부장학금과 내부장학금 모두

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리하여 국·공립대학 재학생의 외부장학금 수혜율은 5%이었던 반면, 사립대 재학생의 수혜율은 1.9%에 불과했다. 내부장학금 수혜율 역시 국·공립대학이 28.3%이었던 반면, 사립대학은 15.8%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양상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2004년도에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이 20.8%이었던 반면, 사립대학은 26.7%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사립대학 우위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0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장학금 수혜율이 34.6%에 머문 반면, 사립대학은 40.7%로 6%p 가량 높았다.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장학금 수혜율에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을 초월하게 된 것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사립대학에서 학비면제나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부장학금 수혜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 것은 학생 유치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대학들이 학생 재정지원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보다 실제로 부과하는 등록금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학생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수혜율을 높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유형별 · 장학금 지급 주체별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표 I-25〉와 〈표 I-26〉에는 장학금 수혜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주체별 수혜율과 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수혜액을 산출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2-3년제 대학 관련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표 I-25〉를 살펴보면, 2-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외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3년제 대학의 경우 외부장

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이 2006년도까지 불과 1%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1% 수준에 불과했던 외부장학금 수혜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2%, 2010년에는 9.8%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2-3년제 대학에서 외부장학금 수혜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와 사설 및 기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은 각각 0.2%와 1.0%로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에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은 2010년에 8.7%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정부가 장학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늘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 2-3년제 대학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도입한 소외계층 대상 장학사업의 혜택을 2-3년제 대학

〈표 I-25〉 2-3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율¹⁾ 및 수혜자 1인당 수혜액²⁾: 1990-2010

(%, 원)

연도	외부장학금 수혜율				내부장학금 (학비면제) 수혜율(b)	장학금 수혜율 (c=a+b)	수혜자 1인당 수혜액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설 및 기타	소계(a)			
1990	0.6	0.1	0.5	1.2	12.9	14.1	191,100
1995	0.4	0.1	0.5	1.0	11.4	12.3	398,000
2000	0.6	0.1	0.6	1.3	10.3	11.6	595,100
2002	0.7	0.1	0.6	1.5	12.6	14.1	662,600
2004	0.6	0.2	0.6	1.4	15.4	16.7	715,000
2006	0.8	0.1	0.7	1.7	19.4	21.1	855,200
2008	1.1	0.2	0.9	2.2	23.5	25.6	892,100
2010	8.7	0.2	1.0	9.8	27.6	37.5	959,600

주: 1) 장학금 수혜율=(장학금 수혜 인원÷(재적 학생수×2))×100. 여기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은 1학기 수혜 인원과 2학기 수혜 인원이 모두 합산된 값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적 학생의 2배수로 평균 장학금 수혜율을 산출함.

2) 수혜자 1인당 수혜액=장학금 총 지급액÷장학금 수혜 인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학생들이 상당 부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3년제 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사업도 별도로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2-3년 사이에 2-3년제 대학 학생 중에서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장학금의 증가와 더불어 내부장학금 수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0년 현재 2-3년제 대학 재학생 가운데 약 37%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 안팎에서 나름대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금 혜택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지급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열에 제시된 수혜자 1인당 수혜액을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I-25>에 제시된 것처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학금 수혜율과 더불어 1인당 수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90년에 1인당 평균 1만 1,100원이었던 장학금 지급액은 2010년 95만 9,600원으로 약 5배 가량 상승하였다. 이 같은 지급액의 증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자료와 앞서 살펴본 2-3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을 함께 고려해보면, 장학금 지급액의 규모가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기준 2-3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85만 2,000원인 데 비해(그림 I-12),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95만 9,600원으로 평균 등록금 액수의 16.4%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학금 액수가 등록금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장학금 수혜자의 대부분이 학비면제와 같은 내부장학금을 지급받는데, 여기에는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받는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입학금이나 기성회비, 또는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받는 것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는 데 크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기에 제시된 장학금 액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학지원을 받는 수혜자 1인당 수혜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혜액은 등록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표 I-26>에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수혜액을 산출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본 2-3년제 대학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하여 외부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2008년까지 2-3% 수준에서 머물다가 2010년 7.4%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사설 및 기타 장학금 수혜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오롯이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 수혜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 수혜율은 2004년까지 1% 수준에 머물다가 2006년 2.0%를 나타낸 후, 2010년 5.7%로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외부장학금 수혜율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 수 년 사이에 정부가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하며 수혜인원을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 가운데 외부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 비중은 여전히 7.4%에 불과해, 전체 장학금 수혜자의 2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4년제 대학 재학생 가운데 내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04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표 1-26〉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율¹⁾ 및 수혜자 1인당 수혜액²⁾: 1990-2010

(%, 원)

연도	외부장학금 수혜율				내부장학금 (학비면제) 수혜율(b)	장학금 수혜율 (c=a+b)	수혜자 1인당 수혜액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설 및 기타	소계(a)			
1990	1.3	0.2	1.3	2.8	19.7	22.5	322,600
1995	1.3	0.1	1.9	3.3	18.9	22.2	555,700
2000	0.9	0.0	1.3	2.2	18.6	20.9	626,700
2002	1.2	0.0	1.1	2.4	16.0	18.4	853,800
2004	1.5	0.0	1.3	2.8	17.6	20.4	973,100
2006	2.0	0.1	1.4	3.5	19.3	22.8	1,070,800
2008	2.1	0.1	1.4	3.6	21.8	25.4	1,216,600
2010	5.7	0.3	1.4	7.4	27.3	34.7	1,203,000

주: 1) 장학금 수혜율=(장학금 수혜 인원÷(재적 학생수×2))×100. 여기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은 1학기 수혜 인원과 2학기 수혜 인원이 모두 합산된 값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적 학생의 2배수로 평균 장학금 수혜율을 산출함.

2) 수혜자 1인당 수혜액=장학금 총 지급액÷장학금 수혜 인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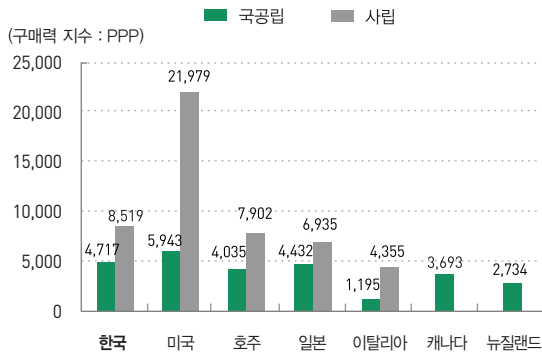
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는 18-19%에 머물던 내부 장학금 수혜율이 2008년에는 21.8%, 2010년에는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관찰되는 이 같은 외부·내부장학금의 전반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적인 수혜율 역시 2010년 현재 약 3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4년제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 안팎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2-3년제 대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수혜자 1인당 수혜액은 평균 등록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기준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9만 1천 원인 데 비해(그림 1-12),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은 120만 3천 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7.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등록금 액수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국제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통해서 그간 대학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수준보다 더 가파른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등록금 상승과 더불어 장학금 수혜인원도 크게 확대되었지만, 지급규모가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상당히 과중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실태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를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OECD가 조사한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등록금과 장학금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1-14]에는 OECD 주요 회원

[그림 I-14] 대학등록금¹⁾ 국제 비교: 2006-2007

주: 1) 2006-2007학년도 A유형의 고등교육기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국의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액수가 제시되어 있다. OECD는 고등교육기관을 A유형과 B유형으로 구분하는데, A유형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석·박사과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B유형은 노동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2-3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A유형의 고등교육기관 등록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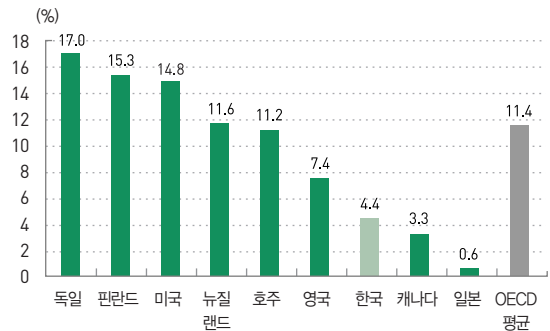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 제시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국·공립 및 사립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국·공립의 경우 미국 대학이 평균 5,943달러로 가장 비싼 등록금 수준을 보인데 이어 한국은 4,717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일본(4,432달러)이나 호주(4,035달러), 캐나다(3,693달러)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연평균 2만 1,979달러로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

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이 8,519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수집된 2007년의 1인당 GDP가 호주 3만 9,087달러, 캐나다 3만 8,356달러, 일본 3만 3,577달러, 이탈리아 3만 1,898달러 등으로 한국(2만 6,191달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I-15]에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가운데 가계에 대한 장학금 및 기타 학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정부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학금의 규모나 비중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비용 가운데 학생 장학금이나 기타 학비 지원에 투자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지출 가운데 가계에 대한 장학금 및 기타 학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

[그림 I-15]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중 '가계에 대한 장학금·기타 학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2007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균이 11.4%로 나타난 가운데, 독일이 17.0%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핀란드가 15.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는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정부지출 가운데 학비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또한 OECD 평균을 3%p 이상 웃도는 14.8%를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은 등록금 부과액이 높은 만큼 정부가 장학금 지급이나 학비 보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도 각각 11.6%와 11.2%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영국은 7.4%로 서구의 주요국 가운데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가운데 가계에 대한 장학금 및 학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여타 주요국 및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가운데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낮은 것은 한국에서는 정부지출이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상술한 국제비교 결과는 한국은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비해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같은 연유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대단히 큰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의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납입하는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교육수요자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더 많은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자료들은 그간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그 결과 국제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금 상승과 함께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과 1인당 수혜액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이 이전보다 과중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재정수입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면 단조로운 대학의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대학과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학정보공시, 2010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공개」.
- 김형근. 2004. “대학등록금 추이의 국제비교 분석”. 「대학교육」.

김경근(고려대학교)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요 약

- 평생학습의 기회로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성인들의 대학교 교육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하여 활성화된 사이버, 원격교육에 있어서 이동성과 지역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습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형이 구분되는데, 남성은 주로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스포츠, 가정생활, 음악분야의 프로그램 참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인들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학습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증가로 인하여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조어를 흔히 접하게 된다. 평생학습사회란 개인의 학습기회가 우리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 발견되며, 그러한 학습기회에 참여하려는 노력들이 지원될 수 있는 사회체제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 비전으로만 논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서 학습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삶과 배움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그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요긴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평생학습의 의미와 평생학습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여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경험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성인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인식수준과 참여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출비용 규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간다.

평생학습의 의미와 유형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성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주민자치센터, 각종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학습자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기꺼이 들여가면서 참여하는 모습은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실체는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으로만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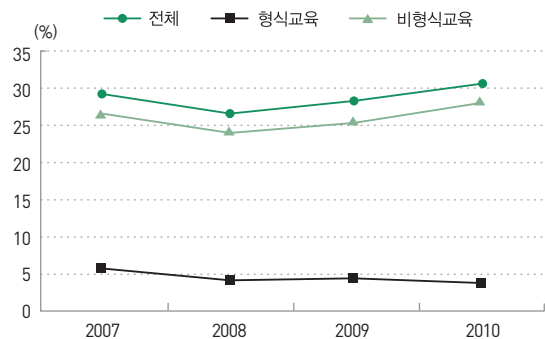
가령,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공부하지 못하였던 문자해독이나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검정고시 준비, 방송통신대 참여, 학점은행제 등록과 같은 모습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 개인이 학령기 시절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학교 교육의 기회를 성인이 된 이후에 참여하여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는 평생학습의 의의가 담겨져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도서관에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의 책을 빌려 읽는 모습이나, 공연 관람을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길러가는 과정 등도 평생 학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배움의 기회가 단순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장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실태는 크게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그리고 무형식학습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김한별, 2010). 형식교육이란 방송통신대와 같이 학습자들의 교육 참여경험이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교육유형을 말한다. 비형식교육은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처럼 계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하지만,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교육유형을 뜻한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이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독서, 박물관 전시회, 각종 공연관람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과정이 무형식학습의 예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는 평생학습 가운데 통계적으로 조사되는 영역은 구체적인 실천을 포착하기 어려운 무형식학습을 제외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측면에서 평생학습 참여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해오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화추이는 [그림 I-16]에서

[그림 I-16]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추이: 2007-20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각년도.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8년 26.4%의 평생학습 참여율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 성인의 30.5%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형식교육의 참여율 측면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반면, 비형식교육의 영역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평생학습이란 구체적 삶의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학습기회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배움의 결과로서 공식적 학위나 학력의 취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력보완을 위한 형식교육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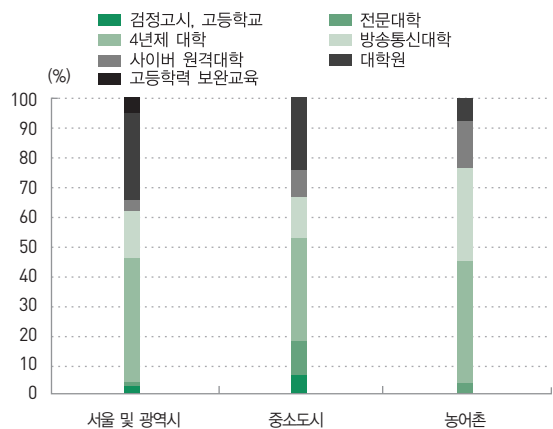
형식교육은 공식적으로 자격조건을 인정받은 교육자에 의해서 공인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형식교육을 통한 학습경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학습의 유형으로서 형식교육은 대학 및 대학원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원격대학, 그리고 검정고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 형식교육은 학령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력을 충분히 획득하

지 못한 성인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난다. 또는 직업이나 개인적 관심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추가교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형식교육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자격, 즉 일정한 학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려고 관심을 갖는 성인들이 주된 참여자로 주목받게 된다.

평생학습 참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형식교육 참여는 [그림 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경험으로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법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교육은 평생학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개인의 온전한 삶에 필요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을 포섭하는 넓은 의미에서 평생학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교육도 성인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평생학습의 장면이

[그림 1-17] 지역별 형식교육 참여유형 비율: 20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010.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거나, 10대 후반의 일반적인 대학입학 적정 연령대를 벗어난, 소위 '만학도'와 같은 비교적 높은 연령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생학습의 장면에서 성인들의 학력 보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학교의 새로운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졸업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기회가 넓어지는 변화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물론 대학교육 기회의 과잉현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는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들이 갖는 학력에 대한 요구수준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대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지역의 성인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성인들은 비교적 열악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편이다. 이 때 농어촌 지역 성인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매체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할 때 접하게 되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성인들은 학교통학에 있어서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 원격대학의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가 도시지역 성인학습자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1-17]에 제시되어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 원격대학 등록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른 형식교육의 기회와 비교하였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지역적 차이로 인하여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개인 특성에 따른 비형식교육 참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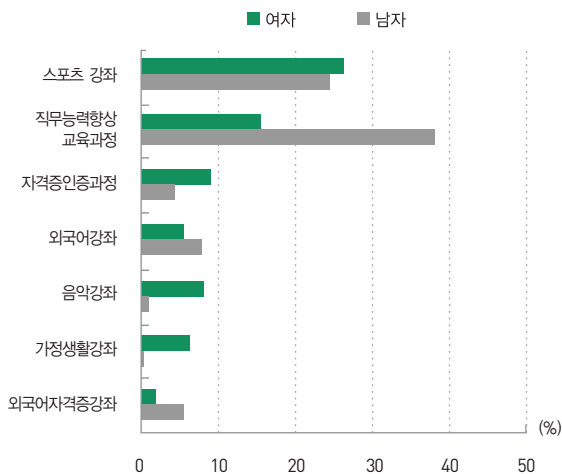
비형식교육은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교육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교육 유형을 뜻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비형식교육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등을 배우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학교 졸업장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분야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성격의 것이다.

비형식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스포츠 강좌,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 자격증인증 과정, 외국어 강좌, 음악강좌, 가정생활 강좌, 그리고 외국어자격증 강좌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2010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형식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스포츠 강좌와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 분야에 각각 25.6%, 25.5%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가, 재즈댄스, 배드민턴, 테니스 등과 같이 각종운동능력 관련 교습이나 재직자의 전문성 개발교육이나 연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과 같은 교육활동이 비형식교육 측면에서 가장 주된 참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참여 양상

은 성별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 강좌와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 강좌에 있어서는 주로 여성학습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경제적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주된 계층이란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8] 성별에 따른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20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010.

비슷한 맥락에서 가정생활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학습자들은 0.5%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6.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된 학습요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정 외부의 사회생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남성이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내부의 삶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여성이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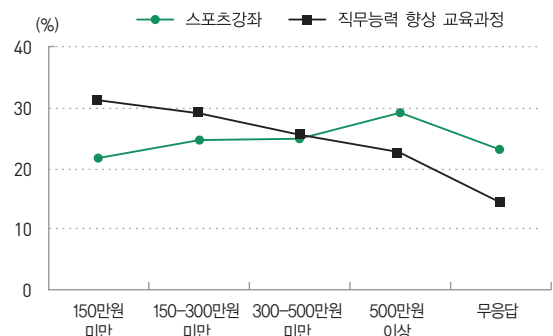
또한 평생학습 참여분야가 학습자의 월가구 소득수

준과 관련해서 구분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사회 평생 학습 실태를 파악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1-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월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포츠 강좌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월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소득활동을 촉진하는데 관련성있는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월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져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자 계층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행복감과 자기계발을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학습자 계층은 소득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하

[그림 1-19] 소득 수준에 따른 스포츠강좌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 참여율 변화: 20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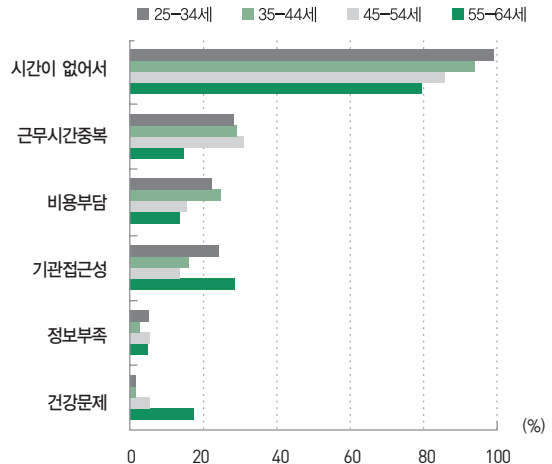
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평생학습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부족

개인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해나가고자 하더라도 항상 평생학습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성인의 30.5%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약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평생학습 비참여는 단순히 평생학습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평생학습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요긴한 작업이 될 것이며,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을 정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이나 학습기회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I-20]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적 부족, 근무시간과 중복, 교육훈련비용의 부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훈련기관 위치, 정보의 부족,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건강과 나이 등의 여섯 가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I-20]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¹⁾: 2010



주: 1) 평생학습 참여의사는 있었으나 불참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장애요인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010」.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희망했던 교육이나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경우가 92.1%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결과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른 바쁜 업무나 일상 등이 평생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가령 25-34세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에서 무려 99%가 시간이 부족한 것을 중요한 이유로 지적한 반면, 55-64세 사이의 응답자는 79.6%가 시간적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5-34세 사이의 성인들이 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직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대상들로서 취업의 기회를 탐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평생직장이라는 직장개념이 사라지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해서 노동생산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은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사회 성인들로 하여금 직업 활동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적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삶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 활동 가능성, 즉 고용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기투자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은 그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통계적 결과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1-20]에서 제시된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학습자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평생학습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55-64세 사이의 성인이 1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한 이후 시기의 성인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 의한 학습 참여 저해는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연령의 집단이란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신체적 노화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습능력의 감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

으로 작용하는 원인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보다는 성인들의 삶의 주기에 따른 상황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실제의 학습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가령,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층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를 유연하게 확대함으로써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통신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교육기회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IPTV 등과 같은 최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학습활동 참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속해있는 업무환경이나 일상생활의 조건 속에서도 평생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방법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서 청년층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현상이 일어나는 고령층 성인학습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습내용의 분량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을 위한 개인적 비용부담 감소

평생학습의 참여는 의무교육제도가 각종 학생지원

제도 여건이 양호한 학교교육과 달리 학습자의 비용 부담이 많이 요구된다.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배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으로서 참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은 성인이 자신의 조건에서 배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낄 때, 그러한 요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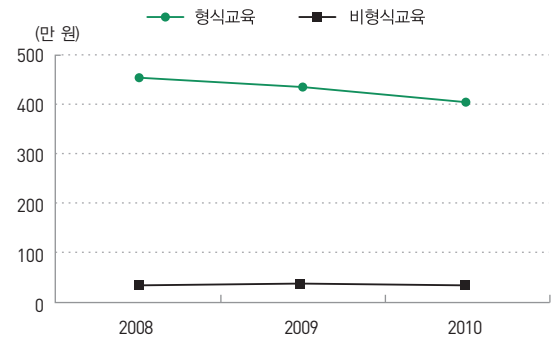
이처럼 성인학습자 스스로의 의식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평생학습의 조건에서 성인들이 교육 참여에 쓰는 비용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즉, 앞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평생학습 참여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고려함으로써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의 평생학습 요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생학습 참여에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는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모두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오히려 흥미롭게도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하게나마 개인의 학습비용 지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교육에서의 비용은 2008년 평균 454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05만 원으로 4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형식교육의 측면에서도 2008년 평균 34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2010년에는 평균 33만 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서 1만 원 정도의 지출 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은 규모이지만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

[그림 I-21]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평생학습 참여비용 변화: 2008-20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각 년도.

서 개인이 소비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가진다.

첫 번째 가능성은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평생학습을 위해서 돈을 적게 지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바쁜 업무나 일과들로 인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었거나 배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짐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가 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은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평생학습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측면의 지원이 조금씩 확대되어간다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의 개념이 확장됨으로써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의 영향으로, 전체 비용 가운데 개인 학습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국가나 지역자치단

체 수준에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해석 가능성에 보다 더 큰 설득력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양적 확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도 함께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으로써 참여하려는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학습경험이 의미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인들의 거주지역, 성별,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교육 참여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조건에 따라서 구분

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활동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각자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평생학습의 촉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자기개발과 사회적응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려는 개인들이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비록 평생학습이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인들의 학습장면에는 매우 다채로운 모습들과 관심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획일적인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독특한 특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참여 촉진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별, 2010, 「평생교육론」.

김한별(한국교원대학교)

II. 노동

Labor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 홍승아	56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 박시내	65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 박영실/한승훈	75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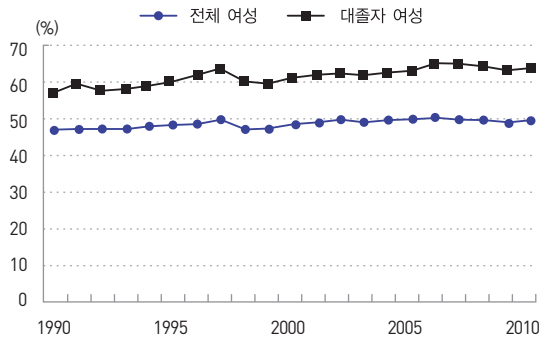
요 약

- 지난 30년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OECD 평균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3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떨어져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 여성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 일용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을 낮추고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여성취업자들의 2/3 이상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별 분포에서도 전체 취업여성의 1/3 이상이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전문·관리직에서의 꾸준한 증가가 주목되는 변화이다.
-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꾸준히 완화되었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3.5%에 불과하여 성별임금격차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어 2010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2%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여성 취업자의 고용형태, 산업 및 직업분포를 통하여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시간, 임금수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경제활동의 변화추이 및 특징

199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0%였고, 2000년 48.6%로 1.6%p 증가, 2010년 49.2%로 0.6%p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림 II-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¹⁾의 변화: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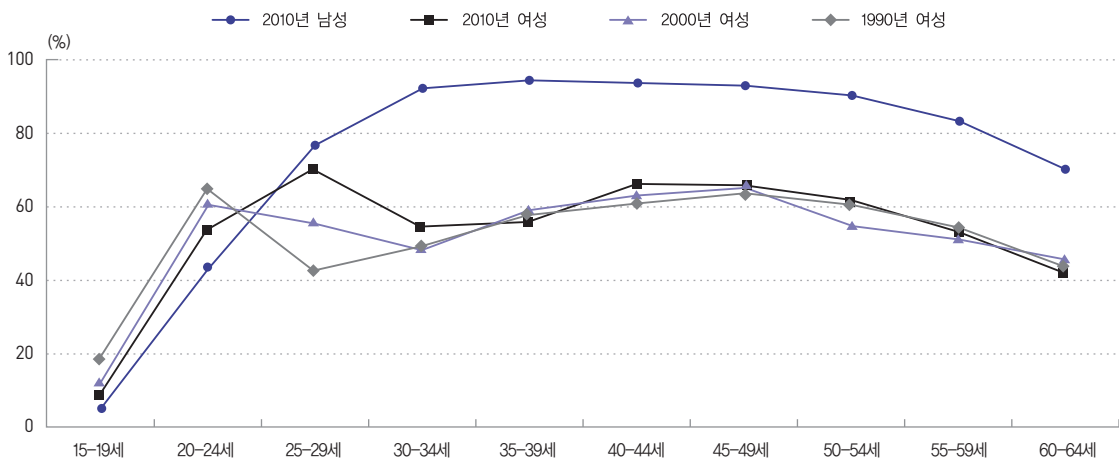
주: 1)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이고,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1.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한편 대졸 여성의 경우에는 1990년 57.2%, 2000년 60.9%, 2010년 63.2%로 역시 OECD 평균인 82.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는 남성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 30대 전반 91.9%, 30대 후반 9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역U자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30대 전반 54.6%, 30대 후반 55.9%로 크게 떨어지고, 40대 초반에 들어서 65.9%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30대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재취업할 경우 이전의 고용지위보다 낮은 일자리로 재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은 고용상의 지위, 직업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 3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

[그림 II-2]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¹⁾: 2010

주: 1)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이고,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다. 1990년, 2000년에 비해 M 커브의 하강곡선이 다소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상승, 이로 인한 소자녀 출산, 혹은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들이 요구된다.

실제로 여성들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가사와 육아의 사유가 전체의 2/3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2000년 66%, 2005년 67%, 2010년 67%, 통계청 『사회조사』). 즉 가사와 육아의 문제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고용형태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되며, 다시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성되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71.2%, 비임금근로자가 28.8%로 구성된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70.0%, 비임금근로자가 30.0%로 구성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72.9%, 비임금근로자가 27.1%로 구성되어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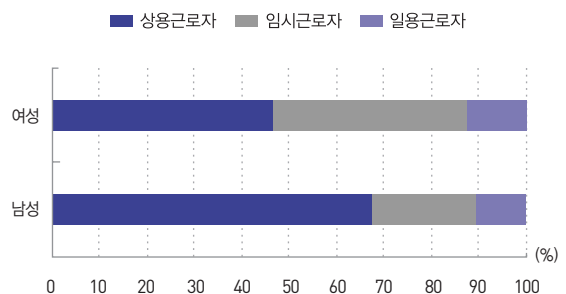
그렇지만 임금근로자의 내부구성을 보면 성별 차이

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II-3]을 보면, 2010년 현재 남성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68.4%, 임시근로자 21.5%, 일용근로자 10.1%로 분포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47.3%, 임시근로자 41.1%, 일용근로자 11.6%로 분포되어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여성들의 이러한 고용형태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을 낮추고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1990년 초반 증가하다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상용직이 감소한 1997년경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용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서도 지난 10여 년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시직은 20% 수준에서, 일용직은 10% 수준에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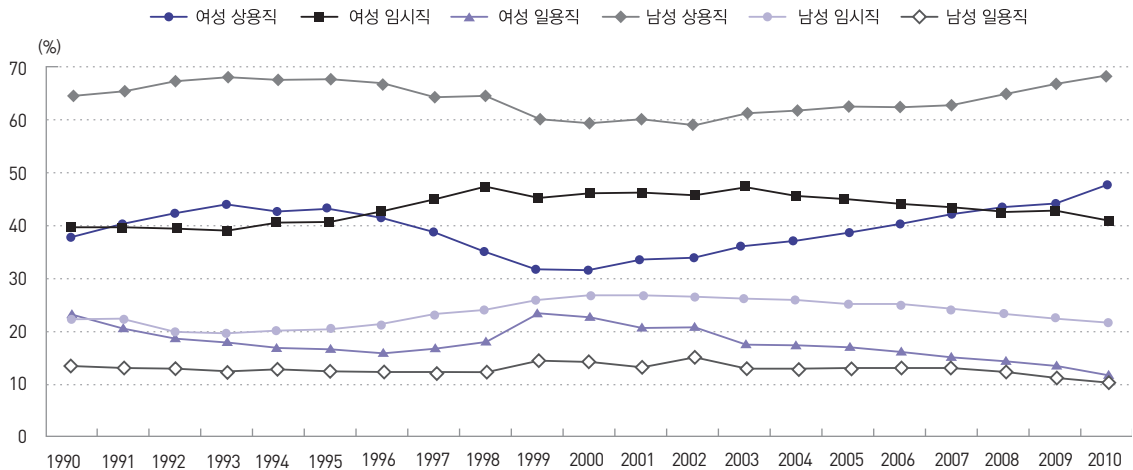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그림 II-3] 성별 임금근로자 구성 비율: 20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그림 II-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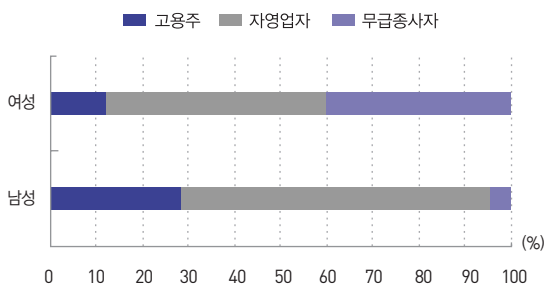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같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의 순으로 구성된다. 역시 성별 비교를 해보면, 2010년 현재 남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67.5%, 고용주 28.1%, 무급가족종사자 4.4%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47.6%, 무급가족종사자 40.4%, 고용주 12.1%의 순으로 구성되어 남성에 비해 자영업자는 훨씬 적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04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 40% 수준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고용주의 비율은 10% 내외를 유지하면서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림 II-6).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림 II-5] 성별 비임금근로자 구성 비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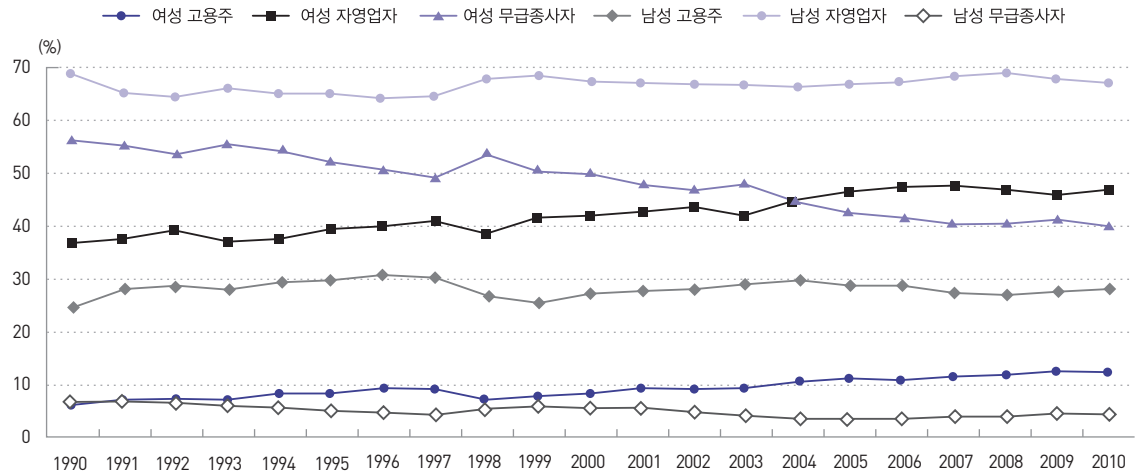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여성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분포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농림어업에서는 1980년 39.0%에서 2010년 6.9%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같은 기간 22.1%에서 12.5%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개인·

[그림 II-6]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 변화: 1990-20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여성취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1.8%에서 42.9%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24.4%에서 29.1%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전체 취업여성의 2/3 이상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의 여성취업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점과 전기·운수·통신업에서의 여성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별 분포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0년간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직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여 1980년 39.0%에서 2010년 5.9%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31.8%)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능직과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특징으로는

전문·관리직에서의 변화로, 전문·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1980년 3.6%에서 2010년 21.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취업자들은 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서, 서비스·판매직의 형태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들 부문에 집중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일하는 산업 및 직업분포도 점차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지난 20년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04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월

〈표 II-1〉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 산업별 구성변화: 1980-2010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산업별							
농림어업	39.0	27.8	20.3	14.0	12.2	8.9	6.9
광업	0.2	0.1	0.1	0.0	0.0	0.0	0.0
제조업	22.1	23.2	28.1	21.3	17.5	14.8	12.5
건설업	1.4	1.1	1.8	2.2	1.5	1.7	1.7
도소매 · 음식 숙박업	24.4	30.0	28.3	33.4	35.1	33.3	29.1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11.8	16.8	20.2	22.4	27.2	35.1	42.9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¹⁾	1.2	1.1	1.2	6.7	6.5	6.2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별							
전문 · 관리직	3.6	5.4	7.7	11.4	14.0	17.5	21.0
사무직	7.9	10.2	12.7	15.9	14.7	17.4	17.8
서비스 · 판매직	28.6	35.4	33.6	32.2	38.4	36.9	31.8
농림어업직	39.0	27.6	20.2	12.9	11.2	8.0	5.9
기능직	21.0	21.3	25.8	27.7	21.8	20.2	2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업분류 기준의 변화로 금융업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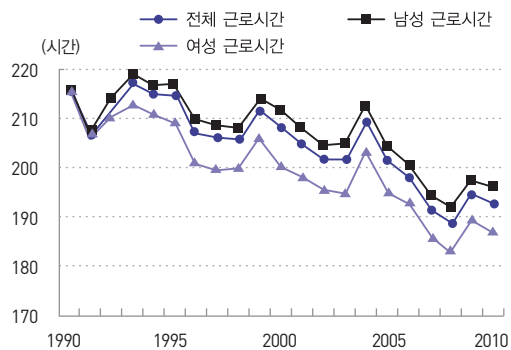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192.8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근로시간이 195.7시간으로 여성의 186.9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7).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 산업재해 증가, 여성과 남성

의 일 · 가정 양립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양육의 책임으로 인하여 장시간근로는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시간의 확보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2,050시간에서 1,800시간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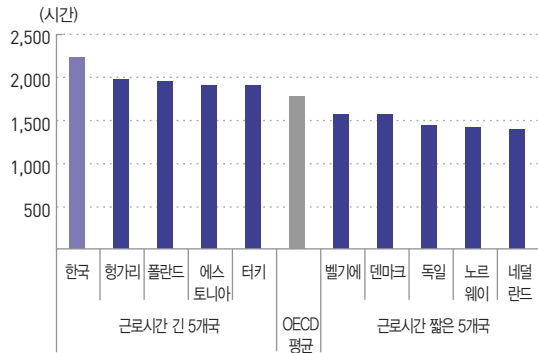
한편 근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는 연근로시간 2,193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49시간보다 훨씬 길뿐 아니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헝가리(1,961시간), 폴란드(1,939시간), 에스토니아(1,879시간), 터키(1,877시간)의 순으로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로는 네덜란드(1,377시간), 노르웨이(1,414시간), 독일(1,419시간),

[그림 II-7] 월평균 총근로시간의 추이¹⁾: 1990-2010

주: 1)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0.

[그림 II-8] 국가별 연근로시간: 2010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덴마크(1,542시간), 벨기에(1,551시간)의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II-8).

임금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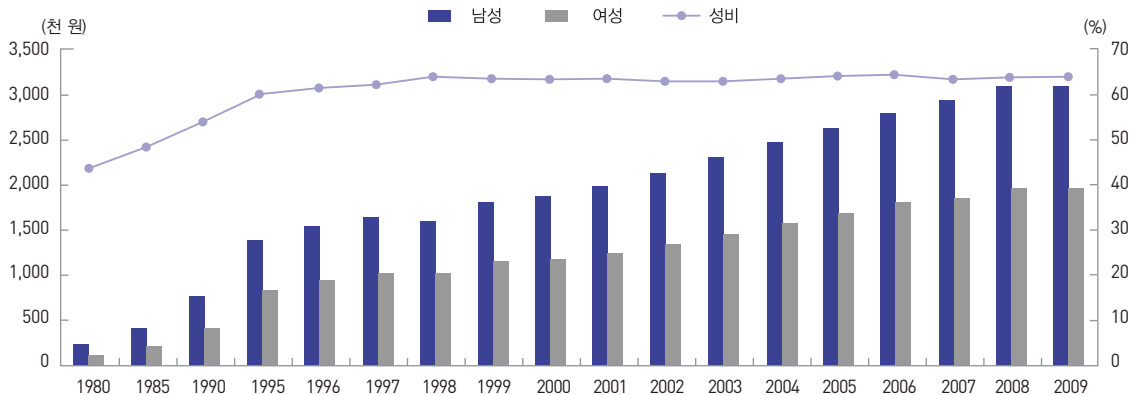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완화되어 왔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3.5%에 불과하여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1980년 남녀 임금의 성비는 44.2%, 1990년 53.5%, 2000년 63.2%로

상승해 왔으나 1996년 이후 60%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임금은 남성대비 65.7%, 고졸 64.8%, 중졸 이하 60.0% 순으로 나타난다.

성별임금격차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낮은 지위, 저임금 업종과 직종에 편중된 여성분포, 소규모 사업장 종사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용상의 열악한 지위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종업원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전체 여성근로자 중 65.3%를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의 고용지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이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시 저위직종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력유지를 하기가 어렵고 임금격차를 확대하게 된다.

일·가정 양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

[그림 II-9] 성별 임금변화의 추이¹⁾: 1980-2009

주: 1)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월 평균급여(천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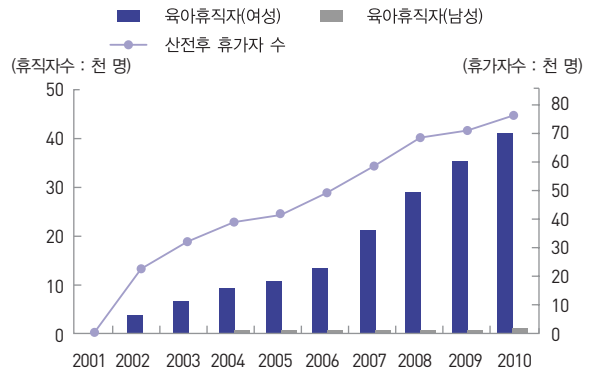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들이 생애직업으로서 취업과 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여성들이 취업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일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01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산전후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41,104명, 2010년 75,742명으로 보고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역시 최근 들어서 사용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지만, 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서는 제도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2010년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41,733명이며, 이 중 여성이 40,914명, 남성이 819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비해 남성들의 휴직 사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므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두 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여성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지는 못하여 비정규직 여성과 자영업자 등의 많은 여성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문제도 해결과제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와 태도는 훨씬 강해졌으며, 많은 여성들

[그림 II-10] 산전 후 휴가자 수 및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2001-201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생활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비율이 1988년 17.5%에서 1998년 8.5%, 2009년 8.0%로 줄어든 반면에, 출산이나 자녀양육과 상관없이 계속 취업하겠다는 비율은 1988년 16.7%, 1998년 30.4%, 2009년 55.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강력한 취업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여성들은 여전히 취업의 어려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1988년 29.3%, 1998년 31.4%, 2009년 49.9%로 더욱 커지고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1988, 1998, 2009). 이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 만혼화, 가족시간의 부족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되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중요한 사회적 해결과제이다.

또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인력은 더욱 중요한 노동력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여성고용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것은 특정 산업 및 직업으로의 편중현상으로 초래되는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현상과 성별임금격차

를 완화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OECD, 2010, *Employment Outlook*.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요 약

-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약 714만 명(남성 360만 명, 여성 3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초혼연령은 25.7세이며, 평균자녀수는 2.0명으로 대졸이상자의 비중은 27.7%이며, 64.4%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 4명 중 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4로 상용직은 전체 취업자의 30% 수준이다.
-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은퇴연령은 64.4세(남성 67세, 여성 62세)로, 각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 규모는 2020년 375만 명, 2030년에는 199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다산시기에 출생하여 근대화와 유신시대를 겪고, 과밀경쟁 시대를 겪은 산업화의 주역세대이다. 이들이 최근 들어 조망받게 된 것은 노동시장에서 정년을 앞둔 대규모 인구집단이며, 이들의 은퇴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식적인 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반면, 한국 고령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하여 경제생활을 지속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714만여 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54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을 은퇴하면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숙련 노동력의 부족, 개인적 수준에서는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며, 이들의 은퇴와 향후 노동공급 추이는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인구, 고용 자료를 활용하

여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첫째,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규모를 논의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논의한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은퇴연령을 짚어보고, 향후 노동공급 추이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를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규모

베이비붐(Baby Boom)이란 특정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출생아수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며, ‘출생아수’와 ‘출산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생한 인구 집단으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1955~1963년 출생자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의를 따랐을 때,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이 360만 명(50.4%), 여성이 354만 명(49.6%)으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표 II-2).

『장래인구추계』의 각 세별 인구규모로 산출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에서 전후시기인 195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점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47~55세)이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지점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영향 때문이며, 1970년대 전후의 출생아 수의 증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에코세대(25~31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이 시기에 또다시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그림 II-11).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뿐만 아니

〈표 II-2〉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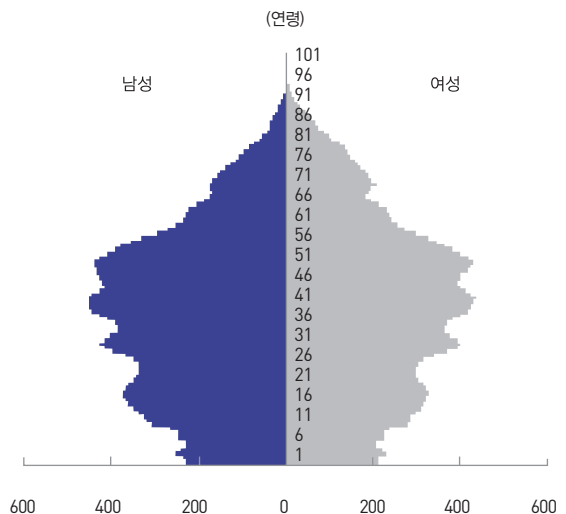
	전체	남성	여성
47세(1963년 생)	854,059	435,468	418,591
48세(1962년 생)	871,361	439,619	431,742
49세(1961년 생)	870,581	437,566	433,015
50세(1960년 생)	847,723	427,210	420,513
51세(1959년 생)	813,097	410,543	402,554
52세(1958년 생)	778,122	393,104	385,018
53세(1957년 생)	741,860	374,516	367,344
54세(1956년 생)	704,343	354,095	350,248
55세(1955년 생)	659,964	328,532	331,432
계	7,141,110	3,600,653	3,540,45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한 인구현상이다. 미국은 1946~1964년 출생자, 일본은 1947~1949년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며, 각각 총인구의 26.0%, 5.4% 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고령자비율과 노년

〔그림 II-1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201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부양비를 상승시킨다. 고령자비율과 노년부양비는 2000년까지 0.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고령자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과 2030년, 2044년경 또 다시 상승하는 지점은 베이비붐 세대 및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고령자비율 및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후로 진입하는 시기인 2020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7%로 이전 시기의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5년생)가 65세에 이르는 2030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8%,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1985년생)가 65세에 도달하는 2044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6%로 다른 구간에 비해 전년대비 상승률의 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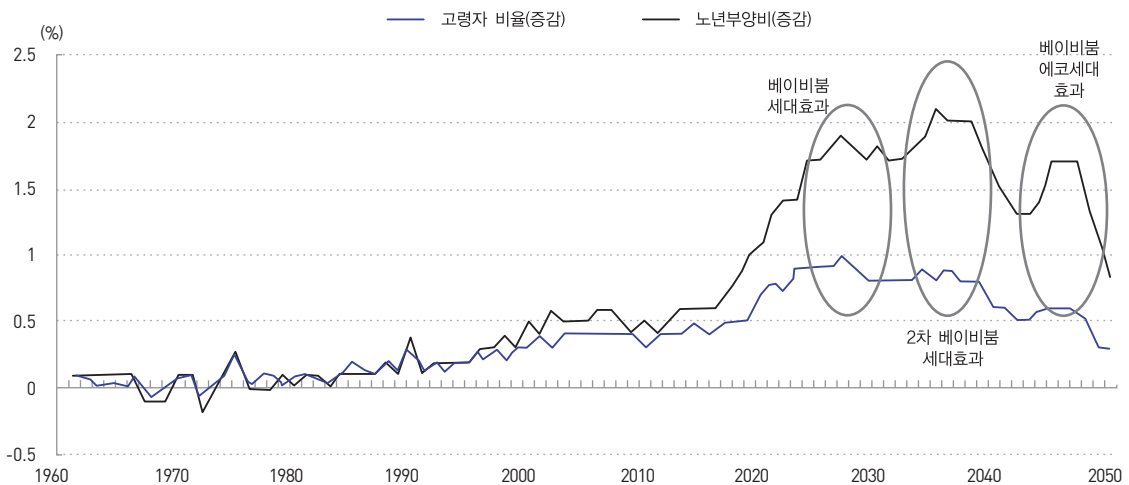
또한 이들 세 지점의 노년부양비 역시 뚜렷이 증가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의 노년부양비 상승률은 1.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1.8%,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44년에는 1.4%로 이전 시기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뚜렷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그림 II-12).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여기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개인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표 II-3). 먼저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83.5%는 ‘기혼유배우’인 것으로 나타나며, ‘미혼’은 3.7%, ‘사별’ 4.3%, ‘이혼’ 8.5%로 ‘기혼유배우’의 비중이 높다.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의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57.7%, 56~64세는 80.7%, 35~46세는 79.5%, 24~34세는 37.9%로 모든 세대 중 베이비붐 세대의 유배우율이 가장 높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만 25.7세로 평균 20대 중반에 결혼(초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2]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화¹⁾ 추이: 1960~2050



주: 1) 고령자 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자녀수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 주도 가족계획사업의 출생률 억제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형의 인구 구조로 전환을 이루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1955-1963년에 출생하여 평균 25.7세에 결혼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출산을 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추산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계획출산을 하던 시기로, 특히 1970년대는 성별 구분 없이 두 자녀 낳기가 장려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명의 비중이 63.9%로 가장 높으며, 3명 이상은 18.6%, 1명은 15.6%, 무자녀는 2.0%로 나타난다. 자녀수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적어지는데, 베이비붐 이후 세대인 35-46세는 자녀수 2명이 62.9%, 1명

20.6%, 3명 이상은 13.4%인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56-64세는 3명 이상 47.9% 2명은 41.6%, 65세 이상은 3명 이상 80.1%로 나타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2.0명이며, 65세 이상은 4.0명, 56-64세는 2.6명, 35-46세는 1.9명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44.7%, 대졸 이상 27.7%, 중졸 17.3%, 초졸 이하 10.3% 순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27.7%로 젊은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전 세대의 대학 이상의 비중인 8.7%(65세 이상), 15.9%(56-64세)에 비하면 각각 19.0%p, 11.8%p 높은 수준이다.

교육수준과 함께 종교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

〈표 II-3〉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2010

(%)

구분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47-55세)	이후 세대	
	65세 이상	56-64세		35-46세	24-34세
혼인상태	미혼	0.6	3.7	13.6	61.0
	유배우	57.7	83.5	79.5	37.9
	사별	39.7	4.3	1.0	0.1
	이혼	1.9	8.5	6.0	1.0
평균초혼연령		23.3세	25.7세	27세	26.5세
출생자녀수	0명	1.5	2.0	3.1	15.9
	1명	5.8	15.6	20.6	44.8
	2명	12.6	63.9	62.9	34.4
	3명이상	80.1	18.6	13.4	4.9
평균출생자녀수		4.0명	2.0명	1.9명	1.3명
교육수준	초졸 이하	62.9	10.3	1.4	0.3
	중학교	13.9	17.3	3.9	0.9
	고등학교	14.5	44.7	45.5	23.8
	대학교	7.6	23.3	43.1	68.8
	대학원	1.1	4.4	6.2	6.1
종교 ¹⁾	불교	52.1	48.2	41.8	39.7
	개신교	26.5	29.5	34.9	35.5
	천주교	18.2	20.5	21.4	23.2
	유교	1.4	0.3	0.2	0.2
	기타	1.8	1.5	1.6	1.5

주: 1) 2010년도에는 종교가 조사되지 않아 2005년도 자료를 사용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2010.

의 종교별 비중을 살펴보면 불교가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개신교 29.5%, 천주교 20.5% 순으로 불교보다는 기독교의 비중이 1.8%p 높다. 종교 분포는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불교와 유교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은 더 낮다. 반면 이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불교와 유교의 비중은 더 낮은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은 더 높다.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전통적인 사상이 보다 강조되는 종교라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전통이나 인습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적어도 이전 세대보다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일정부분 경험했으며, 전통주의 가치관보다는 근대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선호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중 73.9%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에 속하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0.3%, 단독주택 35.6% 순이며,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는 64.4%이며, 전세 17.7%, 월세 14.0%, 기타는 4.0%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에 47~55세에 이르는 연령 집단으로 노동시장에서 중년층(45~54세)의 위치에 해당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점하는 위치와 특성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상회하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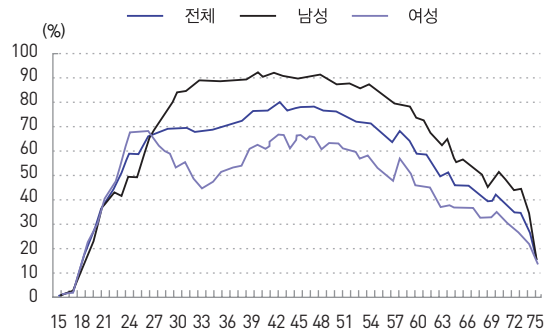
높은 수준이다.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특성은 단적으로 말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로 요약되는데, 이는 은퇴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미비와 한국 특유의 일문화, 고령층의 높은 실망 실업률¹⁾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중·고령자들에게 친화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데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특히 45~54세의 중년기는 개인의 근로생애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정점을 이루거나, 정점을 이룬 후 하강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을 제시하기 위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에코세대²⁾를 설정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 은퇴세대라면 에코세대는 진입세대로 두 세대가 노동시장의 세대교체 집단임과 동시에 향후 노동공급 추이에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림 II-13]의 연령별 고용률 곡선을 살펴보면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과 은퇴의 패턴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47~55세)는 고용률 최고점을 이룬 후 탈퇴가 시작되는 시점인 반면, 에코세대(25~31세)는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시점으로, 에코세대 남성보다 에코세대 여성의 이른 노동시장 진입이 관찰된다.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표이다(표 II-4).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74.6%로 4명 중 3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가 61.5%, 비임금근로자 38.5%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보다 23.0%p 높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

1) ‘실망실업자’란 구직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 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

2) 에코세대는 1979~1985년 출생자로 정의하였다.

[그림 II-13] 연령별 고용률¹⁾: 2010

주: 1)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용직은 34.3%, 임시직 18.2%, 일용직 8.9%, 고용주 9.9%, 자영자 22.2%, 무급종사자 6.4%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상용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4.3%에 불과하다. 반면 에코세대의 고용률은 68.2%로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보다 낮는데, 이는 에코세대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완료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에코세대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91.0%, 비임금근로자 9.0%로,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61.5%에 불과한데 반해 거의 대다수의 에코세대가 임금부문으로 진입함을 알 수 있다(표 II-4).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산업 분포는 어떠한가?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베이비붐 세대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16.8%, 도매 및 소매업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1.5%, 건설업 9.9%, 운수·통신업 9.1% 순으로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숙박업(3.4%p), 건설업(2.8%p), 운수·통신업(1.0%p), 제조업(0.9%p) 등으로 나타난다. 좀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면 제조

〈표 II-4〉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 2010

	베이비붐세대 (47-55세)	에코세대 (25-31세)
고용률	74.6	68.2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61.5	91.0
비임금근로자	38.5	9.0
계	100.0	100.0
종사상지위		
상용직	34.3	64.6
임시직	18.2	23.3
일용직	8.9	3.3
고용주	9.9	1.8
자영자	22.2	5.0
무급종사자	6.4	1.9
계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업 중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운수업 중에서는 육상 운송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베

〈표 II-5〉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 분포: 2010

구분	전체	베이비붐 세대 (47-55세)
농림어업 및 광업	7.7	6.4
제조업	15.9	16.8
건설업	7.1	9.9
전기·가스, 수도사업	0.4	0.4
도소매업	15.1	14.1
음식숙박업	8.1	11.5
운수·통신업	8.1	9.1
금융 및 보험업	3.2	2.6
부동산 및 임대업	2.1	2.0
사업서비스업	4.1	3.4
공공 행정업	5.0	4.9
교육 서비스업	7.8	6.1
보건 및 사회복지업	4.3	3.0
오락, 문화산업	1.6	1.1
기타	9.5	8.7
계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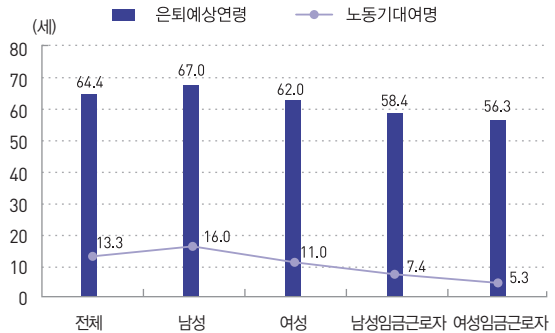
이비뿔 세대는 임시직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은 고용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비뿔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화이트 칼라 상층부의 관리직 및 제조업의 탈기술 부문, 육상운송업, 일부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원화된 한편 제조업 부문의 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은퇴이후 노동공백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베이비뿔 세대의 은퇴와 노동공급 전망

앞서 베이비뿔 세대의 개인특성 및 경제활동 현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정년이 '55세' 임을 감안한다면 베이비뿔 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앞으로 은퇴가 예상되는 대규모 인구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성별, 취업형태별, 직업과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작성된 '노동생명표³⁾'를 통해 한국 베이비뿔 세대의 예상 은퇴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주요 연령별 노동기대여명은 25세는 31.5년, 35세는 24.9년, 45세는 17.7년, 55세는 10.6년이며, 베이비뿔 세대의 노동기대여명은 평균 13.3년으로 약 64.4세에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기대여명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시점이 좀 더 늦다. 이는 노동생명표 작성 방식이 현재의 성·연령별 취업확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뿔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그림 II-14] 베이비뿔 세대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



출처: 통계청, 『생명표』, 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남성은 16.0년, 여성은 11.0년으로 베이비뿔 남성은 67세, 베이비뿔 여성은 62세에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 및 취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뿔 남성 임금근로자는 58.4세에 여성 임금근로자는 56.3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뿔 세대의 은퇴예상시점은 직종별로 다르다. 서비스·판매직은 63.1세, 농어업직은 61.9세, 준전문직은 53.3세, 사무직은 51.9세로 직종별로 은퇴시점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주된 퇴직연령이 '55세' 임을 감안한다면 노동생명표를 통해 작성된 베이비뿔 세대의 은퇴연령은 제도적 은퇴연령보다는 매우 늦은 시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에도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령 취업자의 높은 자영업 비중과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최종 은퇴시점을 늦추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 인구

3) 생명표(Life Table)란 사망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대여명을 산출한 표로 생명표 작성방식을 개인의 근로생애에 적용하면 노동기대여명(work-life expectancy)을 산출할 수 있다.

(15-64세)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2016년(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역시 고령화되는 한편 노동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생명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은퇴시점을 가늠해 본 결과, 현재 취업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13.3년 동안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동력 공급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서는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향후 노동공급 추이를 전망하고,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 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6〉은 성별 취업인구의 전망(2010-2050년)이다. 전체 노동력 규모의 감소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연령구간별 노동력 인구의 증감 패턴에는 성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15-59세 연령구간의 노동력 규모는 2010-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인

구수 감소로 인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취업자 규모는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 15-49세 연령구간의 노동력 규모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50-59세 연령구간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한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 여성 취업자 규모는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I-6).

[그림 II-15]는 각 시기별 노동력 피라미드이다. 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봉우리(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가 존재하는데, 추계된 노동력 구조 역시 이러한 구조를 따른다. [그림 II-15]를 통해 시기별 전체 노동력 규모 및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노동력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2010년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 규모는 531만 명, 에코세대는 361만 명으로 각각 전체 노동력의 22.7%, 15.5%를 차지한다. 한편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진행되어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 규모는 375만 명(15.5%)으로 줄어드는 반면, 에코세대는 388만 명(1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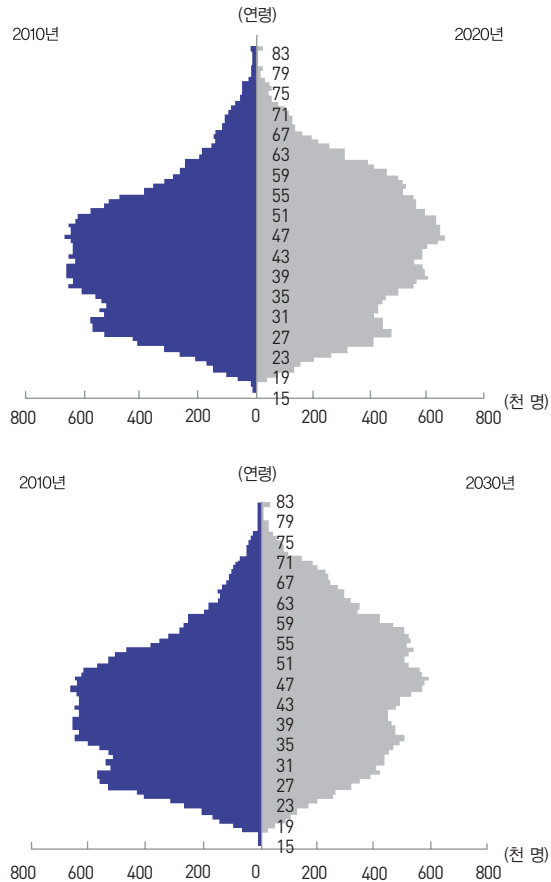
〈표 II-6〉 성별 취업인구 전망¹⁾: 2010-2050

(천 명)

	남성				여성			
	2010	2020	2030	2050	2010	2020	2030	2050
전체	13,711	14,311	13,774	10,558	9,638	9,822	9,050	6,801
15-19세	57	45	34	27	123	101	77	62
20-29세	1,713	1,614	1,129	833	1,895	1,751	1,241	968
30-39세	3,720	3,159	3,048	1,752	2,089	1,719	1,594	960
40-49세	3,866	3,701	3,152	2,099	2,611	2,456	2,024	1,339
50-59세	3,820	3,387	3,258	2,725	1,881	2,259	2,120	1,637
60-69세	1,118	1,815	2,164	1,803	713	1,127	1,343	1,038
70-79세	380	516	876	1,049	292	354	580	648
80세 이상	36	84	112	271	32	53	70	149

주: 1) 「인구추계자료(2006)」와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로 작성된 추계치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그림 II-15] 노동력 구조 전망⁴⁾: 2010-2030

주: 1) 「인구추계자료(2006)」와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로 작성된 추계치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203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약 199만 명만이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 다방면에 큰 파급효과를 갖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또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순차적인 은퇴가 갖는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지

적되는 것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이다. 이 글에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직 상층부의 관리직과 건설업, 육상운송업, 섬유·의복·가죽가방 제조업 등으로,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⁴⁾의 은퇴로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인력의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은 장기간의 숙련을 요하는 반면 청년층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공백이 우려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둔 반면 후자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진입을 앞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두 세대의 일자리 지점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에코세대가 주로 임금부문의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상용직의 비중은 매우 낮다. 또한 두 세대 간 직·산업 분포 양상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두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이 상이하며, 노동시장이 이미 연령분절적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개인적 수준에서 한

4) 단카이 세대(團塊世代)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이다.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인빈곤’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늦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른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취업자들이 은퇴 후 경험하는 일자리는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의 확충 및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들과 견주어 보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고령자를 위한 복지체계가 미흡하고,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은퇴’란 안정적인 임금근로 후 연금생활을 하는 중산층 계급에 한정된 개념으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이르러 순차적인 은퇴가 예상되지만, 현재의 성·연령별 취업확률을 가정한다면 이들은 향후 수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견되는 바, 향후 고용시장 정책은 고령인력의 활용 및 재취업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박시내(통계개발원)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요 약

- 근로자 특성별로 임금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 특히,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는 30-59세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양육 등에 의한 경력단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300인 이상 대규모 및 유노조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었으며, 근무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구조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근(2004-2010년)의 특징을 보면, 상용직과 정규직의 비중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04년 8월 52.8%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동월에는 59.5%가 되었다. 정규직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4년(63.0%)에 비해 2010년(66.7%)에 증가하였다. 상용직 및 정규직 각각은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고 부가급부 등의 혜택이 있는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수준 개선은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된다.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수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임금은 근로자가 공급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는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 및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집단 간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 차이가 있으며, 2004년 이래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월평균임금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임금근로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평소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은 각각 20시간과 57만 원으로 같은 시기 전일제 근로자의 46시간과 20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이 근로시간과 관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 비교

임금수준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는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신

광영, 2011). [그림 II-16]은 OECD 국가들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을 비율(%)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이의 크기는 사회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수준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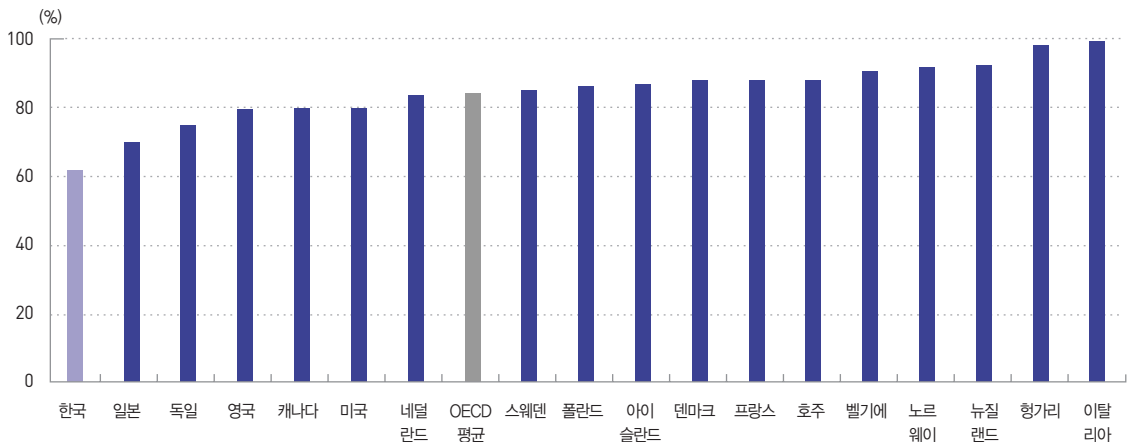
〈표 II-7〉은 2004년과 2010년 남성과 여성 전일

〈표 II-7〉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만 원, 시간, 개월)					
		평균 임금	중위 임금	근로 시간	근속 기간
2004	전체	162	140	49.8	56.2
	남성	191	170	50.6	68.8
	여성	118	100	48.7	36.7
2010	전체	209	175	45.8	64.3
	남성	245	200	46.2	75.6
	여성	154	130	45.1	46.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그림 II-16] 전일제 근로자 중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수준 국제비교¹⁾: 2008



주: 1) 네덜란드는 2005년, 벨기에와 프랑스는 2007년 자료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0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주당평소근로시간 및 평균근속기간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두 가지를 제시하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집단 간 비교시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중위수는 평균값에 비해 극단값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임금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2010년 전일제 근로자 중 남성의 임금은 200만 원, 여성의 임금은 130만 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은 65.0% 정도로 나타나 임금수준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이 2004년에는 58.8%였으나, 2010년에는 65.0%로 증가해 임금수준에서의 성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OECD, 2010).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 인적자본 투자 증대와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임금수준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정진화, 2007).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게 일하기 때문일까? 성별에 따른 주당평소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임금수준 차이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남성은 46.2시간, 여성은 45.1시간으로 약 1시간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나, 월평균임금에서는 약 35.0%의 차이가 있었다. 2004-2010년간 근로시간의 감소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위 기간 동안 전일제 근로자 전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은 4시간이었으나,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은 4.4시간 여성은 3.6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남성은 75.6개월, 여성은 46.8개월로 남성대비 여성의 근속기간은 61.9%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여성에게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의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의 차이와 유사한 정도이다.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

임금수준은 성별 이외에도 연령 및 근속기간,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 특성들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들이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혹은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된 경험과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령대별 임금수준은 청년기 이후 임금수준이 증가하다가 중·장년기에 최고점에 이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II-8>을 보면, 2010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평균임금의 경우 40-49세, 중위임금의 경우 30-49세이며, 2004년과 비교할 때 이 집단의 임금상승률은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 연령대별 근로시간은 임금수준과 반대방향이 다. 임금수준이 낮은 집단이 임금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둘째, 임금 최고점과 근속기간 최고점이 차이가 있었다. 근속기간은 연령에

〈표 II-8〉 전일제 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만 원, %, 시간, 개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전체	남	여	비중 ¹⁾		
2004	15-19세	79	75	73	75	102.7	51.3	4.1
	20-24세	106	100	100	100	100.0	50.2	13.4
	25-29세	141	138	150	120	80.0	49.2	26.5
	30-39세	179	170	190	100	52.6	49.2	53.5
	40-49세	190	150	200	92	46.0	49.6	83.8
	50-59세	173	125	160	80	50.0	50.9	96.0
	60세 이상	96	78	90	60	66.7	53.9	40.4
2010	15-19세	91	80	80	88	110.0	47.1	3.1
	20-24세	129	120	120	120	100.0	46.1	10.7
	25-29세	171	160	170	150	88.2	45.0	25.5
	30-39세	225	200	230	155	67.4	44.8	56.5
	40-49세	242	200	250	120	48.0	45.6	87.6
	50-59세	219	150	210	108	51.4	46.7	97.5
	60세 이상	139	100	115	80	69.6	49.4	52.8

주: 1) 비중은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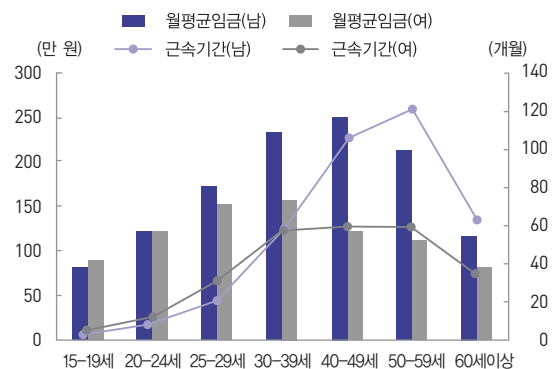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59세에서 97.5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에서 연공체제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연령 및 근속기간은 임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마련이나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최고로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04년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근속기간은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의 근속기간은 증가하였는데, 이 연령층의 증가폭은 중장년층에 비해서도 높았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조건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 II-17]을 보면 임금 최고점이 남성은 40-49세, 여성은 이보다 낮은 30-39세로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근속기간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최고 임금의 시점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0-39세까지는 남녀 모두 연령 증가에 따라서 근속기간이 증가하며, 일부 구간에

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30-39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근속기간에 있어서 남성은 지속적인 증가를, 여성은 정체를 보이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기간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M자형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II-17] 성별에 따른 월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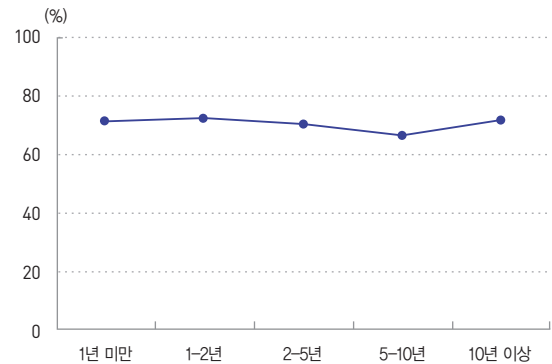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8.

과 관계가 깊다. 최고점일 때의 임금수준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최고 임금수준을 보인 30-39세에서는 남성과의 임금수준 차이가 32.6%였으나, 남성이 최고 임금수준을 보인 40-49세에서 여성과의 임금수준 차이는 50%에 가까웠다.

동일 근속기간 하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수준은 어떠할까? [그림 II-18]은 2010년 전일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을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10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2004-2010년간 그 추세를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서 2-5년, 5-10년 사이에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2008년 이후 5-10년인 경우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의 낮은 추세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임금수준에서의 성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이 시기는 직장에서의 승진기회가 제공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같은 장벽

[그림 II-18] 근속기간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 20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 8.

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9〉의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고졸→초대졸→4년제 대졸 이상 순으로 임금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2010년의 학력별 임금비중을 보면, 중졸 이하는 40.0%, 고졸은 57.7%, 초대졸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4년제 대졸 이상 기준 중졸 이하와 고졸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초대졸의 임금

〈표 II-9〉 전일제 근로자의 학력별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만 원, %, 시간, 개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전체	남	여	비중 ¹⁾		
2004	중졸 이하	105	90	120	80	66.7	52.7	37.5
	고졸	145	122	150	100	66.7	51.0	51.8
	초대졸	152	135	160	110	68.8	48.7	46.0
	4년제 대졸 이상	234	200	240	150	62.5	46.6	80.9
2010	중졸 이하	123	104	133	96	72.2	49.0	40.6
	고졸	177	150	180	120	66.7	47.2	56.4
	초대졸	197	180	200	150	75.0	44.9	53.7
	4년제 대졸 이상	295	260	300	200	66.7	43.0	89.6

주: 1) 비중은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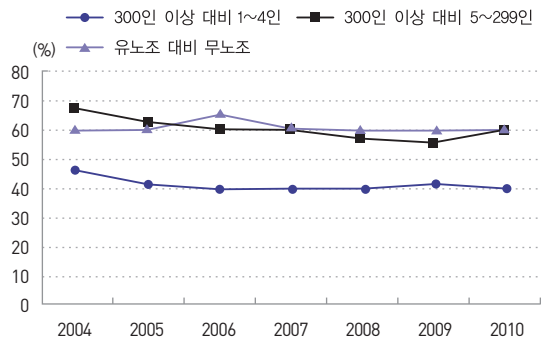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초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간의 차이가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전반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인적 특성 또한 바뀔 것임은 쉽게 예상가능한 일이다. 저학력자와 고령자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학력별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학교육 이상 집단에서 대학원졸과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졸과 일반대졸 간 임금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

개인이 속한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사업체 규모 및 노조 유무 등은 임금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특성들이다 (이인재·김태기, 2009).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수에 따라서 1~4인 사업체, 5~

299인 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해 보았다. <표 II-10>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299인, 1~4인 사업체 순이었다. 2010년 각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299인 사업체는 60.0%, 1~4인 사업체는 40.0% 수준이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림 II-19]에서

[그림 II-19] 사업체 특성별 임금수준 추세: 2004~20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표 II-10> 사업체 특성별 전일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2004, 2010

(만 원, %, 시간, 개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전체	남	여	비중 ¹⁾		
2004	1~4인	105	100	120	80	66.7	53.3	21.6
	5~299인	161	147	160	100	62.5	49.6	54.1
	300인 이상	241	220	250	150	60.0	46.5	112.3
2010	1~4인	136	120	150	100	66.7	49.4	28.1
	5~299인	207	180	200	130	65.0	45.6	62.3
	300인 이상	323	300	330	200	60.6	41.6	124.2
2004	무노조	143	120	150	95	63.3	50.6	40.6
	유노조	219	200	210	150	71.4	47.5	103.3
2010	무노조	184	150	190	120	63.2	46.7	45.0
	유노조	282	250	300	200	66.7	42.9	119.2

주: 1) 비중은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비중을 보면 최근 2004-2010년 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체 규모 간 임금차이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은 2004년 이전의 상황을 매월노동통계조사(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본 김주영 외(2009)의 연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1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사업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중은 66.7%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그 비중은 60.6%로 2004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어느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되느냐가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한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이 관계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수준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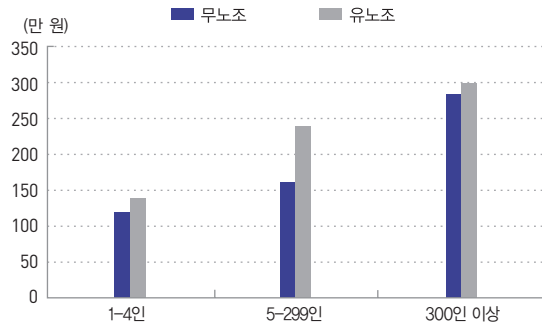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수준과의 관계를 보겠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포함한 각종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기능해 오고 있다(김장호, 2008). 따라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특성을 논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월평균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에서 임금수준이 높으며,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4-20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19). 2010년 노조 유무에 따른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중은 무노조

사업체와 유노조 사업체에서 각각 63.2%와 66.7%였는데,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성별 임금수준 차이는 2004년과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유노조 사업체에서의 차이는 4.7%p 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에 따른 임금수준은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서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되었던 높은 임금-낮은 근로시간-높은 근속기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중소기업·무노조 사업체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았는데 이들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무노조 사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2010년 8월 임금근로자 전체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5.4%인데 1-4인 및 5-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배, 2배 수준이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김주영 외, 2009).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8월 임금근로자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1-4인 사업체에서는 3.4%, 5-299인 사업체에서는 23.4%,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7.7%이다. 이에 따라서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를 교차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II-20]을 보면, 노조와 무관하게 사업체 규모가 큰 곳에서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규모의 사업체라는 조건 하에서는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에서 임금수준이 더 높

[그림 II-20] 사업체 규모와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 20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 8.

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을 구분한 후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임금수준은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포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0-49세에서 최고 임금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 특성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및 유노조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중소규모 및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고려한 것 이외에도 직업 및 산업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으며, 측정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체의 특성들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된다. 따라서 순수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특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도 특정 집단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장호, 2008,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 1988-2007”, 『노동경제논집』 31(3):75-105.
- 김주영 외, 2009,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이인재 · 김태기, 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2(3): 1-26.
- 정진화, 2007,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노동경제논집』 30(2):33-60.

박영실(통계개발원) · 한승훈(통계청)

Ⅲ.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 변화 • 김신호	84
가계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 김순미	94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 강석훈	103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 변화

요 약

-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분위 가구가 연평균 5.2%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7.1% 증가하였다. 반면, 소비지출은 각각 6.4%, 6.5%로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1분위 가구는 5분위 가구에 비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았다.
- 의식주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소비지출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주거·수도·광열비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수도·광열비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고 의류·신발은 5분위 가구가 컸다.
- 교통, 통신, 교육, 보건,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은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교통, 보건, 음식·숙박은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고, 반대로 통신, 교육은 5분위 가구가 컸다. 오락·문화는 1분위와 5분위 가구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의식주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은 1분위와 5분위 가구 모두 지출비중이 감소한 반면, 주거·수도·광열은 1분위 가구는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감소하였다. 음식·숙박, 교육, 통신, 보건의 양 분위 모두에서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은 5분위, 통신과 보건의 1분위 가구의 비중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 대표적인 선택재로 경제적 여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오락·문화비 지출은 양 분위 가구 모두에서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1분위 가구는 아직 소득수준이 낮고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데다, 주거, 보건 등의 비중이, 5분위 가구는 교육, 교통 등의 지출비중이 각각 불가피하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와 변화에 대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분위별 가계소득과 주요 소비비목별 소비지출 통계가 활용 가능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즉 지난 20년간 도시지역에 거

주하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이다.

단, 분석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와 하위 20%(1분위) 가구에 대하여,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액 전체 및 12대 비목별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구를 비교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비목별 소비성향의 차이와 변화를 횡단면 및 시계열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목금액 통계를 이용하였다.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상은 물가상승에 따른 변화부분을 제외하여, 소득은 실질적 구매력으로 소비는 물량으로 측정해야 유의미하다. 예컨대,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소비자물가 역시 10% 증가했다면, 이 소득을 지출하여 구매 가능한 소비재의 양이 변하지 않아서,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식료품 소비지출액이 10% 증가했다더라도 식료품 소비자물가가 10% 인상되었다면 실제 식료품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생활수준의 변화보다는 소득과 소비비목별 물가 및 소비량이 상호반응하며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명목금액 통계를 이용하였다.

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

가계 소비지출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도 늘린다. 그러나 소득증가와 동일한 비율로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

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 즉 저축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횡단면적으로 볼 때에도 성립된다. 즉,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다.

이와 같은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을 늘리는데, 향후 경제가 더 나아져서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기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를 억제할 가능성 역시 높다. 즉, 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소득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는 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 진다. 소득이 하락할 때도 소비를 줄이겠지만 역시 완만한 속도로 줄인다. 먹는 것을 늘리고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행과 같은 선택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 소득이 적었을 때에 비해, 요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비는 낮고 교통비는 높다. 이와 같은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율을 소비의 소득탄력성이라고 한다. 횡단면적으로 보아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적은 가구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높고, 교통비 지출 비중은 낮다. 전자는 소득탄력성이 작고 후자는 크다고 한다.

한편, 소비지출액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지출액이 소비량에 가격을 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이 변동되면 소비재의 특성에 따라 소비량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액도 다르게 변화한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을 줄이고 하락하면 늘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줄이거나 늘리는 양이 소비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다.

먼저, 가격상승률과 정반대의 비율로 소비량이 변화하는 소비재가 있다면, 가격이 변해도 소비지출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쌀과 같은 필수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해도 기본적인 소비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가격상승률보다 낮은 비율로 소비량을 줄이게 되어 소비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보다 적은 비율로 소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소비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영화 관람과 같은 선택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보다 더 큰 비율로 관람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율을 소비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후자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우리나라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의무성 지출인 직접세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1990년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13.0%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1990년 76.2%에서

1997년 71.5%로 낮아졌다. 소득이 지속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그에 못 미치는 비율로 증가하는 소비성향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뒤 2000년까지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여 평균소비성향은 80.6%까지 높아졌다. 소득 감소폭이 크면, 필수재가 포함된 소비지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소득보다 소비지출의 감소율이 적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2008년까지는 이전 수준의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소득이 다시 연평균 5.7%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연평균 4.9% 증가하였다. 그래서 평균소비성향도 2008년 76.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소득이 감소하고 2010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다시 증가하여 2010년 77.5%에 이르렀다.

〈표 III-1〉 전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천 원, %)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평균 소비성향
	소득액	연평균 증감률	지출액	연평균 증감률	
1990	792		603		76.2
1997	1,860	13.0	1,330	12.0	71.5
1998	1,620	-12.9	1,177	-11.5	72.7
1999	1,664	2.8	1,334	13.4	80.2
2000	1,842	5.7	1,484	4.9	80.6
2008	2,866		2,180		76.1
2009	2,833	-1.1	2,180	0.0	76.9
2010	2,984	5.3	2,313	6.1	77.5
'90-'10 (전체)	-	6.9 (276.9)	-	7.0 (283.4)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990년에서 2010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7.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소

득 증가율을 상회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고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1분위 가구만 따로 분리해서 보면,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11.6%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득액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연평균 1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세가 가파른 초기 3년간은 낮아졌으나, 1993년 소득둔화로 99.2%까지 높아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1997년에는 97.8%가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1998년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25.3% 감소하였고 소비지출도 이에는 못 미치지만 11.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처음으로 100%를 넘어 115.4%에 이르렀다. 평균소비성향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정체된 1999년에는 평균소비성향이 126.5%까지 치솟았다가, 2000년 다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14.4%로 낮아졌다.

이후 소득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은 이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여, 평균소비성향은 상승기조를 유지하였다. 2008년에는 소득의 5.7%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4.7% 상승하여 평균소비성향이 124.0%까지 높아졌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득은 전년대비 4.5% 감소했지만 소비지출은 물가안정,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득보다 큰 6.1%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소득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여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122.0%, 120.0%로 낮아졌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면, 소득은 연평균 5.2%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이보다 높은 6.4% 증가하였다.

〈표 III-2〉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천 원, %)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평균 소비성향
	소득액	연평균 증감률	지출액	연평균 증감률	
1990	355		340		95.6
1997	768	11.6	752	12.0	97.8
1998	574	-25.3	662	-11.9	115.4
1999	578	0.6	731	10.3	126.5
2000	704		805		114.4
2008	941	3.7	1,168	4.8	124.0
2009	899	-4.5	1,096	-6.1	122.0
2010	979	8.9	1,174	7.1	120.0
'90-'10 (전체)	-	5.2 (175.4)	-	6.4 (245.7)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2.7%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11.6% 증가를 상회하였지만, 소비지출은 연평균 11.1%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12.0% 증가에 못 미쳤다. 이는 소득이 많거나 증가폭이 클수록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세가 완만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1990년 71.8%에서 1997년 64.9%로 낮아졌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소득이 5.9% 감소하였는데,

〈표 III-3〉 5분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990~2010

(천 원, %)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평균 소비성향
	소득액	연평균 증감률	지출액	연평균 증감률	
1990	1,424		1,023		71.8
1997	3,292	12.7	2,137	11.1	64.9
1998	3,097	-5.9	1,927	-9.8	62.2
1999	3,165	2.2	2,158	12.0	68.2
2000	3,418		2,380		69.6
2008	5,464	6.0	3,381	4.5	61.9
2009	5,391	-1.3	3,475	2.8	64.5
2010	5,592	3.7	3,635	4.6	65.0
'90-'10 (전체)	-	7.1 (292.8)	-	6.5 (255.5-)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소비지출은 마이너스 9.8%로 더 크게 줄어 평균소비성향이 1분위 가구의 대폭 증가와는 반대로 62.2%로 감소하였다.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 증가는 소득이 크게 감소했지만 비중이 큰 필수적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반면, 5분위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감소율이 작았고, 소득탄력성이 큰 선택적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비목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9년에서 2000년 기간에는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크게 회복시켜 평균소비성향이 다시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8년 기간에도 소득은 연평균 6.0%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3.7% 증가를 상회하였지만, 소비지출은 4.5% 증가하여 1분위 가구의 4.8% 증가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1분위가 증가한 것과 반대로 2000년 69.6%에서 2008년 61.9%로 낮아졌다. 2009년과 2010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소득정체 여파로 평균소비성향이 다시 상승하였다.

1990년에서 2010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소득은 연평균 7.1%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이에 못 미치는 6.5% 증가하였다. 1분위 가구와 반대로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작은 것은 소득수준 자체가 높고 증가속도도 가팔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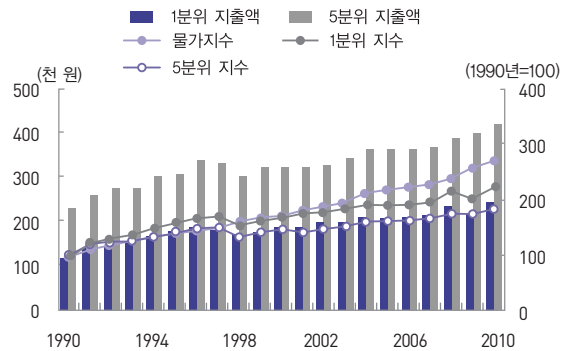
주요 비목별 소비지출액 변화

소득과 물가변화에 따른 소비량, 나아가 소비지출액의 변화양상은 소비비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소비지출을 주요 소비비목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의식주 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액은 1990년에서

[그림 III-1]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 1990~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2010년까지 지난 20년간 1분위 가구는 120.9%(연평균 4.0%)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83.4%(연평균 3.1%)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소비비목 소비자물가의 170.8%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49.9%와 87.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1990년 2.4배에서 2010년 1.7배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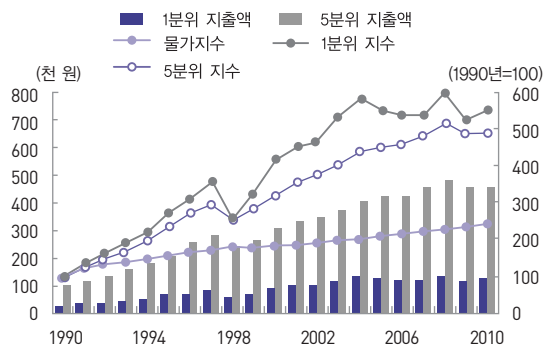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액이 소득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작고, 다른 비목에 비해 물가의 등락이 심함에도 지출 변동진폭이 작은 것은 필수재로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모두 낮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고 증가세도 가파른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지출이 더 적게 증가한 것은 필수재로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다음에 설명할 대체관계에 있는 외식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숙박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448.6%(연평균 8.9%)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389.5%(연평균 8.3%) 증가하였다. 동 비목 물가의 140.8%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소비량으로는 각각 약 307.8%와

248.7% 증가하였다. 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 분류의 이러한 증가는 앞서 언급한 대체관계에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4.3배에서 3.8배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외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숙박비 지출은 맞벌이 등 취업이 증가하고 선택재적 성격이 있어서 소득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였고, 소득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지출액 변동진폭이 특히, 1분위 가구에서 컸다. 5분위 가구는 최근 지출액의 절대수준으로도 식료품·비주류음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음식·숙박비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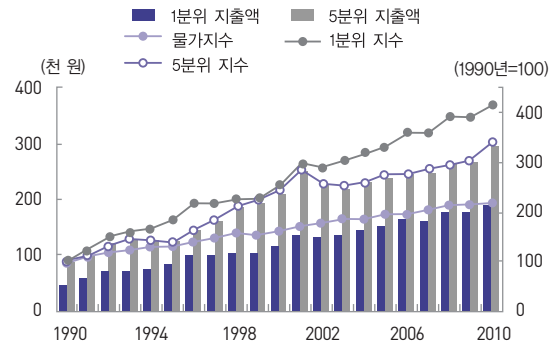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는 315.8%(연평균 7.4%), 5분위 가구는 239.6%(연평균 6.3%) 증가하였다. 물가의 121.3%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194.5%와 118.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1.9배에서 1.6배로 축소되었다.

동 비목 소비지출의 증가는 주로 연료의 물가상승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고,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5분위 가구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주로 아파트 거

[그림 III-3] 주거, 수도 및 광열비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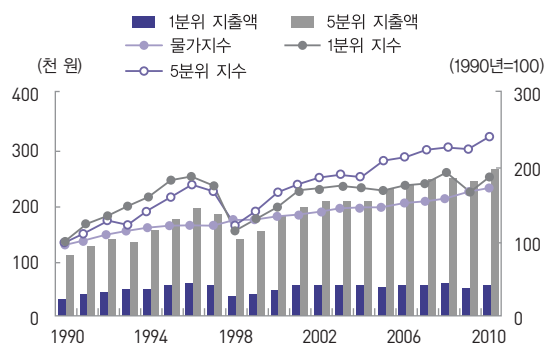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주 확산에 따른 관리비 지출 증가와 필수적 지출로서 소득탄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류·신발 소비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85.8%(연평균 3.1%)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140.9%(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동 물가 상승분 73.5%를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12.3%와 67.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3.7배에서 4.8배로 확대되었다. 동 비목도 식료품과 유사한 필수재적 성격이 있고 관련 물가 상승폭도 낮아서, 지난 20년간 지출액 증가가 낮은 쪽에 속한다.

[그림 III-4] 의류·신발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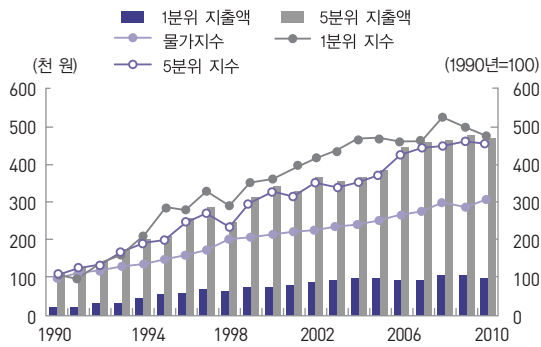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교통, 통신 및 교육비 지출

교통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지난 20년간 372.5%(연평균 8.1%)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357.0%(연평균 7.9%) 증가하였다. 동 소비비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209.8%를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162.7%와 147.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1990년 5.1배에서 2010년 4.9배로 축소되었다. 교통비는 1, 5분위 가구 모두 연료의 물가도 상승하고 사용량도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1분위 가구는 대중교통비 지출, 5분위 가구는 자동차 구입이 추가적인 지출증가 요인이다.

[그림 III-5] 교통비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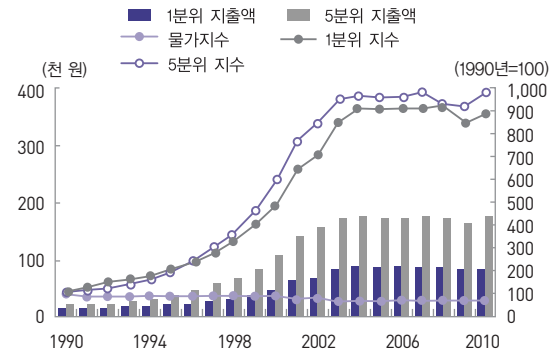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신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786.1%(연평균 11.5%), 5분위 가구는 877.5%(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동 비목 물가 하락분 31.7%를 감안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817.8%와 909.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 소비지출액은 1.9배에서 2.1배로 확대되었다.

통신비 지출은 다른 비목에 비하여 1, 5분위 가구 모두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과거 우편과 일반전화료 수준에서 인터넷, 핸드폰 등의 등장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동 비목의 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용량 포화상태에 기인하여 지출액이 횡보 또는 감소하다가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6] 통신비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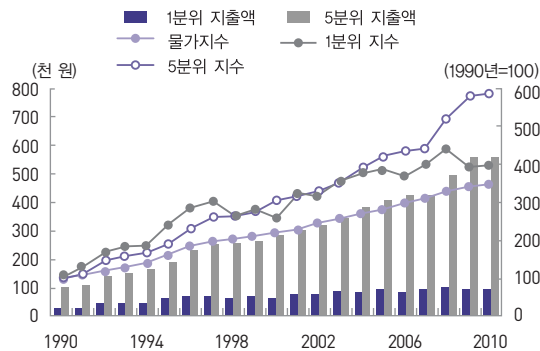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교육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296.3%(연평균 7.1%)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488.9%(연평균 9.3%) 증가하였다. 동일 비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251.4%를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44.9% 및 237.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4.1배에서 6.1배로 확대되었다.

교육비는 사교육 증가와 고등교육 물가상승 및 진학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교육비지출 격차가 큰 데는 1분위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고연령 또는 저연령층 가구가 많은 것도 주요 요인이고, 최근 지출격차가 더 확대된 데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치원비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에 따른 1분위 가구의 교육비지출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차이만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교육격차를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림 III-7] 교육비 지출액: 1990-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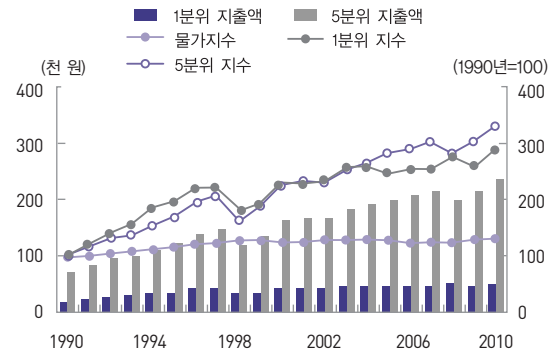
오락·문화 및 보건 지출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지난 20년간 189.2%(연평균 5.5%)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230.3%(연평균 6.2%) 증가하였다. 동 비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31.3%를 차감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157.9%와 199.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1990년 4.1배에서 2010년 4.6배로 확대되었다.

오락·문화비는 대표적인 선택재로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동 소비지출액도 증가폭이 컸으나, 이후 소득둔화에 따라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이에는 동 비목의 소비자물가가 적게 오르고, 한편으로 교육, 교통, 통신, 보건 등 다른 부분의 소비지출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424.9%(연평균 8.6%)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273.9%(연평균 6.8%) 증가하였다. 동 비목 소비자물가가 상승분 100.2%를 제외한 소비량으로는 각각 약 324.7%와 173.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2.7배에서 1.9배로 축소되었다.

[그림 III-8] 오락·문화비 지출액: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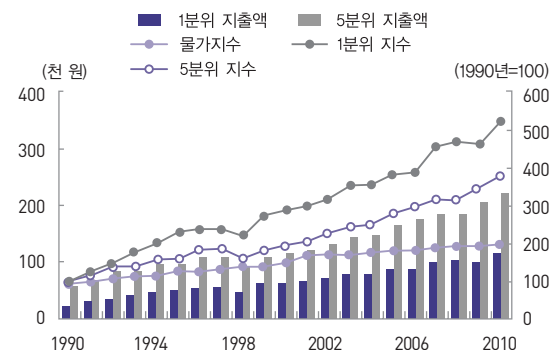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보건은 1분위와 5분위 가구간 지출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나아가 1분위 가구의 지출액 증가세가 더 가팔라서 차이가 더 축소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비목별 소비지출액 구성비 변화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경우 1990년에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32.0%, 주거·수도·광열이

[그림 III-9] 보건 지출액: 1990-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13.3%, 의류·신발이 8.7%로 각각 1, 2, 3위이었고, 교육이 6.8%, 음식·숙박과 보건의 동질환 6.4%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여전히 가장 비중이 컸지만 20.5%로 대폭 줄었고, 주거·수도·광열비는 16.0%로 증가하였다. 다음은 음식·숙박비 10.1%, 보건 9.8%, 교통 8.2% 등으로 순위가 변동되었다. 교육은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7.8%로 증가하였고, 통신비는 당초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하였다.

5분위 가구도 1990년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가장 큰 22.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의류·신발 10.6%, 교통 10.1%, 교육 9.3%, 음식·숙박 9.1%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교육이 1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통 13.0%, 음식·숙박 12.5%였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비중은 11.4%로 크게 낮아졌다.

2010년 기준으로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중을 비교하면, 1분위 가구는 필수재인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이 각각 20.5%, 16.0%로 1, 2위를 차지한 반면, 5분위 가구에서 동 비목들은 각각 11.4%, 8.2%로 4, 5위를 차지하였다. 대신 교육, 교통, 음식·숙박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통신과 보건은 1분위 가구가, 교육과 오락·문화는 5분위 가구가 각각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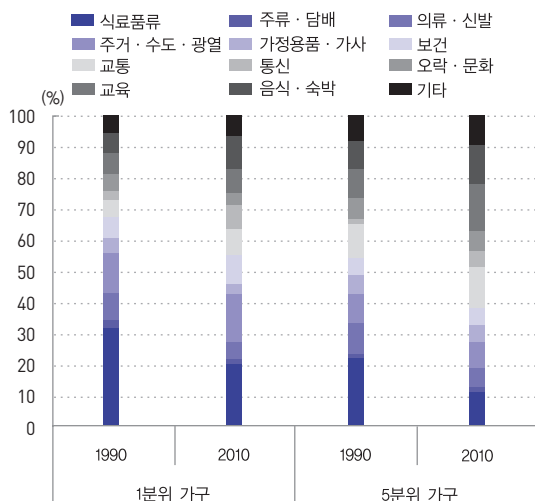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추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큰 폭의 가계수지 감소가 바로 회복기조로 돌아섰으나 성장추세가 이전에 비해 크게 완만해 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발 위기가 아니라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계수지의 구조와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을 1분위와 5분위 가구로 나누어서 보면, 소득은 1분위 가구가 지난 20년간 연평균 5.2% 증가한 반면, 5분위 가구는 7.1%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각각 6.4%, 6.5%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1분위 가구는 소득보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컸으며,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충격을 5분위 가구에 비해 크게 받았다.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의식주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주거·수도·광열비는 아파트 거주가구 증가, 연료비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수도·광열비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고 의류·신발은 5분위 가구가 컸다.

이에 반해, 교통, 통신, 교육, 보건, 음식·숙박 등은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교통은 연료의 물가 상승과 사용량 증가가 주요인이고, 통신은 새로운

[그림 III-10] 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 1990, 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신수단의 등장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교육은 고등교육 학비인상과 진학률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보건은 노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숙박비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따른 외식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 보건, 음식·숙박비 지출은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고, 반대로 통신, 교육비 지출은 5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다. 단, 교육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는데 이후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분위 가구는 취약계층 학비지원 증가의 영향으로 횡보한 반면, 5분위 가구는 등록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컸다.

오락·문화 소비지출액은 대표적 선택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필수 지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교통, 통신, 보건, 교육비 등의 지출증가가 압력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5분위 가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의식주 중 식료품·비주류 음료, 의류·신발은 1분위와 5분위 가구 모두 지출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1분위 가구는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감소하였다. 음식·숙박, 교육, 통신, 보건은 양 분위 가구 모두에서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은 5분위 가구, 통신과 보건은 1분위 가구에서 각각 지출비중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오락·문화비 지출은 소득증가와 그에 따른 식료품비 등 필수재의 지출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5분위 가구 모두에서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동비목의 물가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기도 했지만, 1분위 가구는 소득증가세가 완만한데다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등의 지출비중이, 5분위 가구는 교육, 교통 등의 지출비중이 각각 관련 물가상승, 고령화, 기술발달, 경제·사회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김신호(통계청)

가계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요 약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010년 2.8%를 보여 OECD 국가 중 최저 5위 수준이다.
- 가계저축액은 전체 자산총액의 15%를 차지하며 적립식 저축과 목돈투자로 구성된다.
- 가계저축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동기이다.
- 가계의 자산총액 중 저축액의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 때 감소하며, 소득분위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노년부양비가 증가할 때, 연령이 증가할 때, 가계저축률은 감소한다.
-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가계소득 증가세의 둔화, 사회부담금의 증대, 가계부채의 증가,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의해 일어난다.

1988년 24.7%로 최고치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010년 2.8%까지 하락하여 OECD 국가 중 최저 5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저축률인 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가계저축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경제안정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가계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저축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10년까지의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경험하였고, 가계저축률은 두 차례(1998-2002년, 2004-2008년)에 걸쳐 급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저축률의 변화, 가계저축의 구성과 저축동기, 가계저축률의 실태 및 가계저축률의 하락원인을 알아 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조사』,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OECD 경제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들은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10년을 분석기간으로 보고, 전반적인 변화를 읽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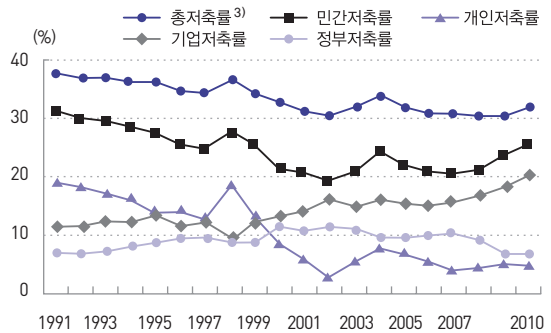
총저축률의 변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91년 37.9%이었으나 2010년에는 32.0%를 보여,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5.9%p의 감소세를 보였다. 총저축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저축률은 1991년 31.0%였으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경험하면서 2002년 최저저축률을 보였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25.2%가 되었다. 정부저축률은 1991년 6.9%이었으나 사회보장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2배가량 증가하였고, 그 이후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6.8%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저축률 중 개인저축률은 1991년 19.3%에서 1997년 6.7%p가 하락하여 12.6%의 저축률을 보였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전년대비 6.0%p가 증가한 18.6%를 보였지만 2002년에 최저 저축률인 3.1%를 보였고, 2010년에는 5.0%를 나타냈다.

이처럼 1997년과 2002년에 걸쳐 나타난 두 번의 급락현상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경험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계의 저축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저축률은 1998년 9.1%의 최저 저축률을 보인 것 외에는 1991년의 11.7%부터 2010년 20.2%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민간저축률 중 개인저축률과 기업저축률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역전 현상을 보여준다(그림 Ⅲ-11).

[그림 Ⅲ-11] 민간저축률¹⁾과 정부저축률²⁾: 1991-2010



주: 1) 민간저축률=개인저축률+기업저축률

2) 민간(정부)저축률=(민간(정부)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3) 총저축률=(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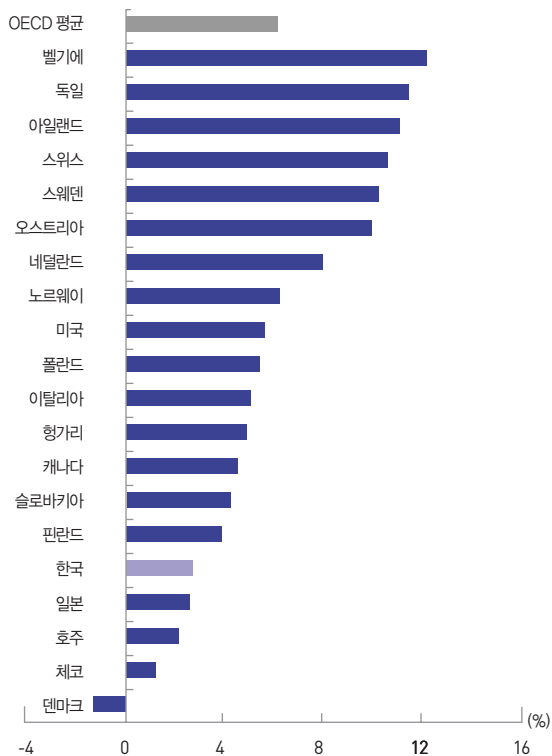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로 최고 저축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1.6%에서 2002년 0.4%로 21.2%p가 감소하였고, 카드대란 이후 2004년 8.4%에서 2008년 2.6%로 5.8%p가 하락하였다.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침체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교육, 교통, 통신비 등과 같이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소비지출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으로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반면 저축성향이 낮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가계저축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7년 24.0%를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로 12.2%를 보이며 2.8%를 보인 우리나라는, 덴마크 -1.2%, 체코 1.3%, 호주 2.2%, 일본 2.7%에 이어 5번째로 낮고, OECD 20개국의 평균 저축률인 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III-12).

[그림 III-12]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201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0.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저축률의 변동이 심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가계저축률은 1991년 25.7%였으나 2010년에는 22.9%p나 급락하여 2.8%로 감소하였다. 일본도 1991년 15.1%의 최고 저축률을 보였지만 2010년에는 2.7%를 나타냈다. 대조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최고 저축률에 비해 각각 1.4%p, 2.0%p가 하락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프랑스는 2002년 최고 저축률인 16.9%보다 오히려 1.0%p가 하락하여 15.9%를 보였다. 이처럼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 나라별 가계저축률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였다.

가계저축의 구성

가계저축은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 포함된다.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및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성되며, 금융자산에는 저축과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된다.

2010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가구당 자산총액은 평균 2억 7,268만 원이었다. 그중 금융자산액은 5,828만 원으로 자산총액의 21.4%를 차지하지만 부동산액은 자산총액에서 75.8%인 평균 2억 661만 원을 차지하여 금융자산액의 3배 정도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구가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의 실물 자산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액은 평균 4,089만 원으로 자산총액의 15.0%를 차지했다. 또, 저축액에서 적립식 저축액과 목돈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8%, 35.0%이며 기타저축액의 비중은 8.1%로 나타나 저축을 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립식 저축을 선호하였다.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주택액은 자산총액 중 42.4%를 차지하고, 토지액은 13.7%를 보여, 토지투자액보다 거주주택에 대한 투자액이 3배 정도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산총액 중에서 금융자산액의 비중은 부동산자산 비중에 비해 낮고, 특히 저축액의 비중은 거주주택의 비중에 비해 낮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가 저축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전체가구의 부채총액을 보면,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부채는 부채총액의 2/3를 차지한다. 거주주택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된 금융부채액 중에서 담보대출액은 신용대출액의 5배가량 되는데, 이는 담보대출을 하는 많은 가구들이 주택보유를 위한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중에서 거주주택의 비중이 크고 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담보대출의 비중이 큰 것은 저축액의 비중과 저축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가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자산을 보유한 반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59.5%였다. 또 자산보유 가구 중에서 대부분의 가구는 평균 5,871만 원의 금융자산액을 보유하였으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2/3정도로 평균 3억 1,253만 원을 보유하여 금융자산액에 비해 부동산액이 5.3배 이상 많았다.

자산총액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였고 평균 4,141만 원을 저축하였다. 특히 보유가구의 대부분이 평균 2,354만 원의 적립식 저축을 하는데 반해 보유가구의 30.6%만이 평균 4,684만 원의 목돈투자를 하였다. 즉, 적립식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목돈투자를 하는 가구보다 높았지만 적립식 저축의 평균 금액은 목돈투자 평균금액의 절반수준이었다.

한편 보유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평균 5,377만 원의 금융부채액을 보였다. 담보대출을 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1/3정도, 특히 거주주택을 담보로 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1/5을 나타냈다. 이처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평균 부채액이 평균 저축액을 능가하는 현상은 담보대출이 저축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표 III-4).

〈표 III-4〉 가계 자산총액과 금융자산 및 저축액(비중, 보유가구 비율): 2010

(단 원, %)

구분	전체가구		보유가구		
	평균	구성비	비율	평균	중위수
자산총액	27,268	100.0	99.8	27,314	14,000
금융자산	5,828	21.4	99.3	5,871	2,856
저축액	4,089	15.2	98.8	4,141	1,670
적립식	2,323	8.5	98.7	2,354	1,120
목돈투자	1,433	5.3	30.6	4,684	2,000
전·월세보증금	1,739	6.4	35.8	4,862	3,000
부동산	20,661	75.8	66.1	31,253	18,000
(거주주택) ¹⁾	11,564	42.4	57.7	20,046	13,000
(토지)	3,740	13.7	16.9	22,137	9,600
기타실물자산	779	2.9	73.8	1,056	590
부채총액	4,263	100.0	59.5	7,165	3,000
금융부채	2,884	67.6	53.6	5,377	2,126
담보대출	2,329	54.6	32.9	7,068	3,500
(거주주택)	1,303	30.6	20.2	6,440	4,000
신용대출	454	10.6	21.7	2,096	1,000
임대보증금	1,380	32.4	15.9	8,682	5,500
순자산	23,005	-	-	23,034	11,695

주: 1)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소유주택 제외.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2010.

저축동기

가계저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축동기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동기는 구체적으로 자녀교육비, 노후생활 대비,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 결혼/상제비, 주택 및 내구재 구입, 차입금 상환목적, 사업자금 마련 등이 있다.

다양한 저축동기 중에서 2001년 이후 가장 현저한 변화를 보인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서 다른 저축동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사업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목적, 기타 등의 저축동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의 예비적 저축동기는 2001년 31.8%이었으나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54.9%를 나타냈고, 2008년에는 47.2%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른 저축동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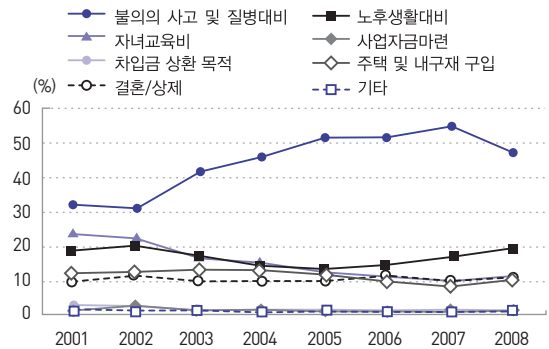
다른 저축동기의 추이를 살펴 보면,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동기는 2001년의 23.7%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0%를 나타냈고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한 11.6%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학자금대출 제도가 확산되어 저축여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는 2001년 18.6%에서 2005년 13.1%까지 감소했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9.1%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의 저축동기는 2001년의 11.5%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제도의 발전과 확산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08년에 9.8%로 감소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자금 마련 및 차입금 상환목적, 그리고 기타 목적의 저축동기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Ⅲ-13).

가구특성별 저축실태

전체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액과 구성은 가구주 연령에 따라 다르다. 또 가계자산에 포함되는 저축액의 비중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Ⅲ-13] 저축동기의 추이: 2001-2008



출처: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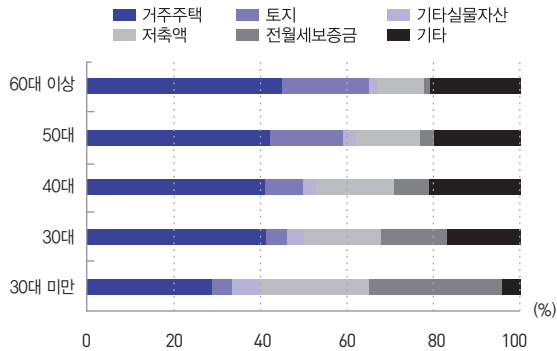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미만인 가구의 자산총액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거주주택, 저축액의 순이었다. 그러나 30대, 40대 가구는 거주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기타, 저축액이었으며, 50대, 60대 가구는 거주주택, 기타, 토지, 저축액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전체가구의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가계저축의 차이를 보면, 연령이 낮은 가구의 가계저축 비중은 연령이 높은 가구에 비해 높다. 30대 미만 가구의 저축액은 자산총액의 1/4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비중이 감소하여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1/10 정도를 보여, 30대 미만인 가구가 60대 이상의 가구보다 2.5배 가량 저축하였다.

또한 50대 및 60대 이상 가구는 낮은 연령대에 비해 자산총액의 구성순위 중에서 저축액의 순위가 낮았는데, 이는 연령이 낮으면 주택마련과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동기의 비중이 큰 반면, 연령이 높으면 자녀교육이나 결혼 및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그림 Ⅲ-14).

한편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분위별 자산총액과 저축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와 2분위

[그림 III-14]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및 저축액의 비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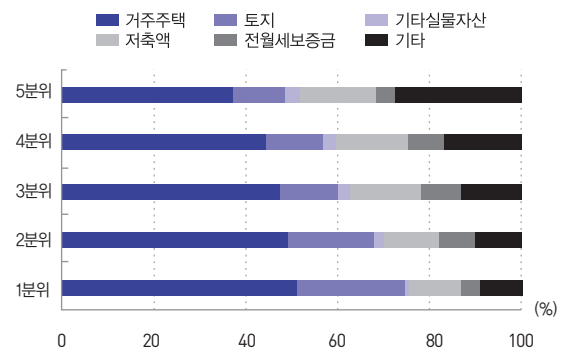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2010.

가구는 자산총액 중 거주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토지, 저축액이었다. 소득 3분위 가구도 자산 총액 중 거주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은 저축액, 기타의 순이었고,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는 거주주택, 기타, 저축액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 가계저축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저축액의 비중이 증가하여,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 비중은 9.8%인데 반해 5분위 가구는 16.6%를 보였다. 이처럼 1분위 가구의 저축액 비중에 비해 5분위 가구의 저축액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자산총액과 금융자산의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러한 자산 중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림 III-15).

가계저축은 인구구조 및 연령의 변화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년인구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경제안정의 기반 약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잠식시켜 가계소득과 가계저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가계저축률은 두 번에 걸친 급격한 하락과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한데 반해, 노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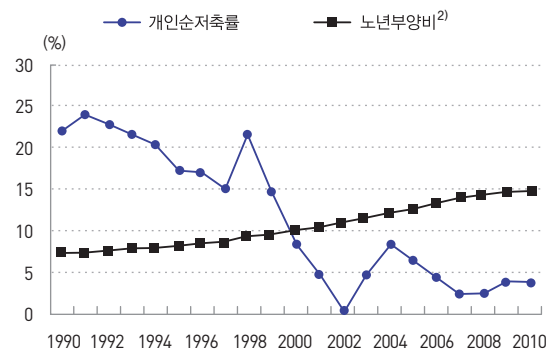
[그림 III-15]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저축액 비중: 2010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2010.

양비는 1990년 7.4%, 2000년 10.1%, 2010년 15.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상반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다(그림 III-16).

생애주기에서 유년기와 노년기는 청장년기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높고 저축성향이 낮게 나타난다. 30대 미만 가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 중 저축액의 비중은 24.9%인데 반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 중 저축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60대 이상의 경우는 10.9%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은 가구에 비해 낮은 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총액이

[그림 III-16] 고령화에 따른 가계저축률¹⁾: 1990~2010

주: 1) 개인순저축률 기준.

2)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고령자통계」, 2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낮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의 증가율이 높아 지지만, 이에 비해 저축액과 저축액의 증가율은 낮아 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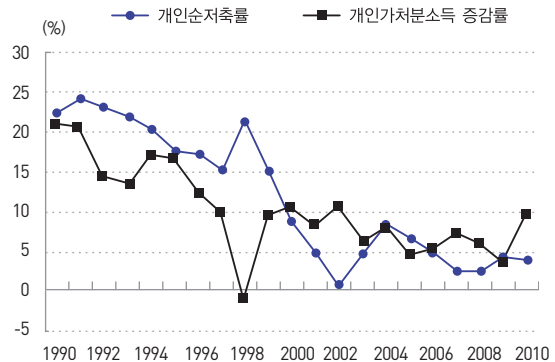
가계저축률 감소의 원인

1990년 대비 2010년에 나타난 가계저축률 감소에 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의해 가계소득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러한 소득증 가는 저축을 유인함으로써 가계저축률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에 걸쳐 가계저축률은 급 격한 하락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가계소득의 증가 율이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 12.7%를 보였으나 2000년에는 크게 낮아져 1990년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 율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축소 되고 노동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두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직 및 일용직 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처 분소득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자영업의 구조 조정으로 사업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저 축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그림 Ⅲ-17).

가계저축률 감소는 가계소득의 증가율 감소뿐 아니 라 사회부담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저축동기 와 저축여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체계가 완성되었다. 사회보험체 계의 적용은 가계의 사회부담금을 증가시켰다. 이러 한 결과로, 1990년 30.4%였던 사회부담금의 연평균

[그림 Ⅲ-17] 개인순저축률과 개인가처분소득 증감률¹⁾: 1990-2010



주: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전년 말기 대비 증감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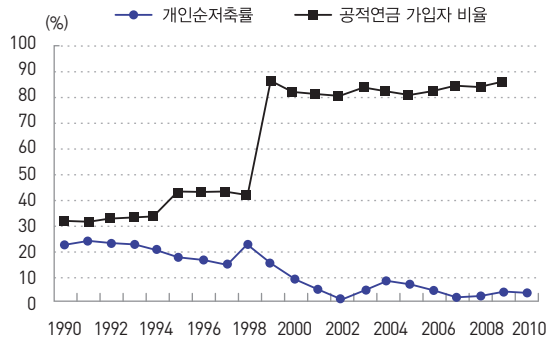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증감률은 지난 20년간 최고치를 보인 1993년의 33.6%와 최근치인 2010년의 8.5%의 비교에서 큰 감 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부담금 증감률의 전반적 인 감소세는 사회보험 체계의 안정화로 사적저축보 다는 공적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계저축을 대 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체계의 완성과 더불어 사회보험 대상의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1999년 취업자 대비 국민연 금 가입자의 비율은 199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여 80.3%를 나타냈다. 이처럼 연금가입의 확대는 개 인저축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공적연금가입자 비율과 개인순저축률과의 관계를 보면 공적연금가입 자 비율은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상승한 이후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순저축률은 1998년과 2004년에 일부 증가를 보이지만 전반적으 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이 확대되는 시기는 개인순저축률의 하락시점과 유 사하여 부적 관계로 볼 수 있다(그림 Ⅲ-18).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저축

[그림 III-18]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¹⁾과 개인순저축률: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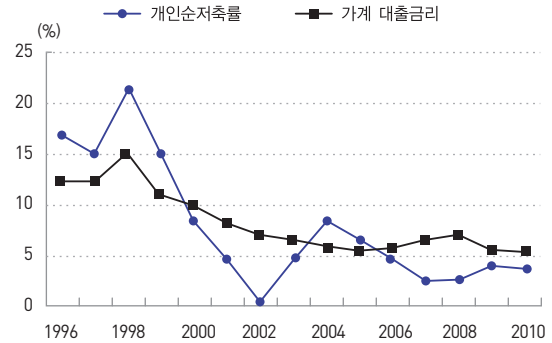


주: 1)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 (공적연금 가입자수 ÷ 18세 이상 취업자수) × 100
출처: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를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금리하락 등 차입 여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저금리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저축이 축소되었다. 1996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금리는 12.3%였으며 1998년에는 15.1%로 상승하였다. 그 이후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9.9%, 2010년에는 5.4%까지 하락하였다. 대출금리의 하락은 금융편의성에 의한 신용사용의 확대와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저축률 감소의 원인이 되었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 및 카드대란의 영향은 가계저축률의 하락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그림 III-19).

또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저축여력이 위축되었다. 주택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저축동기가 약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촉진되었고 결과적으로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연리는 2000년대 초반인 2001년 6.3%, 2002년 6.7%를 보였다. 그 후

[그림 III-19] 개인대출금리 비율¹⁾과 개인순저축률:
199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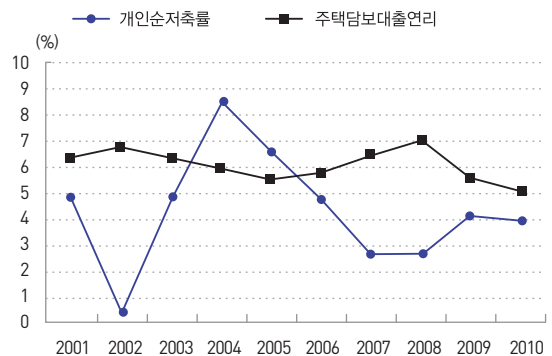


주: 1) 개인대출금리(%/년)는 가계 전체의 대출 금리를 말함.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감소하여 2005년에는 5.4%까지 낮아졌고,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는 7%를 보였지만 2009년 5.5%, 2010년 5%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연리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연리의 변동은 가계저축률의 변동과 대조적인 형태를 보여 주택담보대출연리가 증가할 때 가계저축률은 감소하였다(그림 III-20).

가계저축률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가계소비패턴은 서비스의 확대와 소비의 고급화로 교육, 교통, 통신 등

[그림 III-20] 주택담보대출연리와 개인순저축률: 2001-201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의 선택적 소비지출이 필수적 소비지출로 전환되었다.

1990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 통신,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였으나 2000년대에는 27.3%, 2010년에는 29.7%로 급증하였다.

특히 대학진학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의해 교육비 비중은 1.5배 증가하였고, 모바일의 확산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의해 교통, 통신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가계저축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계저축률의 감소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계소득 증가, 가계의 둔화, 사회부담금의 확대, 가계부채 증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계소득의 증가세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부담금은 사적저축의 대체수단이므로 기금투

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노후소득에 대한 기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신용사용과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과 실질금리간의 격차를 줄이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시켜 저축유인을 높일도록 해야 한다.

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이 필수적 소비지출로 변화된 교육, 교통, 통신비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충,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여 가계저축을 늘리도록 한다.

노년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생애주기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액과 저축유형 등의 노후대책을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김순미(충남대학교)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요 약

- 가구주 연령별로 볼 때 한국가구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최대가 되는 가구주 연령은 50대였으나 최근에 오히려 낮아져서 2010년에는 40대로 나타난다.
-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가구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구소비에서는 의료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한국가구는 가구주가 고령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급격히 하락한다.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이러한 급락을 막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 청소년기를 지나 중년기가 되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데, 이 때에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저축함으로써 노인시기를 대비한다. 노인시기에는 비록 경제활동을 통해 약간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년기에 축적한 저축을 이용하여 잔여 생애의 소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는 그 개인이 속한 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가구단위로 수집된 소비자료를 개인단위로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는 주로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가구소득과 가구소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도 가구주 연령별로 가구소득과 가구소비의 변화를 살펴본다.

한편, 개인이나 가구주의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를 관찰하려면 동일한 개인이나 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등과 같이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소득과 가구단위의 소비를 조사한 패널자료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서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소득과 소비자료에 대하여 동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¹⁾.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²⁾.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는 경우 이 때 나타난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의 변화 내에는 가구주의 연령효과 뿐만 아니라 출생년도 효과,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등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자료 분석은 횡단면분석으로서 생애별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분석하기보다는 연령별 소득 및 소비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변화

다음의 <표 III-5>는 가구주 연령별, 가구 종류별 가구소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10년도 30대 이

<표 III-5>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득변화 추이¹⁾: 1990-2010

(지수)

구분	평균 임금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199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26.5	129.1	123.1
	50-59세	33.1	135.6	130.7
	60세 이상	95.8	117.4	85.5
200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16.9	117.0	123.1
	50-59세	116.0	118.4	120.9
	60세 이상	80.3	88.5	85.9
201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09.2	109.0	120.3
	50-59세	106.9	108.0	118.8
	60세 이상	65.4	71.0	73.8

주: 1) 39세 이하 가구를 100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하 가구의 전체 소득을 100으로 볼 때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109.2, 50대는 106.9, 60대 이상은 65.4로 나타난다. 30대에 비하여 가구주 연령이 40대나 50대로 증가해도 가구소득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6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2010년의 연령별 소득분포의 모습은 1990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1990년의 전체가구의 경우 50대의 소득은 133.1에 달하여 30대 이하보다 33.1%나 증가하고 있으며, 60대에도 95.8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에 전체가구의 소득이 최고에 달하는 경우는 40대와 50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50대의 상대적 소득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고 소득수준은 30대에 비해 16.9% 상승하는 데 불과하였고, 1990년에 95.8에 달했던 60대 이상의 소득수준은 2000년에는 80.3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0년에 더욱 강화되어 최고소득 연령대는 40대로 앞당겨졌으나, 최고소득 수준은 30대 이

1) 한편 개념적으로 볼 때 패널조사에서는 패널웨이브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가구가 과연 변경되기 전의 가구와 동일한 가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의 패널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자료가 생애주기개설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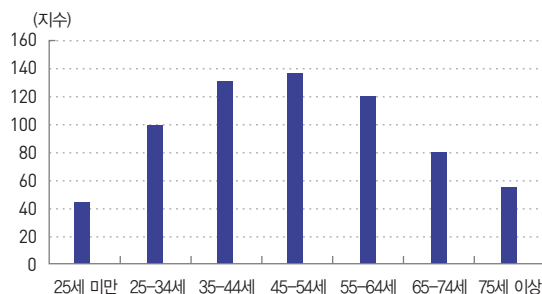
2) 가구소득과 가구소비를 분석할 때 가구소득분배를 연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하 대비 9.2% 높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60대 이상의 소득수준은 30대 이하 소득의 65.4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결국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수준이 최고인 연령대가 앞당겨지고 있으나, 소득수준 자체는 큰 폭의 증가는 없으며, 60대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최고소득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에서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연령의 증가가 곧 임금의 증가를 의미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시기가 50대 초반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을 나온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다른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50대 가구의 상대소득비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60대 이상의 가구에서 소득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이유는 주로 근로소득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하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층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잉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Ⅲ-21]과 [그림 Ⅲ-22]는 미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21] 미국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변화¹⁾: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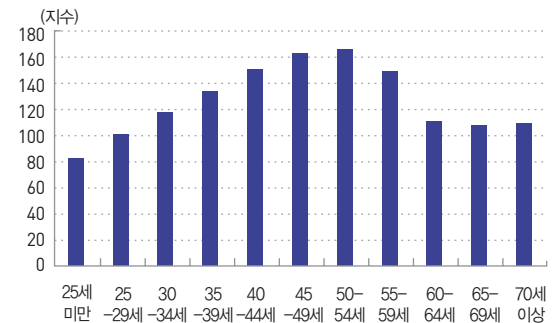
주: 1) 25-34세 가구소득을 100으로 함.

출처: 미국, 「소비자지출조사」, 2009. (<http://www.census.gov>)

세 국가에서 모두 기준 연령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대일 비교는 어려우나, [그림 Ⅲ-21]을 보면 미국가구의 경우에 가구주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한국가구의 경우보다 소득상승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55-64세가 되어도 급격한 소득하락은 나타나지 않으며, 65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크게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주된 은퇴시기가 65세 전후인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Ⅲ-22]는 일본가구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 일본에서 주목되는 점은 60세 이후의 가구소득수준으로 이는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세 나라의 비교결과를 볼 때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미만까지 소득수준의 변화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010년에는 근로자의 임금체계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의 비중이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60세 이후의 급격한 소득수준감소는 고령층에 대

[그림 Ⅲ-22]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변화¹⁾: 2010



주: 1) 25-29세 가구소득을 100으로 함.

출처: 일본, 「가계소득지출조사」, 2010. (<http://www.e-stat.go.jp>)

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공급증대에 따른 소득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Ⅲ-6>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 종류별 각종 소득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가구인 경우는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자와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77.2%에 달하여 전체의 3/4이상을 차지하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6.3%로 나타나 1/2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경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76.0%에 달하여 여전히 근로소득이 가장 중

요한 소득원을 차지하였다. 사업소득이 많은 근로자와 가구의 경우에는 30대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67.7%로 전체소득의 2/3를 차지하였으나, 60세 이상에서는 36.8%로 전체소득의 1/3로 떨어졌다.

재산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여 소득비중이 미미하였다. 이에 반해 이전소득의 비중은 9.3%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동 비중이 15.5%인 반면 비근로자가구인 경우에는 33.3%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가구에 자영업가구 뿐만 아니라 무직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60대 이상의 근로자와 가구에 대하여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1990년에 20.2%, 2000년 24.9%, 2010년 26.5%로서 매년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오면서 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혜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의 <표 Ⅲ-7>은 미국, 일본, 한국 고령층의 소득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전소득에서 사회보장급여, 개인 및 정부연금 등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4세에는 49.9%,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69.5%에 달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은 낮은 반면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데, 동 비중은 65-74세에는 4.5%,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9.7%에 달한다.

<표 Ⅲ-6>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득비중 추이: 2010 (%)

구분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근로소득/ 경상소득	39세 이하	77.2	90.9
	40-49세	67.3	90.8
	50-59세	67.4	89.6
	60세 이상	46.3	76.0
	전체 평균	67.3	89.5
사업소득/ 경상소득	39세 이하	15.4	3.6
	40-49세	25.2	4.0
	50-59세	26.4	5.6
	60세 이상	25.9	8.1
	전체 평균	23.1	4.5
재산소득/ 경상소득	39세 이하	0.2	0.2
	40-49세	0.2	0.2
	50-59세	0.5	0.6
	60세 이상	1.2	0.3
	전체 평균	0.4	0.3
이전소득/ 경상소득	39세 이하	7.2	5.2
	40-49세	7.3	5.0
	50-59세	5.8	4.2
	60세 이상	26.5	15.5
	전체 평균	9.3	5.6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표 III-7〉 미국, 일본, 한국 고령가구의 소득구성 비교¹⁾: 2009, 2010

(%)

	구분 ²⁾	65-74세	75세 이상
미국(2009)	세전소득	100.0	100.0
	임금과 봉급	39.7	19.1
	자영업소득	3.8	0.2
	사회보장, 개인 및 정부연금	49.9	69.5
	재산소득	4.5	9.7
<hr/>			
	구분 ²⁾	65-69세	70세 이상
일본(2010)	경상소득	100.0	100.0
	근로소득	64.5	54.1
	사업소득	0.7	1.6
	재산소득	0.5	0.5
	사회보장급여	34.3	43.8
<hr/>			
	구분 ²⁾	60세 이상	
한국(2010)	경상소득	100.0	
	근로소득	46.3	
	사업소득	25.9	
	재산소득	1.2	
	이전소득	26.5	

주: 1) 미국은 소비자지출조사의 결과(2009년), 일본은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 결과(2010년)임.

2) 한국과 일본의 소득은 유사함. 다만 한국의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는 공적이전소득만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의 경상소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미국의 소득개념은 없으며, 세전소득과 유사함. 한국의 근로소득은 미국의 임금과 봉급과 유사하며, 사업소득은 자영업소득과 유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 및 정부연금은 한국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형태로 이전소득에 포함되고, 미국의 개인연금은 한국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됨.

출처: 미국, 「소비자지출조사」, 2009. (<http://www.census.gov>); 일본, 「가계소득지출조사」, 2010. (<http://www.e-stat.go.jp>);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5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고령층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구성원의 근로소득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65-69세와 70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이 각각 79.9%, 85.4%로 나타났다(〈표 III-7〉 설명 참조). 가구주가 65-69세인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3%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이 되면 43.8%까지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46.3%, 사업소득이 25.9% 그리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26.5%로 나타난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근로와 사업소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가구에서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고령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늦게까지 지속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미국이나 일본의 선례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향후 고령가구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한국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고령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전국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비 변화

〈표 Ⅲ-8〉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가구소비 수준을 100으로 설정한 경우 가구주 연령대별로 볼 때 가구소비가 최대가 되는 연령대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50대가 되면 다시 39세 이하와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64.0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 시계열로 볼 때 이와 같은 변화는 가구소득의 경우와 유사하다. 1990년대에는 가구소비가 50대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2000년에는 40대와 50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2010년에는 40대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세대에 비해 현재에 올수록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³⁾.

〈표 Ⅲ-8〉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60세 이상의 소비변화이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수준은 1990년의 경우 115.9로 나타나 오히려 39세 이하인 가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 비중은 2000년에는 85.2로 하락하였고, 2010년에는 64.0까지 하락하였다. 생애소득 및 소비가설에 의하면 가구들은 연령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60세 이상의 소비수준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은 최근에 올수록 오히려 소비평활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표 Ⅲ-8〉 가구주 연령별, 가구종류별 소비¹⁾ 변화 추이: 1990-2010

(지수)

	구분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199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36.8	138.6	129.7
	50-59세	139.2	136.8	137.1
	60세 이상	115.9	130.0	102.2
200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19.8	116.7	124.6
	50-59세	116.3	117.3	116.1
	60세 이상	85.2	85.7	86.0
2010	39세 이하	100.0	100.0	100.0
	40-49세	114.3	114.5	116.6
	50-59세	100.0	100.5	102.4
	60세 이상	64.0	66.2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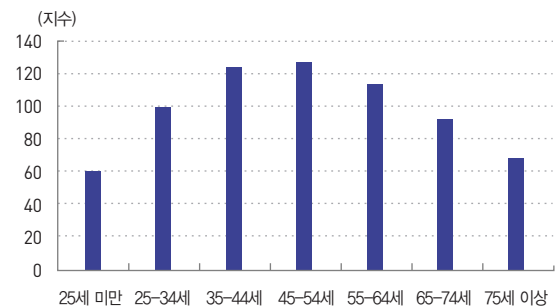
주: 1) 39세 이하 가구를 100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2010년 60세 이상 계층의 소비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이들이 고령기의 소비에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 Ⅲ-23]과 [그림 Ⅲ-24]는 미국과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2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5-34세의

[그림 Ⅲ-23] 미국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¹⁾ 변화: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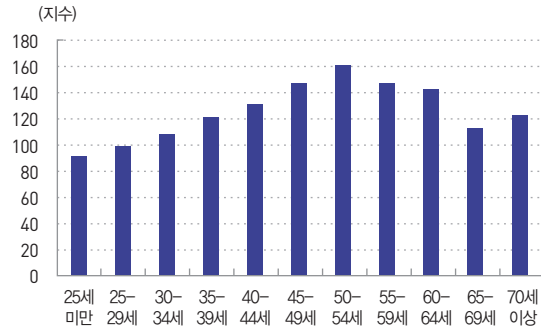


주: 1) 25-34세 가구소비를 100으로 함.

출처: 미국, 「소비자지출조사」, 2009. (<http://www.census.gov>)

3)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연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연도별로 경상소득대비 가계지출액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4) 실제로 연령별 소비수준의 표준편차를 구해보면 1990년에 18.5에서 2000년에는 16.0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21.5로 상승하였다.

[그림 III-24] 일본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⁵⁾ 변화: 2010

주: 1) 25-29세 가구소비를 100으로 함.

출처: 일본, 「가계소득지출조사」, 2010. (<http://www.e-stat.go.jp>)

소비수준을 100으로 할 때 45-54세일 때 126.3에 도달하여 정점을 이루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65-74세까지는 92.4수준을 유지하고 75세 이후 급격히 하락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이 25-29세인 경우를 100으로 할 때 50-54세일 때 정점을 이루며 이후에는 하락하지만 55-64세인 경우에도 142-146 수준을 유지한다. 비록 65-69세인 경우에는 113.1로 하락하기는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다시 121.9로 반등한다. 이는 일본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수준이 25-29세인 경우보다 많음을 의미한다⁶⁾.

[그림 III-23], [그림 III-24]에 나타난 결과와 한국의 2010년을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한국은 소비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층도 상당수준의 소비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비하여도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5) 가구주의 연령대가 70세가 넘어가면서 소비수준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는 동 연령대의 소득이 65-69세보다 많다는 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상 등의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점은 한국에서 고령층의 소득빈곤, 소비빈곤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국가구의 연령별 소비비중 변화

〈표 III-9〉는 가구주 연령별 소비관련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소득 중에서 가계지출을 제하면 이 부분이 가구저축으로 볼 수 있는 바, 한국가구의 가계저축은 가구주 연령대가 50대일 때 정점이 되며, 60대

〈표 III-9〉 전국가구의 연령별 소비 관련 비율 변화: 2010

(%)		
구분		전체 가구
가계지출/ 경상소득	39세 이하	84.0
	40-49세	87.5
	50-59세	81.8
	60세 이상	84.6
	전체 평균	84.8
소비지출/ 경상소득	39세 이하	65.6
	40-49세	68.1
	50-59세	61.4
	60세 이상	65.8
	전체 평균	65.5
식료품비/ 소비지출	39세 이하	12.3
	40-49세	12.9
	50-59세	13.6
	60세 이상	20.5
	전체 평균	13.9
교육비/ 소비지출	39세 이하	9.2
	40-49세	19.9
	50-59세	11.3
	60세 이상	2.4
	전체 평균	13.0
보건의료/ 소비지출	39세 이하	6.3
	40-49세	5.1
	50-59세	6.7
	60세 이상	12.0
	전체 평균	6.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이상의 경우에도 15.4%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40대의 경우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이지만 가계지출도 많아서 전 연령대로 볼 때 가장 낮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패턴은 근로자가구나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나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에도 여전히 22.1%의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상소득에서 가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가계지출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대별로 거의 75-78%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부터 50대까지는 12-14%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60대 이상은 20.5%로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앵겔계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일 때 9.2%에서 40대는 19.9%까지 상승한 후 50대는 11.3%로 하락하고, 60대 이상에서는 2.4%로 급격히 하락한다. 40대의 경우 교육비가 거의 모든 소비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한국가구의 교육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부터 50대까지는 5-7% 수준을 유지하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2.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구소비 중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글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및 소비, 그리고

주요 구성항목의 변화를 통해 한국가구의 소득 및 소비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한국가구의 소득 및 소비 정점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져서 2010년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인 경우에 벌써 정점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2009년)에는 정점이 가구주 연령이 45-54세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2010년)에는 50-54세에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정점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주의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일반적으로 많은 소득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수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나타나는 소득 및 소비의 급격한 하락현상이다. 50대 연령대에 비하여 소득 및 소비 하락폭이 최근에 올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층의 증가는 고령노동시장에서의 임금 하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현상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노인빈곤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동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글의 분석결과는 횡단면자료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분석한 모든 결과가 반드시 연령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향후 신뢰성 있는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생애소득과 소비에 대한 분석을 심도있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

IV. 사 회 복 지

Social Welfare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 강신욱	112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 정순돌	122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 고경환	131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요 약

-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형편이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농어촌 거주자, 미취업자 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러한 정책이 빈곤층의 규모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규모 또한 여전히 작지 않다.
- 사회적 취약성은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미도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이 가운데에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사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리거나 실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 및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칭한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특히 많은 계층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계층이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험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 바로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에는 소득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위험에 취약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된 빈곤층을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보고, 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빈곤의 측정- 빈곤선과 빈곤율

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한 가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때 빈곤한 상태와 빈곤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이 기준선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가구(또는 개인) 가운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또는 개인)가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한다.

빈곤율은 한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준다. 그런데 빈곤율의 수준은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만일 빈곤선을 높게 잡으면 그 사회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빈곤율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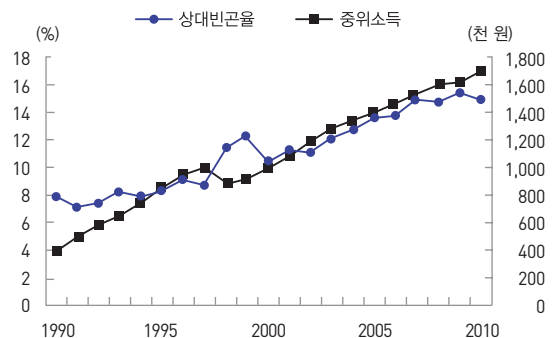
많은 국가들이 빈곤율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빈곤선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의 50%선을 사용하는 것이다.¹⁾ 중위소득이란 한 사회의 모든 가구

들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가장 높은 가구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가구라고 간주한 후 빈곤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빈곤율을 흔히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빈곤선의 수준이 전체 소득분포 상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IV-1]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중위소득 수준의 변화와 함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빈곤층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빈곤층을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4인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는 <표 IV-1>

[그림 IV-1] 상대빈곤율 및 중위소득¹⁾ 변화 추이: 1990-2010



주: 1)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1)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소득의 40%선이나 60%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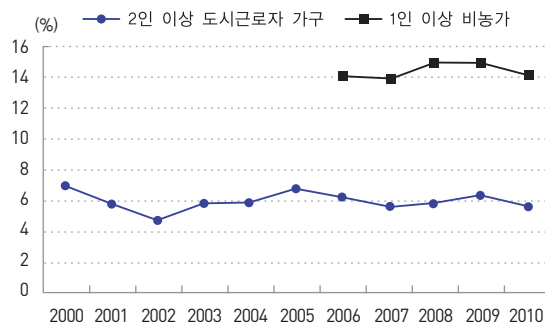
〈표 IV-1〉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011

(원/월)			
1인	2인	3인	4인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5인	6인	7인	
1,705,704	1,971,995	2,238,287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제도 사업안내」, 2011.

에서 보듯이 약 143만 9천 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율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²⁾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분류한 후 빈곤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IV-2]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IV-2]를 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에서 7%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1]과 [그림 IV-2]를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

[그림 IV-2]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¹⁾의 변화 추이: 2000-2010

주: 1) 시장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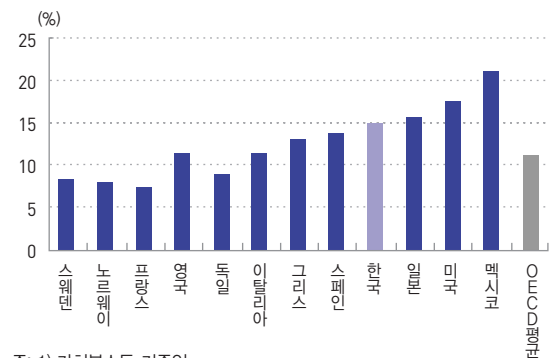
2) 빈곤선의 절대적 값이 소득분포상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빈곤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상대적 빈곤율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다소 줄어들다가 최근에 이르러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다.

빈곤율의 국제적 비교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그림 IV-3]은 2008년 현재 주요 OECD 국가들의 빈곤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5.0%로 당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모두 34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각 나라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경우, 빈곤층이 갖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

[그림 IV-3] 빈곤율¹⁾의 국제 비교²⁾: 2008

주: 1) 가처분소득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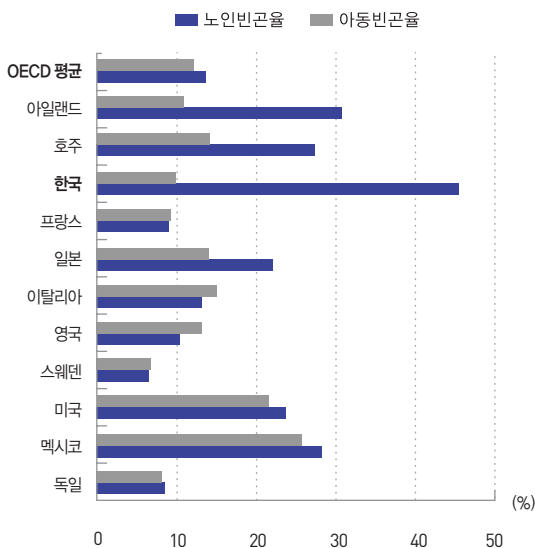
2) 그리스는 2004년, 일본은 2006년, 영국, 스페인은 2007년 자료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여하지 않는 연령대인 노인층과 아동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빈곤층의 구성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5세 미만의 아동들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원 가운데 노인이나 아동이 있을 경우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IV-4]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10.3%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그림 IV-4] 주요 OECD 국가들의 노인 및 아동 빈곤율 비교¹⁾



주: 1) 노인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 기준이며, 아동빈곤율은 2000년대 후반 기준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10.

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5.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14.5%p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고령자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낮은 이유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편부모가정의 비율이 낮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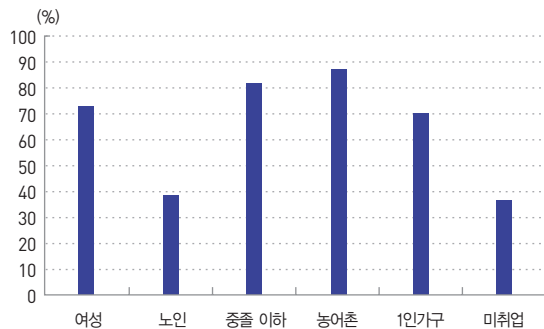
취약 집단과 빈곤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구를 빈곤층이라고 할 만큼, 어떤 가구가 빈곤해지는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가구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구원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실직을 당했거나 은퇴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을 하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로 개인의 연령이나 학력, 성별 또는 거주하는 지역 등 여러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소득이 낮아지고 빈곤으로 빠져들게 된다.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빈곤층에 빠져들 확률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평균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100이라고 하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여성가구)의 소득은 [그림 IV-5]에서 보듯이 73이다.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은 38.4,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구의 소득은 81.6 등이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은 86.3, 1인가구의 소득은 70.4, 미취업가구의 소득은 36.7 등이다.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고령자이거나 저학력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빈곤에 빠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5] 집단별 평균소득¹⁾ 비교: 2010



주: 1) 전국 가구 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대적인 소득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본다면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가구소득은 139.4, 임시근로자인 경우는 81.0, 일용근로자는 71.7, 고용주는 139.8,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101.9이다. 다시 말해 가구주가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가구가 빈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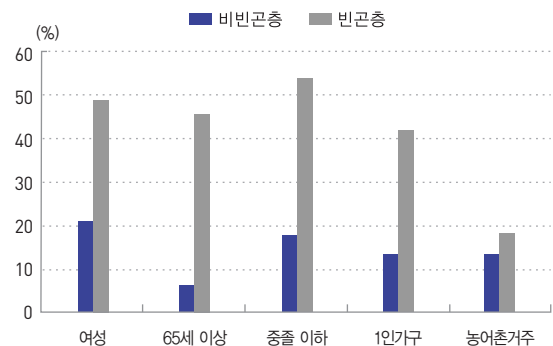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평균소득 수준은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하지만,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서는 평균소득이 낮다.

빈곤층의 구성

이와 같이 평균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혹은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가구가 빈곤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 빈곤층의 가구 구성과 빈곤하지 않은 가구(비빈곤가구)의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6]은 중위소득의 50%선을 기준으로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한 후, 각 계층의 가구주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비빈곤층에서는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이 20.8%인데 반하여 빈곤층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그 두 배 이상 높은 48.3%이다. 빈곤층의 약 절반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셈이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비빈곤층의 경우 6.1%이

[그림 IV-6] 빈곤층과 비빈곤층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지만, 빈곤층에서는 45.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저학력 가구의 비율은 비빈곤층에서는 17.3%이지만 빈곤층에서는 약 세 배에 달하는 53.6%로 나타난다. 또한 혼자 사는 1인가구의 경우 비빈곤층에서는 그 비중이 13.4%이지만 빈곤층에서는 41.7%로 빈곤층의 약 세 배 수준이다. 거주지역을 비교해보면 빈곤층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18.2%로 비빈곤층의 1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빈곤층 가구주 가운데에서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빈곤층 가구는 비빈곤층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7]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의 각 측면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미취업자, 즉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직업을 얻지 못한 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빈곤층의 미취업자 가구주 비중은 60.9%로 비빈곤층의 약 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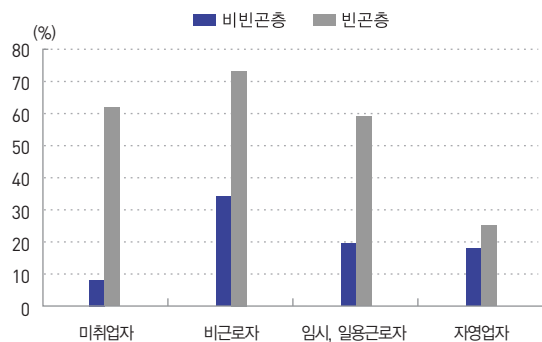
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빈곤층 가구주에서는 임시, 일용직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빈곤층의 실태

빈곤층은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도 일상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생활실태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결과(강신욱 외, 2010)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 구성원의 건강 측면에서도 다른 가구에 비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림 IV-8]에서 보듯이,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가구원의 비율이 일반가구의 경우 7.3%인데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30.9%로 높게 나타났다.³⁾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저소득층은 50.5%로 일반가구 24.8%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가구는 전·월세 가구가 42.1%로 일반가구의 37.2%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월세를 살면서 집세를 연체하거나 집세가 없어 이사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일반가구의 경우 0.5%였지만 저소득가구는 3.4%로 약 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은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가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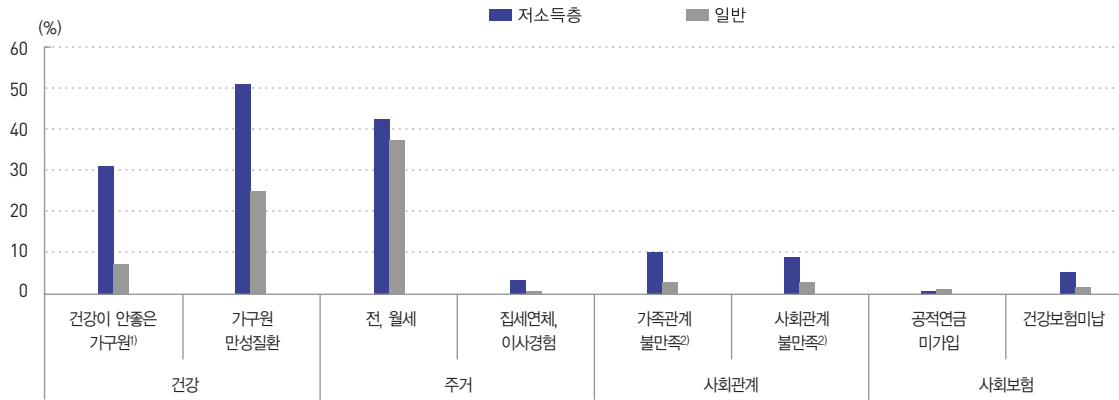
[그림 IV-7] 빈곤층과 비빈곤층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201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3) 위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를, 그리고 일반가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저소득층/일반가구의 구분기준은, 앞서 적용한 빈곤/비빈곤 가구의 기준선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8]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의 생활 실태 비교: 2010



주: 1)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편이다' 혹은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임.

2)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불만족은 7점 척도(매우 만족-매우 불만족)로 응답한 내용 중 '약간 불만족'과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비율을 합한 값임.

출처: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0.

태를 비교하여 보면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높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험에 있는 가구의 비율도 더 많다. 이는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보호

많은 선진국들이 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적 동등이 이루어져 있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다 고령과 은퇴를 경험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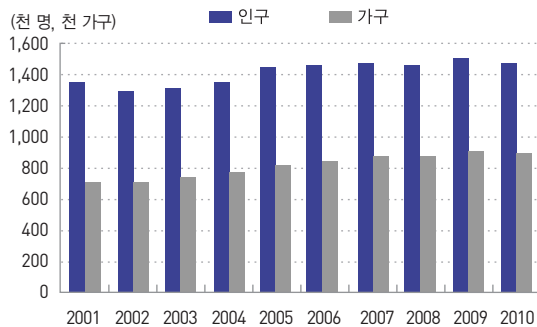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자, 그에 따른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생활보호제도라는 빈곤층 보호제도가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제도에 비해 더 많은 인구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가구를 흔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구)의 수는 곧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빈곤가구(인구)의 수라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인 2001년 약 70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약 88만 가구로 10만 가구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구 수 역시 2001년 약 134만 명에서 2010년에는 약 146만 명으로 약 12만 명 증가하였다(그림 IV-9). 이와 같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빈곤층의 수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다.

[그림 IV-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인원수의 변화: 2001-201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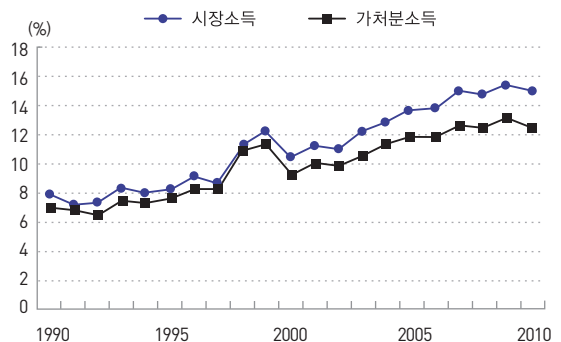
정부의 지원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빈곤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실제로 빈곤율을 얼마나 감소시키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물론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노령층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장애인이나 아동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크고 작은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사회보험료(연금보

험료나 건강보험료 등)를 차등화하여 걷는 방법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 결과 빈곤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림 IV-10]은 정부의 정책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시장소득이란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의 소득, 즉 각 가구가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가구간 이전을 통해 얻은 소득만을 합산한 것이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 이후의 소득인데, 이는 시장소득에다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연금이나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더한 후, 다시 세금으로 낸 돈과 사회보험료로 낸 돈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소득이란 가구 소득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의 소득이고 가처분소득이란 가구소득에 대해 정부의 모든 개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따라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을 비교하여 보면 정부의 개입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V-10]의 두 곡선의 차이가 곧 정부 개입의 효과인데 그림에서 확

[그림 IV-10] 정부 개입 전후의 빈곤율¹⁾ 변화: 1990-2010



주: 1)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정부 개입에 의해 빈곤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0.7%p에 불과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2001년에는 이 수치가 1.2%p로 늘어났고, 2010년의 경우에는 2.4%p로 더 늘어났다.

차상위계층의 규모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이고, 기초생활 수급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3%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이 비율은 [그림 IV-1]에서 본 상대적 빈곤인구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 IV-2]에서 살펴 본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인구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빈곤인구 가운데 일부만이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빈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빈곤층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IV-1]과 [그림 IV-2]에서 빈곤층을 분류할 때에는 가구의 소득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어떤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고려하고, 또한 그 가구를 부양할 사람(흔히 부양의무자라고 한다)이 있는지도 고려하게 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거나 그 사람을 부양해줄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은 낮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

층이 다수 존재한다. 일부 빈곤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소득이 정부의 지원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실제 생활형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소득이 낮지만 여러 사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 소득이 정부의 지원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계층⁴⁾을 모두 아울러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층보다 바로 위에 위치한 계층이라는 의미이다. 차상위층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상위층의 규모가 얼마일지도 정책적인 관심사인데, 2006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규모는 대략 82만 가구(전국 가구의 약 5%), 170만 명(전국 인구의 약 3.5%)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7).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차상위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빈곤 대책의 여러 가지 차원

한 사회에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빈곤상태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빈곤층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각각 빈곤 예방 대책, 빈곤층 보호 대책,

4) 일반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으로 한정한다.

탈빈곤 촉진대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빈곤예방대책은 앞서 말한 차상위층에 대한 보호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빈곤화를 예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빈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또 하나의 사회보험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생활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앞에서 설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 이외에도 가구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빈곤층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제도나 각종 고용지원제도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던 빈곤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벌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삭감한 다거나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금전적 지원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대표적인 탈빈곤 지원정책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10.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 2007.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취약계층, 즉 빈곤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장경제에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원과 기회는 모두 소득을 통해 확보되는 만큼 소득이 부족하면 기회가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하고, 빈곤층을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과 배제이다. 입학, 취업, 승진 등 사람들이 살면서 얻게 되는 기회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성별, 연령, 장애, 학력,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어떤 집단이 갖는 취약성의 결과가 반드시 낮은 소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약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처럼 특정 집단의 실업률이 높다거나 노인층처럼 타 집단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취약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이 각 집단의 소득수준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나 한 사회의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할 때에는 소득과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과 현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요 약

- 기대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생활,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의 감소, 건강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연금을 주요 준비방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후준비방법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최근에는 신체적 준비, 사회 및 정서적 준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 노후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연령층은 30-50대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8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 노후지원체계는 소득, 취업, 의료, 은퇴준비 및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 노후생활 컨설팅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였으나 2010년 현재 80.6세로 약 20년 가량 늘어났다. 대략 은퇴가 50세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앞으로 약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생애주기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변화 및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후준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준비로도 일컬어지며, 노년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적응에 따른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기울이는 일종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정의된다(류명석 외, 2008). 현재까지 노후준비는 크게 경제적 노후준비와 이를 포함한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 노후준비로 구분된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 사적 기제를 통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을 뜻하며, 전반적 노후준비란 노년기 경제적 기회구조에 대한 강조 및 건강, 인적자본,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에 대한 포괄적 준비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걱정 정도,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후준비실태, 그리고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체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노후준비에 대한 기대와 걱정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지만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다.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4년 2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55.8%, 2008년 68.3%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현재 노인들의 약 10%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약 8%는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0). 한편, 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로 이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1998-2011년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1998년 30.8%에서 2011년 40.6%로, 건강문제는 1998년 33.9%에서 2011년 37.8%로 그 수치도 증가하고 있어 노후생활의 중요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표 IV-2〉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¹⁾: 1998-2011

	경제적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 ²⁾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복지 시설 부족	기타 ⁴⁾	합계
1998 ²⁾	30.8	3.4	8.8	33.9	12.1	2.9	1.6	-	3.6	2.9	100.0
2002	36.4	3.4	5.7	39.3	8.1	2.4	1.0	-	2.2	1.5	100.0
2005	45.6	6.1	6.8	27.1	6.3	1.8	1.8	-	4.4	0.1	100.0
2007	40.1	3.8	5.3	40.7	3.2	0.3	2.1	0.7	2.9	0.9	100.0
2009	42.6	3.3	6.0	37.2	3.8	0.1	2.2	1.1	2.5	1.2	100.0
2011	40.6	4.0	6.2	37.8	3.7	0.2	2.8	1.0	2.4	1.3	100.0

주: 1)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순위로 응답한 항목의 비율임.

2) 1998년 자료는 65세 이상 비율임.

3) 1998년에서 2005년까지는 '직업이 없음' 만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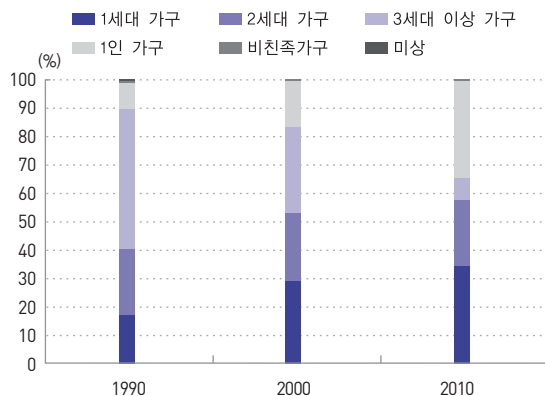
4) '잘 모르겠다' 포함, 1998년 조사에는 '가사에 대한 도움 부족' 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수 있다. 첫째, 가족구성의 변화, 둘째, 부양가치관의 변화, 셋째,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의 감소이다.

먼저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이 기존의 확대가족 체제에서 핵가족 중심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과거 가족 안에서 노인을 돌보던 부양 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IV-11]의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구성별 분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노인세대의 구성은 1990년에만 해도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약 55%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약 3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와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에는 약 26%이던 것이 2000년에는 약 45%, 2010년에는 약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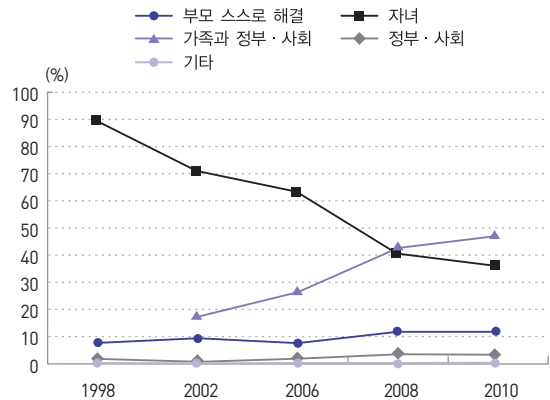
[그림 IV-11]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구성별 분포: 1990-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둘째, 부양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IV-12]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회조사를 통해 알아 본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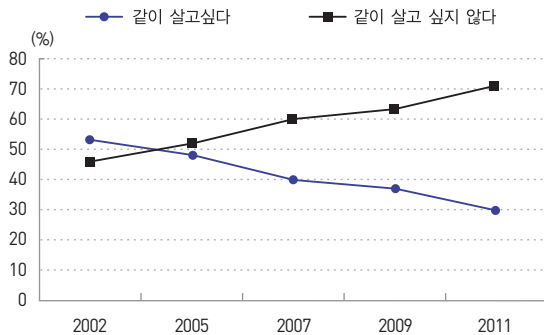
[그림 IV-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998-201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추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1998년에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89.9%로 매우 지배적이었으나 그 비율은 2002년에 70.7%, 2006년에 63.4%, 2008년에 40.7%, 2010년에는 36%로 크게 줄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자녀들에 의한 부모 부양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참고로 이 항목은 1998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1998년 8.1%에서 2010년 12.7%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던 과거의 부양가치관이 약화되어 정부와 사회의 노후보장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부모 스스로도 적절한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그림 IV-13]을 보면, 노부모 역시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자녀가 노인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

[그림 IV-13] 향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견해¹⁾: 2002-2011

주: 1) 60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들이 자발적으로 자녀와 별거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년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IV-3>은 사회조사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방법을 조사한 것이다.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금과 퇴직금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직접적인 소득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후준비실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그림 IV-14]와 같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8년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2.9%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51.4%로 절반 수준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52.3%, 2007년에는 61.8%, 2011년에는 65.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방법의 변화는 <표 IV-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표 IV-3〉 생활비 마련방법¹⁾: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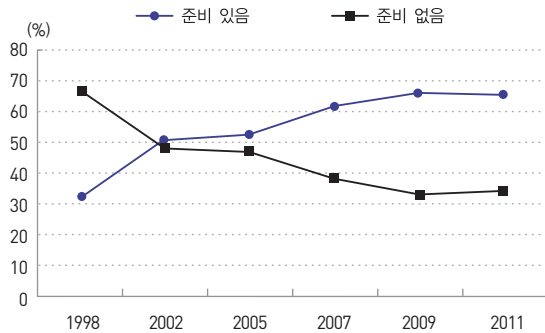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합계
	전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²⁾	예금, 적금 ³⁾	전체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있지 않음			
2002	55.9	69.2	19.2	11.6	-	40.1	52.1	47.9	3.8	0.2	100.0
2005	59.1	66.1	11.5	14.6	7.8	36.2	54.6	45.4	4.5	0.2	100.0
2007	61.3	65.0	11.3	16.2	7.5	34.1	53.3	46.7	4.4	0.1	100.0
2009	60.0	56.2	13.3	24.5	6.1	31.4	44.9	55.1	8.6	0.1	100.0
2011	60.1	50.9	12.4	27.6	9.1	32.0	47.1	52.9	7.7	0.2	100.0

주: 1) 60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2) 2002년에는 '연금' 만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퇴직금 문항은 없음.

3) 2002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IV-14] 노후준비 여부¹⁾: 1998-2011

주: 1) 1998 -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07년과 2009년은 18세 이상, 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있다. 1998년에는 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 7.7%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21.2%, 2005년에는 42.8%, 2007년에는 44.3%, 2009년에는 44.1%, 2011년에는 57.6%로 늘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주된 노후준비 방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 외의 사적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1998년에는 9.6%, 2002년에 13.4%, 2005년에 21.4%, 2007년에 18.2%, 2009년에

〈표 IV-4〉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¹⁾: 1998-2011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²⁾
1998	7.7		9.6	2.0	11.5	1.9	0.1
2002	21.2		13.4	1.7	11.9	2.8	0.2
2005	33.9	8.9	21.4	3.8	25.1	6.0	0.9
2007	37.1	7.2	18.2	3.2	26.9	6.4	0.9
2009	37.0	7.1	20.1	3.4	25.6	5.7	1.1
2011	50.7	6.9	16.0	2.3	18.3	4.9	0.9

주: 1) 1998 -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07년과 2009년은 18세 이상, 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주식 및 채권' 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20.1%, 2011년에 16.0%를 보이고 있어 소폭 증가 후 정체되고 있다. 예금 및 적금은 1998년에는 11.5%로 공적연금 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2년에 11.9%, 2005년에 25.1%, 2007년에 26.9%, 2009년에 25.6%, 2011년에 18.3%로 2002년 이후에는 공적연금 다음으로 선호하는 노후준비 방법이 되고 있다.

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표 IV-5〉와 같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회조사를 통해 2002년부터 조사되었는데, 준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2005년 25.0%에서 2011년 37.7%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노후준비 부족과 노후생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의탁하려고 생각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큰 변동 없이 약 19%대와 11%대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준비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조사를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는 주로 경제적 준비만을 포함하고 있

〈표 IV-5〉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¹⁾: 2002-2011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 ²⁾
2002	36.3	32.0	31.8	-
2005	32.7	32.9	25.0	9.3
2007	19.8	34.9	32.6	12.6
2009	16.6	32.6	38.9	12.0
2011	19.4	31.9	37.7	11.1

주: 1)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에 관한 항목만을 100%로 환산한 수치임.

2) 2002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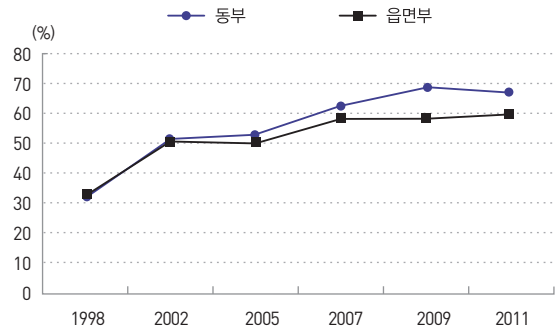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의 거의 모든 조사와 연구들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노후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노후자금’으로 인식하는 노후 생활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노후준비를 경제적 준비, 사회 및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체적 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 10-11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를 집계하였다. 이 조사는 시계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1회성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여러 영역에서 노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 노후생활준비 5점 만점에 2.7, 경제적 준비 2.1, 사회 및 정서적 준비 2.7, 신체적 준비 3.1로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를 평가하였다. 반면, 자신이 아직 노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노후생활준비 5점 만점에 3.0, 경제적 준비 2.6, 사회 및 정서적 준비가 3.0, 신체적 준비가 3.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시기 이후 보다는 노후시기 이전에 신체적 준비, 사회 및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하여, 위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별 노후준비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동부가 33.0%, 읍면부가 32.4%로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2009년에는 동부가 68.1%, 읍면부가

58.2%로 노후준비 수준에 있어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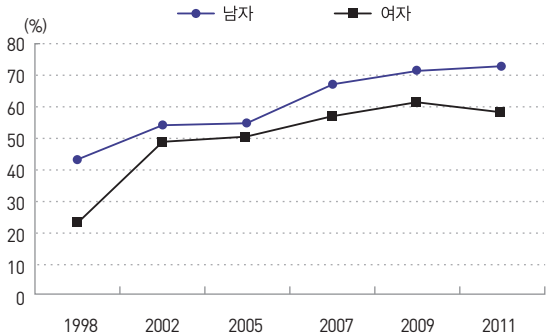
[그림 IV-15] 지역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다음으로 성별 노후준비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남자가 43.4%, 여자가 23.0%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남자가 73.2%, 여자가 58.5%로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수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그림 IV-16).

[그림 IV-16] 성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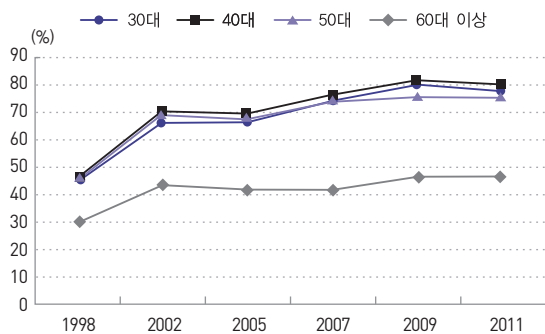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셋째, 연령별 노후준비실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30-59세까지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30.3%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2011

년에도 30-40대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80%에 가깝지만, 50대에서는 약 75%, 60세 이상이 되면 약 47% 가량으로 줄어들어 연령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IV-17). 이는 노인이 된 후 노후준비는 늦기 때문에 30대부터 50대까지가 노후준비의 중요한 시기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V-17] 연령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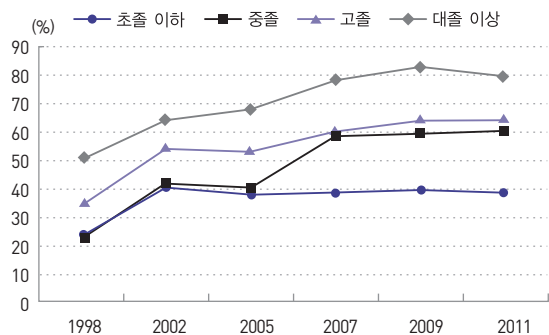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넷째, 교육수준별 노후준비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초졸 이하인 경우 23.7%, 대졸 이상인 경우 51.2%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보다 심화되었는데, 초졸 이하인 경우 전체의 38.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인 경우 80.5%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졸 이하인 경우 1998년에서 2011년 사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약 15%p 가량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약 30%p 가량 증가하여 고학력자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8).

다음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2011년

[그림 IV-18]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현재 48세에서 56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한다. <표 IV-6>을 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의 80% 정도이며,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인 38.5%, 예금 및 저축이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수준은 교육수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졸 이상인 경우는 10명 중 9명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초졸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지원체계

우리나라의 노후준비지원체계는 소득지원체계, 취업지원체계, 의료지원체계, 은퇴준비 및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 노후생활 컨설팅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지원체계는 [그림 IV-19]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소득계층을 위한 1차 안전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2차 안전망은 사적연금인 퇴직·기업연금, 3차

〈표 IV-6〉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2009

(%)

	준비 하고 있음	준비방법							준비 하고 있지 않음	준비 안하는 이유				합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¹⁾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부족	자녀 에게 의탁	
베이비부머	8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7.4	39.8	50.3	2.5	100.0
초졸 이하	59.6	42.0	1.6	18.1	1.6	32.0	4.3	0.4	40.4	8.5	33.4	53.4	4.7	100.0
중 졸	69.1	44.5	1.6	18.3	3.9	28.6	2.7	0.3	30.9	5.7	34.3	56.2	3.9	100.0
고 졸	81.9	40.7	4.7	20.6	3.8	24.6	5.5	0.2	18.1	8.6	41.4	48.5	1.5	100.0
대졸 이상	90.9	31.7	14.5	18.7	4.3	20.2	8.6	1.9	9.1	5.4	56.1	38.5	-	100.0

주: 1) '주식 및 채권' 포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010.4.9.

안전망은 개인연금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은 빈곤선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빈곤선 이하의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현재 노인 중 연금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아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취업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체계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

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의료지원체계는 일반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치매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

[그림 IV-19] 현행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기업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 보장제도

출처: 정경희, 2009, 「보건복지포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통권 제156호.

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위한 치매치료관리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안검진 중 개안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은퇴준비 및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은 은퇴자를 위한 은퇴준비프로그램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은퇴준비프로그램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로 내용은 경제적 대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이나 가족 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인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공된다.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으며,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지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의 일환으로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노후생활 컨설팅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국민연금공단, 2011). 2011년 행복노후설계센터를 개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설계 뿐 아니라 일자리와 건강, 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항목은 크게 재무설계, 생활설계, 노후설계로 나뉘며 그 중 노후설계서비스(CSA)는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노후생활의 6대 영역인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

적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30-40대를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상담과 50대를 대상으로 한 노후생활상담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경제와 건강에 대한 것으로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과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부모부양에 대한 부양가치관의 약화, 노년기 소득의 감소와 공적 연금체계 보장의 불충분성 등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서도 도농 간, 교육수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남녀 간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주로 노후준비를 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80%가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으나, 이들 세대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노후준비 외에도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 중요한 측면임에도 공식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준비는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 심리정서적 영역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와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노후보장패널 소식지」. Vol.1. (<http://csa.nps.or.kr/>)
- 류명석 외. 2008. 「서울시민의 노년준비실태 및 지원체계연구」. 서울복지복지재단.
- 이윤경. 2010. 「한국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정순돌(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요 약

-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는 아동보육과 노인부양서비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궁극에는 사회복지 인력과 시설의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복지인력은 지난 10년간 4.6배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약 2배 증가하였다.
- 최근 복지시설들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급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과거 찾아오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찾아가고(재가기관) 모서(이용·생활시설)와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어 사회복지 시설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복지인력의 임금수준은 2000년 국내 전체 산업평균의 110.8% 수준에서 2009년 88.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 이에 반해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표출, 서비스 만족도 등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시설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처우개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는 아동보육과 노인부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다양한 가족유형의 형성, 국제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출현도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수요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인력과 시설은 심신 장애로 자립생활이 곤란하거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다.

인력과 시설에 대한 통계가 매년 세부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총계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미시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개념과 범주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전달하는 전문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인력은 전문적 실천적 개입기술과 지식은 물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즉 사회복지전문직은 다른 분야의 전문직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욕구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상의 윤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특히 선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윤리강령(Codes of Ethics for Social work)을 만들어 선포하고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도입시기는 호주 1946년, 미국 1951년, 영국 1975년, 캐나다 1983년, 일본 1986년으로 조사되었다(국제사회복지사협회). 우리나라는 199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지키고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는 크게 보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사

회복지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공급과 직접 연계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의 역할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인력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유형은 관리자, 의무직, 서비스전문직, 사회복지사, 행정·관리직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사회적으로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40%) 근무하도록 규정(사회복지사업법, 1971년)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소 위주의 시설로 심신의 여러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이 곤란한 사람,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의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쉼터 또는 생활의 장으로

써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시설로 지칭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욕구(need)를 충족하기 위한 통원 또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살펴보면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며, 가정의 보완적·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가이용자의 상담, 교육, 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인력 및 시설의 현황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복지인력과 시설에 대한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가용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감과 내부자료, 그리고 최근 구축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는 등록시설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수치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비중만 활용하고자 한다.

복지 인력의 현황

복지분야 종사인력은 2010년 42만 208명으로 나타났다(표 IV-7). 복지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분야의 인력은 7.8%(3만 2,834명)인 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민간부문의 인력은 92.2%(38만 7,374명)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복지인력은 이용시설(30만 8,497명)이 생활시설(7만 8,877명)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표 IV-7〉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 현황: 2010

		(명, %)	
		인력 수	구성비
전체		420,208	100.0
소계		32,834	7.8
공공 분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0,496	2.5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2,338	5.3
소계		387,374	92.2
민간 분야	생활시설 종사자	78,877	18.8
	이용시설 종사자	308,497	73.4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2010.

(2007년)에 따른 재가시설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인력 분포를 보면, 관리자가 10.5%,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직·서비스전문직이 66.6%, 그리고 행정·관리직이 23.0%로 나타났다(그림 IV-20).

상대적으로 생활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서비스전문직이, 이용시설에는 사회복지사와 행정·관리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동이 불편한 분이 많은 생활시

〈표 IV-8〉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인력 분포: 2010

		(%)						
		관리자 ¹⁾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직 ²⁾	서비스전문직 ³⁾	행정·관리직	
전체	100.0	10.5	13.0	25.3	8.1	20.2	23.0	
생활시설	100.0	6.4	5.3	32.7	10.3	26.3	19.0	
이용시설	100.0	18.1	27.3	11.5	3.7	8.7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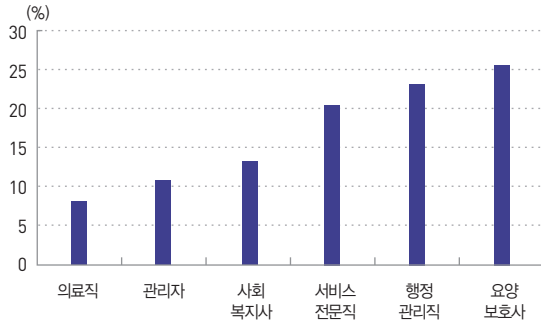
주: 1) 원장, 시설장, 관장

2)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보조원 등

3) 사회복지활동교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등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자료 재가공.

[그림 IV-20]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 분포 : 2010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자료 재가공.

설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복지 시설의 현황

복지시설은 2010년 113,148개소로 나타났다(표 IV-9). 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호대상자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은 4.5%(5,107개소)인 반면 주로 주민들이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95.5%(108,041개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생활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12종이, 이용시설은 자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18종이다.

이와 같이 이용시설 수는 생활시설 보다 많고(21배), 인력 수도 많은(3.9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 인력 및 시설의 추이와 동향

복지 인력의 동향과 사회적 대우

우리나라 사회복지인력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표 IV-9〉 사회복지시설 수 현황: 2010

			(개소, %)		
	시설유형	시설수	구성비		
생활 시설 (12종)	노인의료복지시설,	5,107	4.5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부랑노숙인복지시설,				
	결핵한센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이용 시설 (18종)	재가노인복지시설,	108,041	95.5		
	노인보호전문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부랑노숙인복지시설,				
	일반사회복지시설,				
	자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통합상담소,				
	다문화가족복지시설				
	계			113,148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20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사회서비스자원과).

다. 복지인력은 2000년 전국 약 9만 명이였지만, 2010년에는 4.6배 증가한 42만 명으로 나타났다(표 IV-10). 2000년 이후 복지인력의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은 증가(연평균 증가율 9.2%)하고, 시설의 인력은 급증(연평균 증가율 17.4%)함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다양한 복지 급여제도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표 IV-10〉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 현황과 추이: 2000-2010

							(명, %)
		2000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전체		91,438	294,885	337,369	381,987	420,208	16.5
공공 분야	소계	13,585	32,861	30,528	30,942	32,834	9.2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496	10,113	9,945	10,334	10,496	8.8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9,089	22,748	20,583	20,608	22,338	9.4
	소계	77,853	262,024	306,841	351,045	387,374	17.4
민간 분야	생활시설 종사자	13,401	43,061	53,154	63,664	78,877	19.4
	이용시설 종사자	64,452	218,963	253,687	287,381	308,497	16.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각 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통합망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대상자 선정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감되면서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는 사례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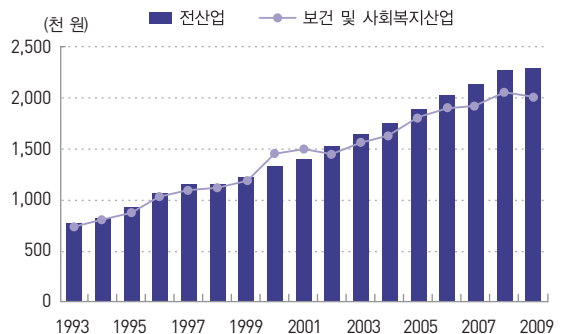
또한 일부 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급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복지시설들은 과거 찾아오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임무가 완수되었던 것로부터 이용자를 찾아가고(재가기관) 모셔(이용·생활시설)와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능력은 커지고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회복지시설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복지인력은 더 많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인력의 임금수준과 고용안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및 복지사업종사자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200만 원(2009년)으로 전산업 평균임금(227만 원)의 88.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09). 이는 2000년 110.8%에 비해 22.7%p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지사업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전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21).

사회복지사의 42.6%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재 종사자의 60.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9). 이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인력의 과잉 공급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위탁에도 연유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1만 727명(2010. 12),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 5,372명이고 전담공무원은 1만 334명이다. 결국 18.4%가 취업을

[그림 IV-21] 전산업과 보건복지산업의 월평균 급여액 비교: 1993-2009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2009.

통해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이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지원금 중 시설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우선인 관계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증액될 수 없는 구조이다.

복지 시설의 동향과 서비스 수준 제고노력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0년간 약 2배의 양적증가가 발생하였다. 2000년 전국 6만개에서 2010년 11만 개로 증가한 것이다(표 I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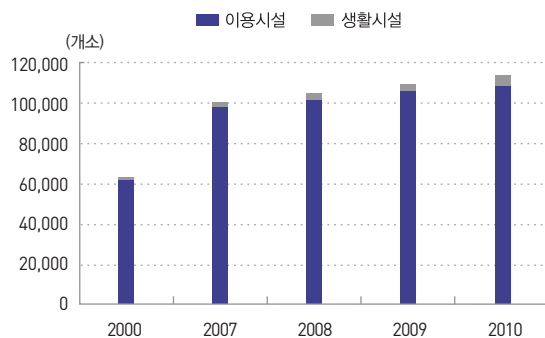
〈표 IV-11〉 사회복지시설 수¹⁾ 현황과 추이: 2000-2010

	2000	2007	2008	2009	2010	(개소, %) 연평균 증가율
계	62,708	100,324	104,404	109,686	113,148	6.1
생활 시설	876	3,103	3,402	4,030	5,107	19.3
이용 시설	61,832	97,221	101,002	105,656	108,041	5.7

주: 1) 한부모시설은 2008년부터, 청소년시설은 2009년부터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각 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사회서비스자원과).

[그림 IV-22] 사회복지시설 수 현황과 추이 비교: 2000-2010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각 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사회서비스자원과).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생활시설은 4천 개, 이용시설은 4만 개가 늘어났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07;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2009).

한편 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연평균 증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시설이 5.7%, 생활시설이 19.3%의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지수요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에 연유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표출, 서비스 만족도 등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효과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시설평가제의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시설평가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하는 과제는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인력과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질적 성장을 위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인력과 관련해서 정부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관리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7,00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충원방법은 신규충원(62.8%), 자연결원 충원(11.4%), 행정직 배치(25.7%)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읍면동 단위의 복지직이 현행 1.6명에서 2배 수준인 3.0명으로 증원 배치되어 상담 및 정보제공의 내실

화, 찾아가는 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실현되리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업무과중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고용의 안정과 처우개선 등의 해결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복지시설 부분에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

스 등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
- 국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ifsw.org>)
- 고용노동부. 2009. 「고용노동통계연감」.
- 보건복지가족부. 200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

V. 문화 및 여가

Culture & Leisure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 윤소영	14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부상과 확산 • 최항섭	149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 서우석	157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요 약

- 현재 여가생활은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휴식활동이나 취미오락 활동에 편중되어 있지만, 향후 여가생활은 더 많이 실외공간을 이용한 여행이나 스포츠활동, 그리고 문화예술에의 향유를 희망하고 있다.
-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은 교제, 학습, 미디어이용 등의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과 일요일의 차이뿐 아니라 월평균소득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감이 높고, 휴가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주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가생활의 만족도 증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 영역과 ‘삶’ 영역(가족·자신·여가)의 균형(Work Life Balance)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인간의 창의력과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여가생활의 문제가 강조된다. 실제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자아성장,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유있는 삶의 영위, 모험과 흥분, 도전정신의 만족감 부여, 자아존중감 유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1세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위주의 노동중심사회(노동형 인간, 일의 양 중시, 직장중심의 생활)에서 점차 여가중심사회(여가형 인간, 일의 질 중시, 가족중심의 생활)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여가활동이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형태와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차이를 밝히며,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여가활동의 참여형태와 그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는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

한국인의 하루 24시간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의 변화가 여가시간의 증가나 감소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V-1]은 1일 생활시간구조의 변화를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시간은 20대에 3시간대에서 30-50대에는 4시간대로 증가하였다가 60세 이상에서는 2시간대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교제,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등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10대와 30대

에 가장 낮아 3시간대이며, 40대에 4시간대로 들어서서 60세 이상에서는 6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30대를 전후해서 일하는 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많아지다가 50대 중반 이후 은퇴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되면서 여가시간이 급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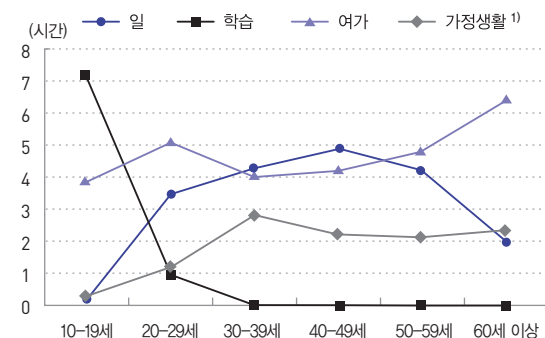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용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한 30-40대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의 확보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생애주기 초기의 여가경험이 생애주기동안 지속됨으로써 여가경력(leisure career)으로 축적될 때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는 조사결과(윤소영, 2008)를 볼 때,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균형있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현재 OECD 평균이 1,764시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500시간 정도 많은 2,256시간을 노동에 투자하고 있으며 2위인 그리스보다도 연간 136시간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2,600여 시간을 상회하던 1990년대에 비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변화는 휴일동안만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자와 미실시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휴일 여가시간에서 실시자의

[그림 V-1] 영역별 1일 생활시간구조의 변화: 2009



주: 1) 가정생활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값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경우 7시간 30분인데 비해 미실시자의 경우 6시간 42분으로 미실시자보다 48분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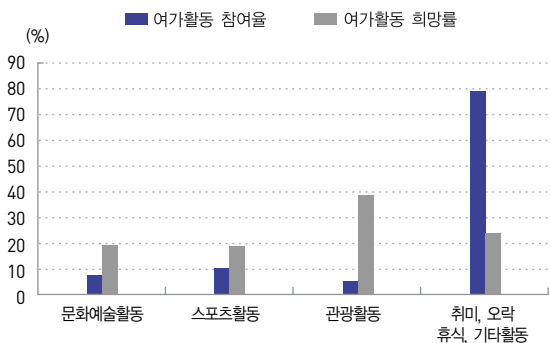
여가시간의 증가 등 여가환경의 변화는 개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현재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즉 여가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9%인 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3%이며, 여가비용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3%인 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0%이었다. 특히 활동을 위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V-2).

또한 현재 여가생활은 TV시청, 산책, 낮잠 등과 같은 휴식활동(36.2%)이나 쇼핑 및 외식, 인터넷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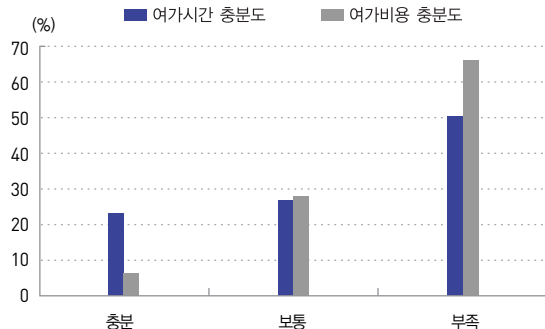
및 채팅 등과 같은 취미오락활동(25.4%), 종교활동 및 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17.1%)에 편중되어 있지만, 향후 희망하는 여가생활은 관광활동(38.4%), 스포츠참여 및 관람활동(19.5%), 문화예술참여 및 관람활동(18.7%) 등에서 현재보다 더 참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3). 아직도 노동시간이 긴 현실에서 자유시간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주말에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나 적극적인 활동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 여가활동 참여율 및 희망률: 20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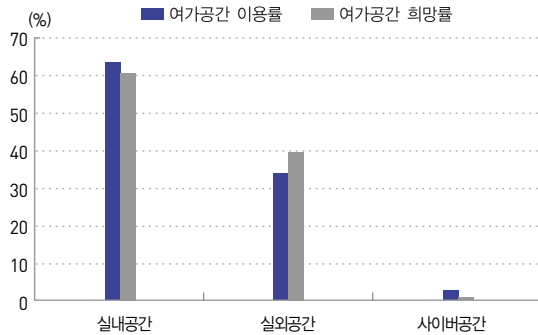
[그림 V-2]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충분도: 20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공간적으로는 종교시설, 식당, 영화관 등의 실내공간(63.4%)의 이용비율이 높으며 실외공간(33.9%)으로는 근린공원(21.7%), 산(15.9%), 공터(15.2%), 운동경기장(7.1%)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하길 희망하는 공간에 대해 실외공간(39.4%)은 5.5%p 증가한 반면 실내공간과 사이버공간은 각각 3.3%p와 2.2%p 감소하였다(그림 V-4). 현재 이용하는 실외공간이 대부분 생활권내 접근이 용이한 개방된 공간인데, 이러한 실외공간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4] 여가공간 이용률 및 희망률: 20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여가의 계층 양극화 현상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현상은 계층에 따라 여가활동의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계층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사회적 전망에 따라 여가활동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V-1〉은 20세 이상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1일 평균 여가시간을 제시하였다. 월평균소득이 500만 원 이상, 400~500만 원 미만, 그리고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교제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여가활동에 대해 월평균소득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교제, 학습, 미디어이용 등의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4시간 54분, 4시간 30분으로 남자가 24분 더 길었다. 이러한 차이는 일요일에 가장 커서 남자의 여가시간은 6시간 58분인데 비해 여자는 5시간 40분으로 그 차이가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여가시간은 월

〈표 V-1〉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1일 평균 여가시간¹⁾: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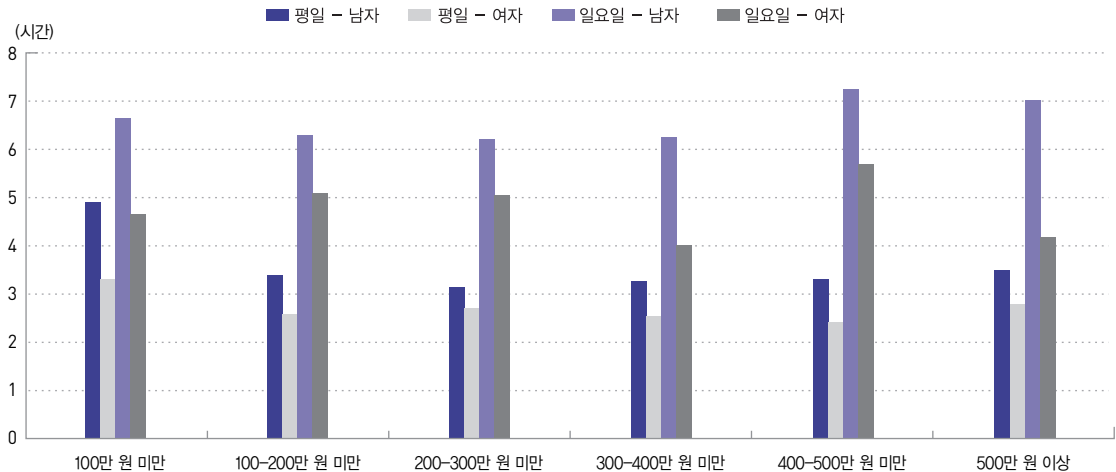
(시:분)

취업자 월평균소득	교제 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관람·문화 행사참여	스포츠·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계
전체	0:58	2:00	2:09	1:59	1:56	1:24	1:05	0:39	0:22	3:54
100만 원 미만	1:01	2:42	2:19	1:59	1:57	1:19	1:04	0:41	0:23	4:08
100~200만 원 미만	0:57	1:43	2:04	2:06	2:00	1:22	1:06	0:39	0:21	3:44
200~300만 원 미만	0:56	1:49	2:02	1:53	1:57	1:28	1:05	0:40	0:21	3:47
300~400만 원 미만	0:57	1:32	2:07	1:52	1:33	1:25	1:01	0:34	0:21	3:50
400~500만 원 미만	0:58	2:07	2:08	2:00	1:59	1:35	1:04	0:32	0:20	4:18
500만 원 이상	0:57	1:29	2:18	1:46	1:49	1:33	1:07	0:30	0:25	4:26

주: 1) 20세 이상 취업자 중 교제 및 여가활동 행위자의 평균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그림 V-5]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1일 평균 여가시간*: 2009



주: 1) 20세 이상 취업자 중 교제 및 여가활동 행위자의 평균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평균소득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일동안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소득집단은 남자와 여자 모두 100만 원 미만 집단이며, 그 다음으로는 500만 원 이상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여가시간은 소득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요일에 남성은 400-5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7시간 이상의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집단과 300-4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평일동안 남성과 여성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소득집단은 100만 원 미만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1시간 31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였다. 한편, 그 차이가 가장 적은 소득집단은 200-300만 원 미만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4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하여 300-400만 원 미만 집단은 남성이 여

성에 비해 2시간 8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1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 집단의 남녀간의 차이는 1시간 50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가 평일보다 일요일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요일의 남녀 차이는 300-400만 원 미만 집단과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보다 두드러지며, 여성들의 평일 여가시간은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강조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활용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평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불만족인 사람은 32.0%이며, 만족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60.9%)과 시간부족(23.2%)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부족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표 V-2〉 소득계층에 따른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¹⁾: 2011

(%)

가구 월평균소득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혼잡 및 불편	여가시설 부족	적당한 취미없음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여가를 함께할 사람없음	기타
전체	60.9	23.2	1.0	1.8	3.4	6.8	1.6	1.4
100만 원 미만	71.4	5.1	0.5	1.4	2.1	17.6	1.6	0.3
100-200만 원 미만	70.9	15.5	0.8	1.4	3.0	5.8	1.7	1.0
200-300만 원 미만	61.8	25.6	1.4	1.3	3.8	3.1	1.5	1.6
300-400만 원 미만	54.3	32.4	1.2	2.5	2.9	3.8	1.6	1.4
400-500만 원 미만	44.4	40.0	1.2	2.2	5.1	3.7	1.4	2.0
500-600만 원 미만	34.1	46.2	1.6	3.6	5.9	3.5	1.2	3.8
600만 원 이상	28.7	51.4	2.1	2.8	6.6	3.6	2.6	2.2

주: 1) 13세 이상 인구 중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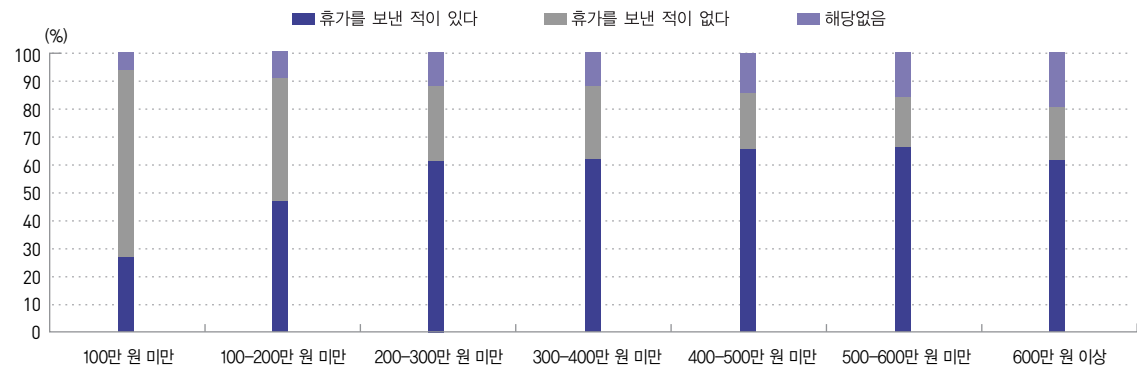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인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휴가를 활용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사업장(직장)에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하계휴가나 연차휴가를 보낸 경험에 대해 100만 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7%이며 휴가를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9%이

었다. 상대적으로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휴가를 보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8.3%이며 휴가를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이었다(그림 V-6).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은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시간부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 부족의 문제도 경제적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림 V-6] 소득계층에 따른 휴가 유무¹⁾: 2010

주: 1) 지난 1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사업장 또는 학교를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하계휴가나 연차휴가를 보낸 경험 여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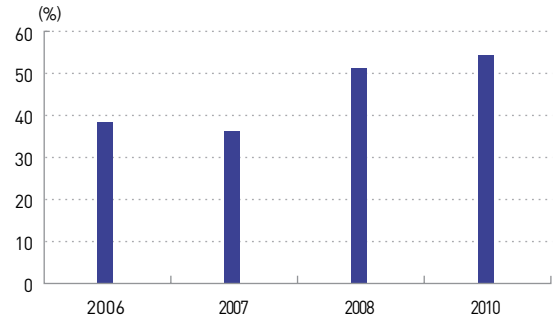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주40시간 근무제와 여가생활의 변화

2004년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는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에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06년도 실시비율이 37.9%에서 2010년도에는 53.8%로 4년동안 약 1.4배 증가하였다(그림 V-7). 특히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여가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가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 약간 증가의 비율이 50.0%, 매우 증가가 14.5%로 여가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생활의 변화내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52.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증가는 2006년 38.4%에서 2010년 52.2%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V-8).

[그림 V-7]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비율의 변화 :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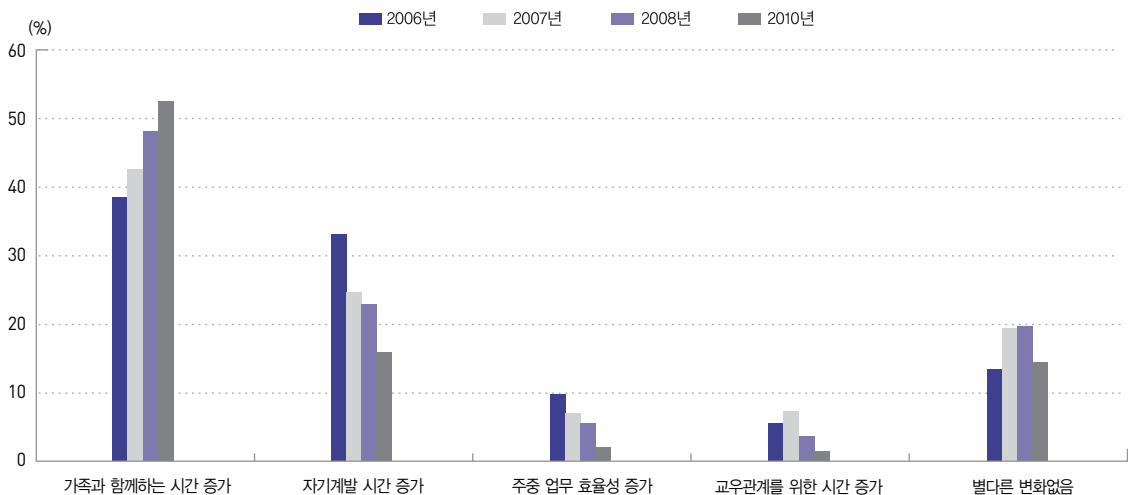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년도.

한편,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자기계발의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는 2006년 32.9%의 비율에서 2010년 15.7%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기계발 시간의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

[그림 V-8]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 2006-20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년도.

게하는 사람으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의 비율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57.3%에서 2009년 1.3%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가족단위의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말동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한편 [그림 V-8]에서 보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여가생활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간구조의 변화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14.4%(2010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대 등 여가환경의 변화에도 개인의 여가생활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의 여가생활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주말과 휴일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보다는 더 많은 여가시간과 여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전히 긴 노동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여유있는 시간을 갖기 어려우며 시간이 있더라도 여가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출하기 위한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들의 여가활동은 대부분 TV시청, 산책,

낮잠 등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쇼핑이나 외식, 인터넷 검색이나 채팅과 같은 오락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시간의 증대는 여행이나 스포츠, 그리고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함께 사람들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이 용이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체험하기 위해 비용이 요구되고 이러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활동의 체험과 제약에서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여가활용을 위한 자원분배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특정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 저소득 집단의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TV시청 등의 미디어 이용이나 저비용의 교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고 상대적으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그리고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여가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및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용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여가활용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제시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 여가활용의 문제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여전히 주말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여가문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동안 새로운 직업(second job)을 구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의 여가문제, 그리고 주5일 수업제로 집

에 혼자 남게 된 자녀들의 보육과 여가활용 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소영. 2008.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부상과 확산

요 약

- 한국 사회의 인터넷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떠오르고 있다. SNS 이용은 기존의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와 더불어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마이크로블로그를 포함한 실시간 소통과 관계맺기를 의미한다.
- SNS 이용의 주된 사회적 기능은 무엇보다 인맥의 관리이다. 이는 특히 학연을 중시여기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기존의 인터넷서비스가 정보의 제공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SNS는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모르지만 자신과 취향이 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다.
- SNS 이용을 통한 관계맺기는 사회적 참여도 증가시키고 있다. 정치적 집회에서 교통정보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SNS 이용의 특성은 일상의 소소한 사생활을 공적인 공간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 사생활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프라이버시침해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다른 이들과의 소통의 질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주로 돈, 육체적 건강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이들과의 신뢰관계, 소통의 질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떠오르고 있다. 이 요인들은 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주위에 얼마나 친구들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주위에 친한 이들이 없고 고립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높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한국 사회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해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는 높아지고 있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확산 등을 통해 개인들의 고립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개인들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인맥을 중시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 서비스는 사회성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다. 최근에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이동전화가 결합되는 스마트폰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SNS 이용의 확산속도와 그 폭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삶의 질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SNS는 블로그, 개인홈피,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트위터¹⁾, 페이스북²⁾ 등 실시간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특히 아이폰,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주된 기능인 SNS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도 존재해왔던 SNS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SNS 이용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양상으로 진화 중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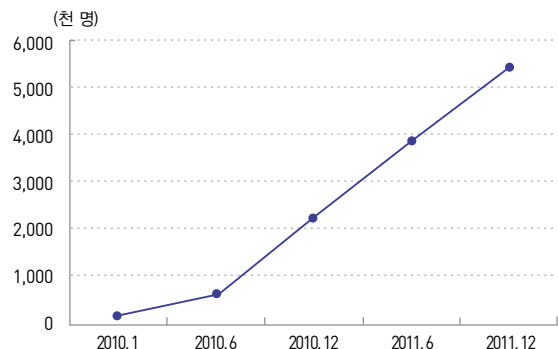
먼저 사용된 자료들에 관해서, 통계청 자료는 현재 SNS 이용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들은 없었기에 국책 연구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소셜미디어 전문 조사기관들의 관련 조사자료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SNS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가

2010년 하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전국단위 조사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향후 통계청 조사에도 SNS 이용 관련 항목들이 삽입될 것이라고 본다.

SNS 이용자 수의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마이크로블로그이용실태』(2010) 조사에 따르면, 만 12~49세 인터넷이용자의 76.4%가 SNS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마이크로블로그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9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트위터 이용자수는 137만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2011년 12월 현재 그 수는 약 4배 가량인 544만 명에 달하고 있다(그림 V-9). 이러한 증가 추세는 스마트폰 등 SNS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미디어기기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트위터에 비해 사회적 이슈는 덜 다루면서 개인의 친근한 인맥 중심의 SNS

[그림 V-9] 트위터 이용자수¹⁾의 변화: 2010-2011



주: 1) OikoLab에 의해 한국인으로 추정되어 필터링 된 트위터 사용자 계정에 대한 개수임(2011년 12월 집계).

출처: 트위터한국인인덱스(<http://tki.oiko.cc>)

1) 트위터(www.twitter.com): 140자 이내의 텍스트로 이용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SNS. 주로 정보와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음.

2) 페이스북(www.facebook.com): 인맥을 중심으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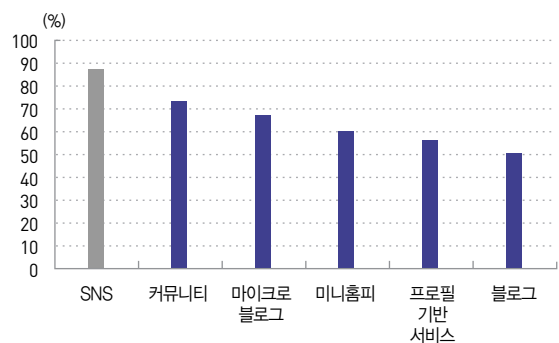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국내 이용자수는 2010년 6월에는 100만 명이었으나 2011년 1월에는 340만 명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12월 현재 536만 명까지 증가하였다(소셜베이커스닷컴³⁾). 반면 기존 SNS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회원수 2,00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최근 1-2년간은 그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코리안клик, 2010). 이에 대해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SNS 이용과 스마트폰

SNS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이다. 집이나 사무실과 같이 고정된 데스크탑에서만 이루어지던 SNS 이용은 실시간 소통에 있어서 한계를 지녔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SNS 이용이 이동 중에도 Wi-Fi나 3G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87.1%가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커뮤니티(72.7%), 마이크로블로그(66.4%)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곧 SNS 이용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새로운 미디어 기기의 도입이 새로운 소통방식, 관계형성을 가져오

고 있는 것이다.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SNS 이용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SNS 이용은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보다 실시간적이고, 보다 관계지향적인 새로운 SNS의 경우에는 유선과 무선 모두 증가하고 있다. 두 서비스가 2010년 말부터 한국에 소개되면서 인터넷 유저들이 이 두 서비스 사용에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매트릭스(<http://www.metrix.co.kr>) 자료를 보면, 트위터의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0년 5월 유선기반 월간 트위터 이용자가 3,945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5월의 경우에는 13,556명으로 3.4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유선기반 월간 페이스북 이용자는 2,640명이었으나 2011년 5월에는 18,601명으로 무려 7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2010년까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의 서비스들이 유선기반 SNS를 주도하였으나 2011년이 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의 서비스들이 유선기반 SNS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선을 기반으로 하는 SNS 이용의 경우에는

[그림 V-10]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경험¹⁾: 2011



주: 1) 중복응답 비율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2011.

3) 소셜베이커스닷컴(www.socialbakers.com): 페이스북, 트위터와 관련된 전 세계 이용자들의 통계를 수집, 분석하는 글로벌리서치센터.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2010년 5월 무선기반 월간 트위터 이용자가 313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5월에는 2,704명으로 8.6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2010년 5월 무선기반 월간 페이스북 이용자는 132명이었으나 2011년 5월에는 2,457명으로 무려 18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역시 아이폰, 갤럭시 등 스마트폰이 이동전화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NS 이용의 성별, 세대별 차이

SNS 이용에 있어서 먼저 성별차이를 보면, 트위터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0)의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남성의 팔로잉⁴⁾ 수는 34.1명으로 여성의 팔로잉 수인 25.5명보다 많았으며, 팔로워⁵⁾수의 경우에도 남성의 팔로워 수는 26.3명으로 여성의 팔로워 수인 20.7명보다 많았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상호소통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인 맞팔률⁶⁾의 경우 여성이 53.2%로 남성의 51.4%보다 근소하나마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SNS 이용의 양적인 부분에서는 남성보다 작지

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의 경우에 한국의 전체 이용자 중 56.0%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이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은 새로운 미디어 공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의 활용에서 여성보다 적극적인 남성들의 이용비율이 더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트위터의 경우에 세대별로 보면 팔로잉,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세대는 31-4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의 팔로잉 수는 35.1명인 반면, 41세 이상의 팔로잉 수는 17.7명에 불과하였다. 31-40세 세대의 팔로워 수는 28.4명인 반면, 41세 이상 세대의 팔로워 수는 11.1명이었다. 31-40세 세대는 19-30세 세대보다 트위터 팔로잉/팔로워 수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보통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고교 2-3학년에서 30세 미만에 이르는 청년세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에는 그 적극적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 오히려 31-40세 세대가 가장 주도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용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대는 25-34세의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4%), 18-24세의 세대가 31%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5-44세 세대가 16%의 비중을 보였다(그림 V-11). 페이스북의 경우 소위 말하는 네티즌 세대가 그대로 페이스북을 주도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이슈 공유가 중요한 동기인 트위터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세대가 주도 집단이며, 사회적 이슈 공유보다는 개인적 인맥의 유지가 중요한 동기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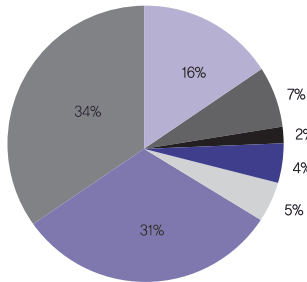
4) 팔로잉: Following. 트위터의 용어로 이용자 A가 이용자 B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팔로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배우 김갑수의 트위터에 연결되고자 시도한다면, 홍길동은 김갑수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것이다.

5) 팔로워: Follower. 트위터의 용어로 이용자 A가 이용자 B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용자 A는 이용자 B의 팔로워가 된다. 위의 예에서 홍길동은 김갑수의 팔로워가 된다. 김연아, 김갑수 등 스타들의 팔로워수는 그 스타의 인기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6) 맞팔률(%) = (나의 팔로워 중 내가 팔로잉 한 사람의 수×100)÷팔로워 수

[그림 V-11] 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세대 분포¹⁾: 2011

13~15세 16~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주: 1) 2011년 11월에 집계된 자료임.

출처: 소셜베이커스(<http://www.socialbake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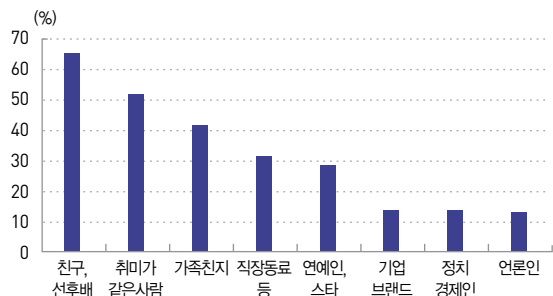
18~34세 세대가 주도집단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이용과 인맥관리

상호소통의 밀도를 보면, 한국의 SNS 이용의 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2010)에 따르면, 트위터의 경우 자신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유저가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에 댓글을 달아 그 유저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무려 80.6%에 달하였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치보다 11%나 높은 것이다(이원태, 2010).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인맥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자체의 목적이 유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SNS 이용 관련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2011)에 의하면 전체 이용자의 69.3%가 SNS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다음이 56.6%인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라는 답변이었다. 이는 페이스북 등의 SNS가 기존의 웹과는 다르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장 초기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만 검색하다보면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인터넷이 소통과 관계형성 쪽으로 진화되어감에 따라 이제 인터넷은 SNS 이용 등으로 소통과 관계형성의 양적, 질적 수준을 진화시키는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SNS 이용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DMCreport(2010)에 따르면 SNS 사용 목적 중 친목/인맥관리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보교류가 59.8%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이용을 선택한 이유로 친목/인맥관리가 56.7%, 정보교류가 36.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도 친목/인맥관리가 83.3%, 정보교류가 63.3%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스북이 대단히 관계지향적인 매체임을 보여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등 마이크로블로그형 SNS 가입자의 87.9%

[그림 V-12]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인맥의 구성¹⁾: 2010

주: 1) 만 12~49세 인터넷 이용자 2,247명 중 마이크로블로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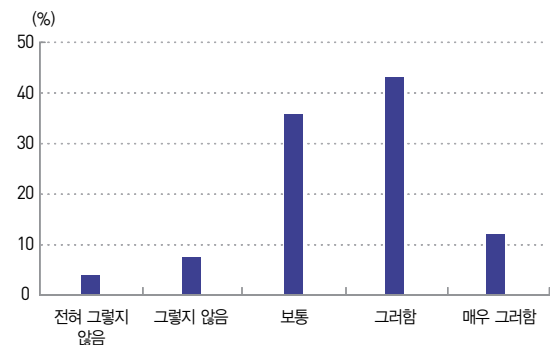
가 타인과의 관계맺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SNS가 관계맺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비교해서 트위터는 정보교류의 매체로서의 특징을 뚜렷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MCreport(2010)에 의하면 트위터를 선택한 이유로는 정보교류가 5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친목/인맥관리로 31.4%였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81.6%가 정보교류였으며, 친목/인맥관리는 66.5%였다. 이는 모르는 이들과도 많이 팔로잉/팔로워 관계를 맺고 있는 트위터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은 정보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SNS인 페이스북은 친목/인맥관리의 기능을 더욱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SNS에 대해서 단지 사회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왜 한국인들은 인맥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이 자신의 실질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인맥을 갈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의 이익을 미리 챙기기 위해서라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자긍심(self esteem)’이다. SNS 이용은 내가 다른 이에게 ‘친구맺기’를 요청하면, 다른 이가 ‘친구맺기’를 승낙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이가 나에게 ‘친구맺기’를 요청하면, 내가 ‘친구맺기’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른 이가 나의 요청을 승낙했을 때, 다른 이가 나에게 친구맺기를 요청했을 때 ‘나’는 무언가 중요한, 가치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익명의 대중

들이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 있어 자신의 익명성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요인이 SNS 이용에 참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 관계맺기를 경험한 54.3%가 ‘누군가 나에게 관계맺기 신청을 하면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V-13]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관계맺기에서의 자긍심¹⁾: 2010



주: 1) “누군가 마이크로블로그로 나에게 관계맺기 신청을 하면 뿌듯함을 느끼는가?”라고 질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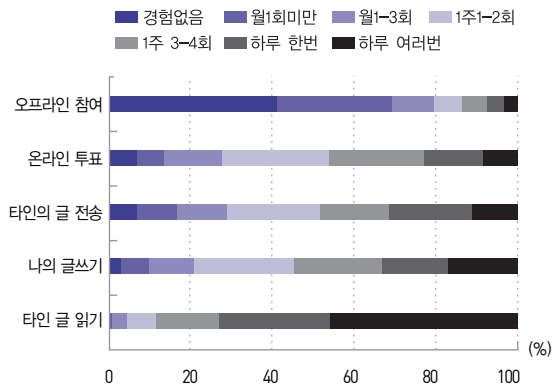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 2010.

SNS와 사회적 참여

한국의 SNS는 사회적 참여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SNS가 얼마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일반 시민들을 집회로 이끌어낸 것은 바로 SNS의 힘이었다. 지인과 지인간에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시민들은 현재 이슈에 관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상호 토론하면서 참여에 나섰다. 최근 들어 실시간 소통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지닌 트위터의 경우에는 보다 민첩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2010년 홍수, 2011년 우면산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실시간 현장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참여의식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 강변북로에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넘어져 있다’, ‘우면산부근에 방배역쪽도 침수가 심하니 돌아가야 한다’와 같은 정보공유가 그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더불어 소위 ‘오피니언리더’들을 통한 사회적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들과 사회이슈에 대해 토론, 논쟁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 중에서 ‘하루 1번 이상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타인의 글을 읽는’ 이가 75%에 달하였다.

[그림 V-14]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사회적 이슈 관련 활동 참여 현황¹⁾: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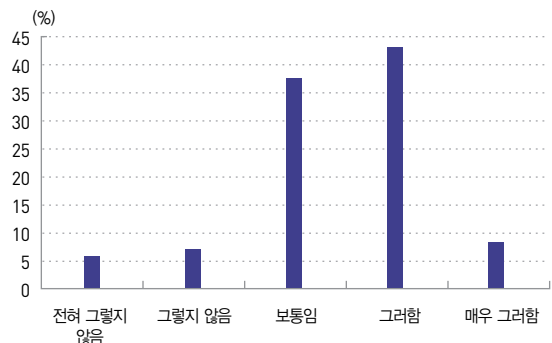
주: 1)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사회적 이슈정보 습득자에 대한 비율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 2010.

SNS 이용의 역기능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과거 사적인 이야기는 나의 책상서랍에 몰래 감추어둔 일기장에만 기록하는 것이었다. 사적인 이야기는 사적인 공간에만 담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 중에 자신의 인상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이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들은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 SNS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타인의 감정 및 일상변화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그림 V-15). 기존의 커뮤니티에서는 취향의 공유를 중심으로, 블로그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미니홈피와 마이크로블로그는 자신의 일상이 담긴 모든 소소한 일들이 바탕이 되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이야기들이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사적공간과 공

[그림 V-15]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을 통한 타인과의 사적인 소통: 2010



주: 1) “마이크로블로그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감정 및 일상변화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 2010.

적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내용들이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되어 갈 때이다. 나와 내 친구 사이에는 전혀 문제없는 나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내 친구의 친구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웹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에 비해 대단히 개방적인 SNS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원태, 2010) 조사결과에서도 유저들은 ‘개방성에 의한 신분노출’을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고 전체의 40.0%가 응답하였다.

사생활노출과 더불어 SNS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다. SNS 이용 유저들은 다른 유저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홍수가 났을 때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유저들의 정보, 불치병 환자에 대해 올리는 유저들의 정보, 맛집에 대해 유저들이 올리는 정보에 대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참여문화와 신뢰연구』(2010)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한 획득 정보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 혹은 ‘신뢰하는 편이다’가 전체의 84.4%에 해당하였다.

문제는 고의로 올렸던, 고의로 올리지 않았던 ‘잘못

된 정보’가 올려지고, 그 정보가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확장되었을 때이다. 그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판단하고 다시 알리기 전에 이미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는 실시간 SNS 이용에 대해 유저들 역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2010년 이후 정보사회의 변화는 스마트폰과 같이 방송과 통신, 인터넷과 전화기의 결합매체와 같은 소위 컨버전스 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기들이 가져올 변화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가져왔던 변화에 버금갈 정도의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SNS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변화이다. 사회자본의 수준에서,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SNS가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국민생활조사에 있어서는 주로 이동전화 사용과 인터넷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SNS와 관련된 문항들이 만들어져 국민들의 생활변화를 보다 밀착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이다. SNS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 새로운 기술이 한국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원태. 2010.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항섭. 2010. 「방통융합 환경에서 참여문화와 신뢰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MCreport. 2010. 「SNS에 대한 사용자 인식조사 보고서」.
- 매트릭스 홈페이지(<http://www.metrix.co.kr>).
- 코리아 클릭 홈페이지(<http://www.koreanclick.com>).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요 약

- 문화산업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민경제의 성장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캐릭터, 방송,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이 성장한 반면 영화산업과 게임산업은 구조조정을 수반한 침체를 겪었다.
- 문화산업의 구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뉴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제작에 비해 유통 부문의 비중이 커서 창작 및 제작 분야의 수익분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다.
-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수출 증가와 한류 확산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문화산업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화산업의 주요 특성이다(Hesmondhalgh, 2002). 이런 점에서 문화산업의 수출입 현황과 자국 문화산업의 점유율은 무역수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주권의 문제이다. 특히 한류 확산과 함께 문화산업은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까지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규모, 구조 변화, 경쟁력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규모

김대중 정부가 문화산업진흥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진 이래 문화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창조경제의 부상과 함께 문화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다. 문화산업은 기대처럼 꾸준히 성장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면모를 증명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검토하기에 앞서 문화산업의 범위와 통계 자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공연, 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 문화 기반 산업, 문화상품 대상 전시회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에 가깝게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생산해 온 『문화산업통계』였다. 『문화산업통계』는 문화산업 부문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매출액과 종사자, 부가가치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콘텐츠산업정책 일원화를 추진하며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합하

여 『콘텐츠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콘텐츠산업통계』는 기존의 『문화산업통계』에 더하여 지식정보산업 분야와 콘텐츠솔루션산업 분야를 추가하였다. 지식정보산업 분야는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등의 중분류들로 구성되었고, 콘텐츠솔루션산업 분야는 저작물, 콘텐츠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결제, CMS, CDN, 기타(콘텐츠 저장과 검색 도구 등) 등의 소분류들로 구성되었다. 지식정보산업과 콘텐츠솔루션산업은 문화산업 분야와 연관성을 갖지만 문화산업의 하위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콘텐츠산업통계』에서 지식정보산업과 콘텐츠솔루션산업을 제외한 분야들을 문화산업 분야로 설정하여 문화산업 통계로 사용하였다.

문화산업 매출액을 추정하면 2009년 61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과 2005년 기준 연평균 증감률에서 모두 3.9% 증가를 보였다(표 V-3). 이와

〈표 V-3〉 문화산업 매출액: 2005-2009

(백만 원, %)

구분	매출액					구성비 ¹⁾ (%)	전년대비 증감률 ¹⁾ (%)	연평균 증감률 ¹⁾ (%)
	2005	2006	2007	2008	2009			
출판	19,392,156	19,879,255	21,595,539	21,052,936	20,609,123	33.4	-2.1	1.5
만화	436,235	730,072	761,686	723,286	739,094	1.2	2.2	14.1
음악	1,789,875	2,401,309	2,357,705	2,602,076	2,740,753	4.4	5.3	11.2
게임	8,679,800	7,448,900	5,143,600	5,604,700	6,580,600	10.7	17.4	-6.7
영화	3,282,219	3,622,528	3,183,301	2,885,572	3,306,672	5.4	14.6	0.2
애니메이션	233,855	288,564	311,166	404,760	418,570	0.7	3.4	15.7
방송	8,635,200	9,719,862	10,534,374	11,685,533	12,768,963	20.7	9.3	10.3
광고	8,417,779	9,118,059	9,434,625	9,311,635	9,186,878	14.9	-1.3	2.2
캐릭터	2,075,893	4,550,932	5,115,639	5,098,713	5,358,272	8.7	5.1	26.8
합계	52,943,012	57,759,481	58,437,635	59,369,211	61,708,925	100.0	3.9	3.9

주: 1) 구성비와 전년대비 증감률은 2009년 기준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2005-2009년의 증감률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0, 재구성.

같은 성장 속도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문화산업 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문화산업 매출액 규모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6%대에 머물렀다. 다만 2009년 경제위기에서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이 0.3%에 머물렀을 때 문화산업이 4%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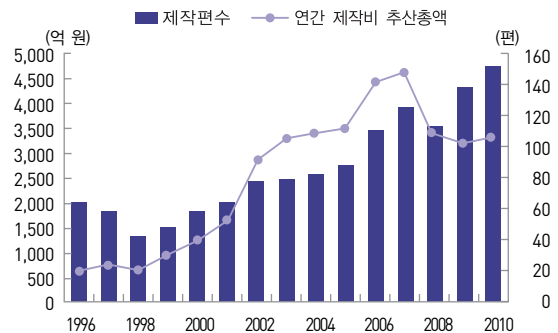
문화산업이 이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영화산업과 게임산업이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캐릭터,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한 반면 게임산업과 영화산업은 구조조정을 수반한 침체기를 겪었다.

영화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온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2006년 3조 6천억 원대까지 성장하였으나 침체기를 겪으면서 2008년에는 2조 8천억 원대까지 감소했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4.6%나 성장하였지만 2006년의 매출액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영화산업의 침체는 양적 확대 이후 나타난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영화 흥행에 따른 기대심리로 기획개발과 투자에 따른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2007년까지 양적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2007년에 수익률이 -40.5%까지 떨어졌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전체 제작 편수의 10.7%에 불과했다(영화진흥위원회, 2008). 제작비 급증과 수익률 악화로 비롯된 위기 상황 이후 제작비 감소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세는 영화 제작편수가 2008년 이래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2편이 제작된 것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은 2010년의 제

작비가 3,283억 원으로 추산되어서 투자액의 정점을 이루었던 2007년의 4,612억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1,329억 원이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V-16). 제작편수가 증가하는데도 총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평균 제작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는 2000년대 초반 증가하여 2003년과 2004년 41억 원까지 도달했지만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는 21억 원까지 낮아졌다. 2004년에 비하면 절반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8년에 -43.5%까지 떨어졌던 한국 영화의 수익률이 2009년에는 -13.1%, 2010년에는 -8.0%로 집계되면서 투자 수익률 상승과 영화산업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림 V-16] 연도별 한국영화 제작 투자: 1996~201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0.

게임산업 역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5년 8조 6천억 원까지 성장했으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2006년부터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겪으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대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은 캐릭터산업이었다. 2005년 2조 원대의 매출액에서 2009년 5조 3천억 원대로 매출액이 성장하여 26.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캐릭터 상품 제조업의 성장, 2차 콘텐츠 개발에 따른 라이선스 활성화, 토종 캐릭터 개발 성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문화산업의 규모에서 매출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 효과이다. 제조업의 시대가 지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문화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문화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문화산업 종사자는 총 46만 1,012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연평균증감률은 0.7% 증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성장이 연평균 3.9% 증가한 데 비해 종사자 수 성장의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게임과 영화산업에서 나타난 침체기의 영향이 크다.

콘텐츠별로 보면 종사자 수에서 출판산업의 비중이 가장 커서 전체 문화산업 종사자의 44.9%에 해당했

다. 출판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33.4%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출판산업의 고용 효과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종사자 수가 크게 성장한 분야는 캐릭터산업이었다. 2005년 8,825명이 종사했는데 2009년에는 23,406명까지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산업의 성장이 종사자 수 증가를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게임산업은 종사자 수가 2009년 43,365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2005년의 6만 명 수준에는 못 미쳤다.

문화산업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임금과 주당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지만 짧은 근속 및 경력기간, 소규모 기업 취업,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의 질적 측면은 취약했다(허식, 2009). 또한 고숙련 프리랜서의 노동이 자율성·창의성·전문성의 특징을 가지는 반면 저숙련 프리랜서의 노동은 고용 불안정성이 커서 양 극단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황준욱 외, 2009).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문화산업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4〉 사업형태별 매출액 비중: 2010

(백만 원, %)

구분	창작 및 제작	제작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전체 매출액
출판	44.8	0.1	1.3	50.8	3.0	16,535,182
만화	43.0	0.5	0.1	54.8	1.5	739,094
음악	12.8	1.4	1.4	74.8	9.6	2,740,753
애니메이션	83.7	3.0	0.2	10.7	2.4	358,503
독립제작사	93.7	1.9	0.0	2.9	1.4	796,175
캐릭터	42.4	2.4	2.6	51.6	1.1	5,358,272
전체 매출액	11,401,499	216,273	391,710	13,673,490	845,007	26,527,979
구성비	43.0	0.8	1.5	51.5	3.2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0.

문화산업의 구조

문화산업의 구조는 사업형태별 매출액을 통해 파악하였다. 콘텐츠산업통계에서 집계된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독립제작사, 캐릭터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통/배급의 매출액 비중이 51.5%로 창작 및 제작의 43.0% 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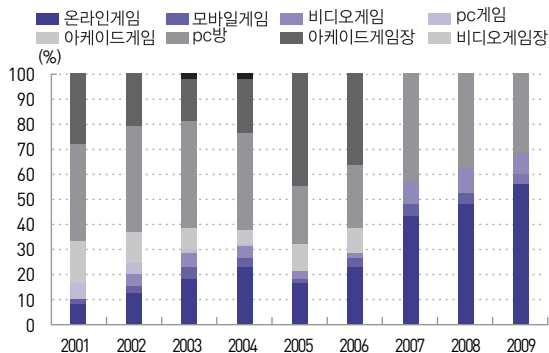
콘텐츠별로 보면 산업적 특성에 따라 산업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음악산업은 유통/배급의 비중이 74.8%로 창작 및 제작의 1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였다. 이는 노래연습장 운영업과 온라인 음악유통업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반면 독립제작사와 애니메이션은 창작 및 제작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독립제작사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중 창작 및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독립제작사들이 납품 위주로 매출을 올리며 영상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통/배급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극장 애니메이션 상영이 부진하여 유통/배급에서 큰 매출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문화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다. 문화산업은 출현에서부터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이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D, 4D의 디지털 첨단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멀티 플랫폼과 오픈 플랫폼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P2P를 통한 불법복제 파일 공유가 증가하는 상황이 위기로 작용하면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게임산업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게임시장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게임산업은 구분 자체가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초고속 인터넷 확산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의 비중이 급증하여 2001년 8.8%에서 2009년 56.4%까지 확대되었다. PC방의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한 반면 온라인 게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비디오게임은 새로운 기기 개발과 보급에 따라 2000년 0.5%에서 2009년 8.0%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그림 V-17).

[그림 V-17] 연도별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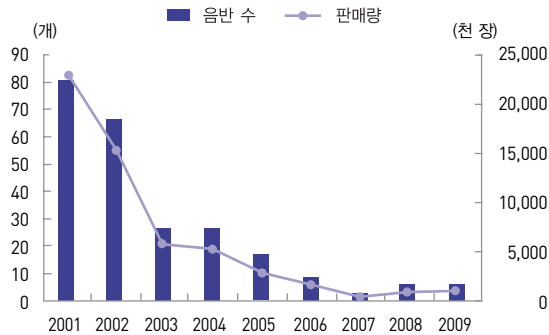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게임백서」, 2010.

음악산업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이 축소되었다. 국내에서 10만 장 이상 판매된 음반이 2001년에 80개였고 판매량이 2,286만 장에 달했는데 2009년에는 6개 음반만이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렸고 이 히트음반의 총 판매량도 898만 장에 불과했다(그림 V-18). 히트음반의 판매 시장이 판매량 기준으로 2001년에 비해 2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음악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음악 유통업이 크게 성장했다. 온라인 음악 유통

[그림 V-18] 국내 10만 장 이상 판매 음반 추이: 2001-200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백서」, 2010.

업의 매출액이 2007년 4,276억 원에서 2009년 5,696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15.4%나 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음악산업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모바일 음악서비스업의 매출액이 2009년 765억 원으로 2007년의 1,031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기존의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시장 포화 상태에 달하고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새로운 음악 콘텐츠 수요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따른 결과였다. 반면 월 정액 이용요금 시장의 확대에 의해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매출액 규모가 2007년 1,667억 원에서 2009년에 3,599억 원

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6.9%에 달했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에 의해 온라인 음악 유통업에서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2%에 달했다(표 V-5). 인터넷을 통한 문화콘텐츠 유통에서 부가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라인 불법 유통이다. 온라인 불법유통이 보편화되어 있어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3.8곡의 불법음악저작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약 538원(연 6,39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의 경우도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한 관람률이 여전히 높았다. 매체별 인터넷 및 모바일 영화 관람률을 보면 인터넷 무료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 비율이 64.3%로 나타나 유료 다운로드 및 VOD 관람률 45.0%보다 높았다(엠브레인, 2010).

유통과 배급 부문의 변화는 전체 산업 성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멀티플렉스의 증가는 한국 영화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해 왔던 멀티플렉스로의 전환이 최근 정체되었다. 2010년 멀티플렉스 비중을 보면 극장 수 기준에서는 79.1%, 스크린 수 기준에서는 92.8%, 관객 수 기준에서는 97.6%, 매출액 기준에서는

〈표 V-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2007-2009

	매출액			구성비 ¹⁾ (%)	전년대비 증감률 ¹⁾ (%)	연평균 증감률 ¹⁾ (%)
	2007	2008	2009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3,170	87,650	76,502	13.4	-12.7	-13.9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6,756	253,082	359,969	63.2	42.2	46.9
음원대리중개업	18,519	39,671	60,331	10.6	52.1	80.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39,204	146,042	72,799	12.8	-50.2	-27.7
합계	427,649	526,445	569,601	100.0	8.2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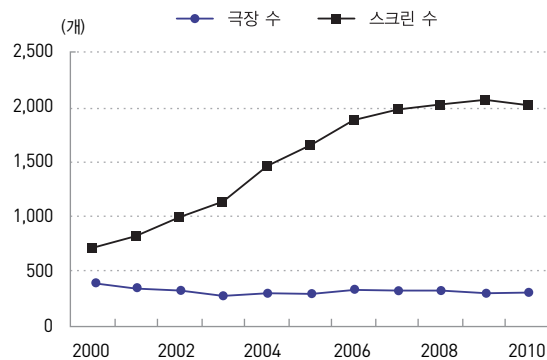
주: 1) 구성비와 전년대비 증감률은 2009년 기준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2007-2009년의 증감률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백서」, 2010.

97.7%에 달했다. 멀티플렉스로 전환될 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새로운 멀티플렉스 설립도 없어 상영 부문의 성장은 멈춘 것으로 보인다.

멀티플렉스로의 전환에 따른 스크린 수 증가는 200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해 2010년에는 오히려 스크린 수 감소가 나타났다(그림 V-19). 스크린당 인구수도 2000년 6.57명에서 2009년 2.4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0년 2.5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997년 강변 CGV에서 시작된 멀티플렉스로 전환과 상영 부문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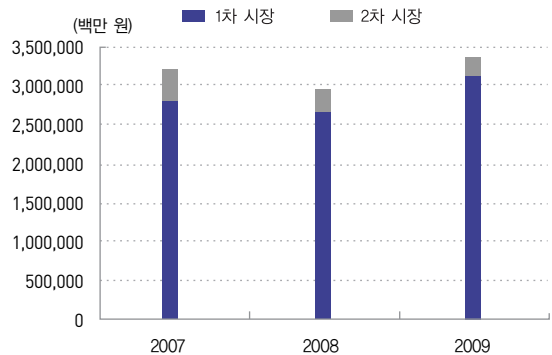
[그림 V-19]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2000-201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0」.

영화산업의 취약한 부가시장은 영화산업 전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시장별 매출액을 보면 2009년에 1차 시장의 매출액이 3조 1천억 원대로 전년에 비해 17.8%나 증가했으나 2차 시장의 매출액은 2009년에 2천억 원대로 2007년의 4천억 원대에 비해 감소했다(그림 V-20). 2차 관련 시장이 취약하다는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결함이 더 심화되었다. VHS/DVD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통 매체로 각광을 받았던 온라인 상영의 매출액도 2009년 223억 원에 머물러 2008년 185억 원에 비해

[그림 V-20] 영화산업 시장별 매출액: 200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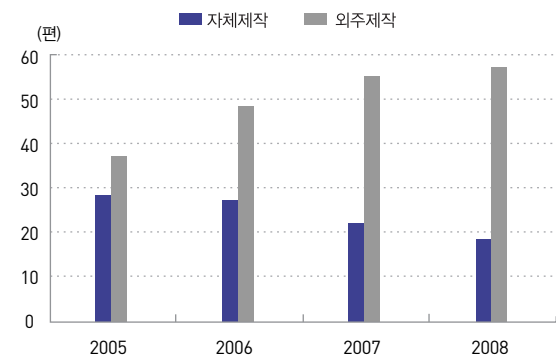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0」.

서는 증가했으나 2007년 382억 원에는 못 미쳤다. 2차 시장의 부진은 영화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제작 투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지배구조를 완화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다양화를 위해 1990년 외주제작 정책이 도입된 이후 방송산업의 제작과 유통 분리가 가속화되었다. 드라마 제작을 보면 자체제작 편수가 2005년 28편에서 2008년 18편으로 줄어든 반면 외주제작은 같은 기간 37편에서 57편으로 증가했다(그림 V-21). 외주제작의 증가 과정에서 외주제작사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해 수익률 및 제작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적정 시장보다 많은

[그림 V-21]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형태: 2005-2008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II, 2009」.

독립제작사의 증가가 과당경쟁을 유발하면서 프로그램 질 저하와 영세규모 독립제작사 양산을 가져오고 있다. 방송사 역시 드라마 자체 제작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김관규·정길용, 2009).

음악산업에서는 유통/배급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이 창작 제작자의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음반시장의 쇠퇴와 동시에 성장한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수익 배분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상품들 중에서 다운로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서 사업자가 권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김종준, 2010). 권리자와 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BGM, 벨, 링, 스트리밍에서는 약 4:6, 다운로드에서는 5.4:4.6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아이튠즈의 경우 약 7:3, 일본 모바일 사업의 경우 약 6:4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지털 음원의 수익 배분 구조가 사업자 위주로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강요되는 구조에서 음악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

〈표 V-6〉 디지털 음원의 수익 배분 구조: 2010

	BGM	벨	링	스트리밍	다운로드	다운로드 (월정기)
시장가	곡당 600원	곡당 800원	곡당 약 1,300원	3,000원	1곡당 600원	월정 40곡 5,000원
권리자	42.5%	38.5%	38.5%	42.5%	54.0%	52.7%
사업자	57.5%	61.5%	61.5%	57.5%	46.0%	47.3%

출처: 김종준(2010) 재구성.

문화산업의 경쟁력

문화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09년 21억 4,512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이며 2005년의 12억 3,076만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14.9%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로 보면 게임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게임산업의 수출규모는 12억 4,085만 달러로서 문화산업 전체 수출 규모의 절반을 넘는 57.8%에 달했다. 2005년의 5억 6,466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1.8%나 되었다(표 V-7). 지난 5년 동안 게임산업이 폭락을 경험한 것과는 달리 수출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출판산업과 캐릭터산업이었다. 출판산업은 2009년 수출 규모가 2억 5,076만 달러로 문화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 연평균 증가율은 7.0%에 달했다. 캐릭터산업은 2009년 수출규모가 2억 3,652만 달러로 문화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 연평균 증가율은 9.6%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방송과 음악 역시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방송의 수출규모는 2005년 1억 2,176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억 8,457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나타났다. 음악은 2009년 수출규모가 3,126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89.9%나 성장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8.8%나 되지만 문화산업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다.

반면 영화의 수출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하락했다. 2005년 수출규모 7,599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하여 2009년 수출규모는 1,412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영화의 수출감소는 음악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 2005년에는 영화의 수출이 음악 수출의 3배 이상이었는데 2009년에는 영화의 수출이 음악 수출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문화산업의 수입에서는 방송의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317만 달러에서

〈표 V-7〉 문화산업 수출 규모: 2005-2009

(천 달러, %)

구분	수출규모					구성비 ¹⁾ (%)	전년대비 증감률 ¹⁾ (%)	연평균 증감률 ¹⁾ (%)
	2005	2006	2007	2008	2009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11.7	-3.6	7.0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0.2	1.8	6.5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1.5	89.9	8.8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57.8	13.4	21.8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0.7	-32.9	-34.3
애니메이션	78,429	66,834	72,770	80,583	89,651	4.2	11.3	3.4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84,577	8.6	7.7	11.0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4.3	555.4	77.6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11.0	3.6	9.6
합계	1,230,764	1,368,142	1,556,842	1,889,908	2,145,121	100.0	13.5	14.9

주: 1) 구성비와 전년대비 증감률은 2009년 기준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2005-2009년의 증감률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 201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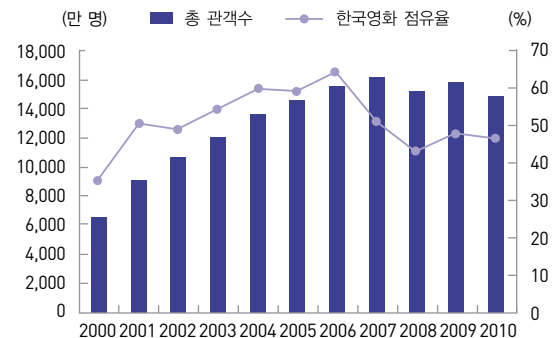
2009년에는 1억 8,301만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3.5%에 달했다. 방송 수입국을 보면 특히 미국의 방송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송보다는 적지만 영화의 수입 규모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05년 4,683만 달러에서 2009년 7,364만 달러로 증가하여 영화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2.0%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화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동안 수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수입의 증가는 한국영화 점유율과도 연관되었다. 연도별 한국영화 점유율과 관객수를 보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총 관객수와 한국 영화 점유율 모두 감소세에 있다. 총 관객수는 2007년까지 증가한 이후 관객수가 감소세에 들어섰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2000년의 35.1%에서 성장세를 이어와 2006년 63.8%에까지 도달했으나 최근 3년 동안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그림 V-22).

문화산업 수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일부 국가로의 편중 현상이다. 음악산업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수출 시장이었다.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7.9%, 2008년 68.1%, 2009년 69.2%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해 왔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음악 수출액도 3년 동안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09년 7.6%로 낮아졌다. 그 대신 비중이 높아진 것이 동남아였다. 동남아는 2009년 전년대비 149.6%가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림 V-22] 전체 영화 관객 수와 한국영화 점유율: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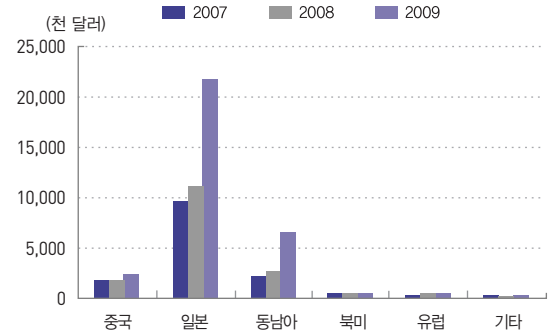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0.

비중도 2007년 14.8%에서 2009년 20.5%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에 문화산업 수출이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k-pop이 진출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009년 통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유사한 편중 현상을 볼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2009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1억 137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일본 수출액이 6,527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만 수출액이 1,156만 달러로 11.1%를 차지했고 중국 수출액은 633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했다. 이 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 반면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이 가장 많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해 온 게임산업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2008년에 비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게임의 수출입은 종류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다. 수출의 경우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12억 1,166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게임 수출액의 97.6%를 차지했다. 반면 비디오 게임은 2억 6,980만 달러를 수

[그림 V-23]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2007-200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백서」, 2010.

입하여 전체 게임 수입액의 81.2%를 차지했다.

최근 문화산업의 성장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문화산업의 산출물이 일상에 가득하고 미디어 소비의 핵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의 성장이 뚜렷하지 못한 것은 한국 문화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불안정한 고용, 온라인 불법유통, 윈도우 효과 부족, 수익배분구조 문제 등이 문화산업이 가지는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작자, 제작자들이 자신의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한류로 나타나는 문화산업의 대외 진출도 이와 같은 토대를 강화할 때 유지·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규·정길용. 2009. “지상파방송사 외주정책 성과 평가: 독립제작사 육성과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 김종준. 2010. “불합리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유통과 수익 배분 진단”. 「음원가조」. 2010년 Autumn/Winter.
- 엠브레인. 2010. 「2010 영화소비자조사 보고서」.
- 영화진흥위원회. 2008. 「2008년 한국영화연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허식. 2009. “문화산업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제조업과 문화산업 간의 비교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 황준옥 외. 2009.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 영화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Hesmondhalgh, D. 2002.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Sage.

VI. 환 경

Environment

- 기후변화의 문제와 대응의 추이 • 김해동 168
-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 박희제 179
-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 사회 • 박진희 187

기후변화의 문제와 대응의 추이

요 약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응은 1974년에 유엔이 하부 기관으로 세계기상기구(WMO)를 설립하게 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처노력은 매우 늦어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듬해인 1998년 4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인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에 수립된 제4차(2008-2012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온실가스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과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 이행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 방침을 강화하였으며, 협상 대응, 온실가스 배출 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등의 5대 부문으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업무에서 녹색성장위원회로 이전되었다.
-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코펜하겐회의) 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흐름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중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약 5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혹독한 이상 기후가 빈발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는 일은 여전히 힘겨운 과제로 남아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21세기 최대의 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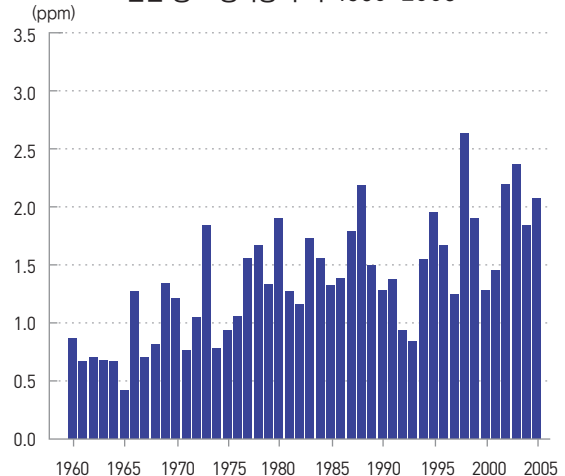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설정하고, 온실가스의 감축과 미래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체제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처해 온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제4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부처별 노력과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본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온의 상승추세와 전망

대기 중 이산화탄소(CO_2)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약 2ppm정도씩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390ppm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 800년 동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량은 20ppm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 이후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ppm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1).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전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평균 $6.4 \pm 0.4 \text{ Gt/yr}$ 에서 2000-2005년에는 $7.2 \pm 0.3 \text{ Gt/yr}$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I-1]의 막대그래프는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전 지구 평균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년변동을 나타낸다. 최대 증가를 보인 해는 1998년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하였다. 반면에 1993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0.7% 증가하는 데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세계 경제활동의 부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매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국제사

[그림 VI-1]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간 농도 증가량 추이: 1960-2005



출처: 기상청, 「기후변화 2007 과학적 근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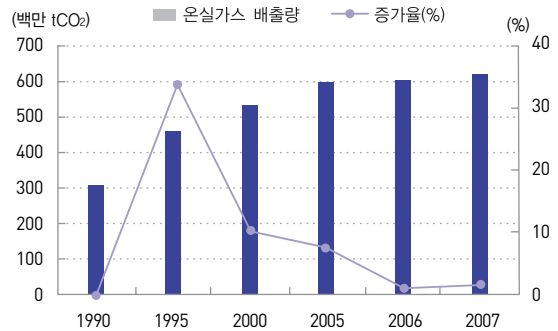
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근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증가가 탁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2% 정도이지만,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에너지관리공단, 2010).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IPCC, 2007). 온도계를 이용하여 기온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은 1850년대 이후의 일이다. 18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기온상승 속도는 100년에 0.45℃정도 인데, 최근 100년 동안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기온상승속도는 100년에 약 0.74℃로 평가된다. 다시 최근 50년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100년에 약 1.28℃, 최근 25년을 대상으로 하면 100년에 약 1.77℃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IPCC, 200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로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러한 경향은 2005년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I-2).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지구평균에 비하여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상연구소, 2009).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이 지구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해석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기온상승만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기온자료는 도시화가 현저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여기에는 지구온난화 효과와 도시열섬 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기온상승 성분에 포함된 도시화 효과를 배제해 보아도 지구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기상연구소, 2009),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대에 속하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일본의 지구온난화 속도(약 1.08℃/100년) 역시 지구평균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감안할

[그림 VI-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1990-2007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2010.

때 우리나라에 지구온난화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8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연간 4.3%의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공업 용매부문 중 수소불화탄소의 증가율은 10%를 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

[표 VI-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1990-2007

부문						(백만 tCO ₂ , %)	
	1990	2000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990-2007)
총배출량	305.5	534.5	596.7	602.6	620.1	2.9	4.3
CO ₂ (이산화탄소)	257.7 (84.4)	466.1 (87.2)	526 (88.2)	533.6 (88.5)	554.6 (89.4)	3.9	4.6
CH ₄ (메탄)	43.8 (14.3)	29.1 (5.4)	23.8 (4.0)	23.8 (4.0)	24.4 (4.0)	2.5	-3.4
N ₂ O (아산화질소)	3 (1.0)	16.9 (3.2)	20.8 (3.4)	18.7 (3.1)	11.7 (1.8)	-37.4	8.3
HFCs (수소불화탄소)	1.0 (0.3)	8.4 (1.6)	6.6 (1.1)	6.0 (1.0)	7.3 (1.2)	21.7	12.4
PFCs (과불화탄소)	n.a.	2.3 (0.4)	2.8 (0.5)	2.7 (0.4)	2.9 (0.5)	7.4	1.4
SF ₆ (육불화황)	n.a.	11.7 (2.2)	16.7 (2.8)	17.8 (3.0)	19.2 (3.1)	7.9	3.0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2010.

년에 대비하여 약 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표 VI-1). 장래에는 온실가스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경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증가율은 약 2.3%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소비(에너지 부문)와 산업공정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VI-2). 아울러 장래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의 대부분도 이들 산업 영역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래에도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PCC, 2007).

장래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인류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IPCC, 2007). SRES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21세기 말 지구 평균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1980-1999년 동안의 평균온도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구축되어질 경우에는 지구평균온도가 약 1.1℃정도 상승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등한시 할 경우에는 최대 6.4℃까지 지구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경우에도 지구온난화는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이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 2007).

기후변화 피해규모 증가추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홍수, 가뭄, 대설, 강풍 등의 이상 기후를 유발하여 대규모의 물질적, 인적 손실을 가져온다(기상청, 2007).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자연재해 발생건수(그림 VI-3)와 그로 인한 재산 피해액(그림 VI-4)을 나타내었다. 연도에 따라서 피해액이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

〈표 VI-2〉 장래 예상되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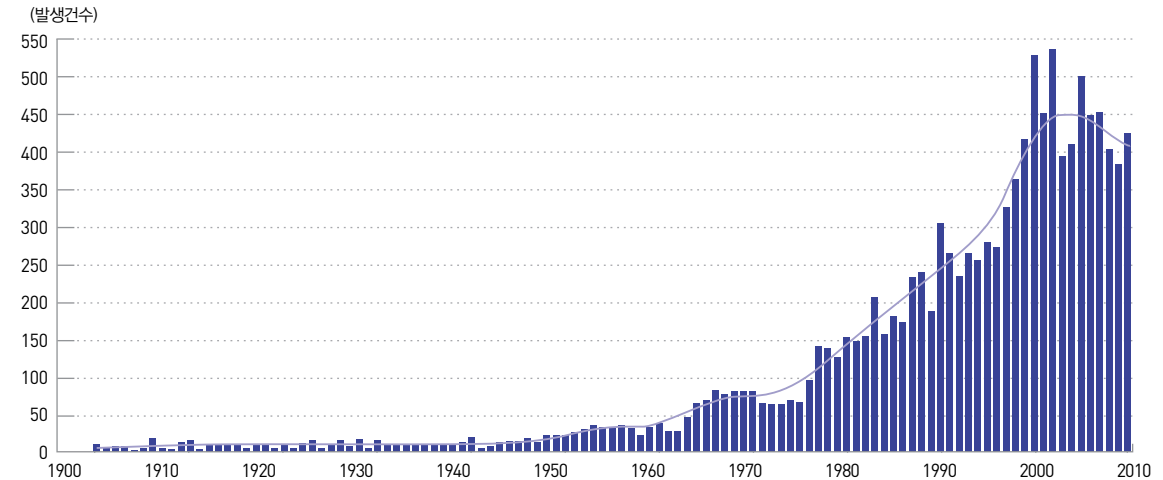
(백만 tCO₂e, %)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05		2010		2015		2020	
	배출량	증가율 ¹⁾	배출량	증가율 ¹⁾	배출량	증가율 ¹⁾	배출량	증가율 ¹⁾
총 배출량	591.1	2.3	679.2	2.8	728.2	1.4	814.1	2.3
에너지	498.6	2.6	574.4	2.9	611.0	1.2	684.2	2.3
산업공정	64.8	2.1	72.1	2.1	80.9	2.3	90.1	2.2
농업	14.7	-0.8	14.2	-0.6	13.8	-0.5	13.5	-0.5
폐기물	13.0	-3.4	18.5	7.2	22.5	4.0	26.3	3.2
토지이용/임업	-32.9	-2.5	-37.3	2.5	-35.2	-1.2	-33.9	-0.7
순배출량	558.3	2.6	641.9	2.8	693.1	1.5	780.2	2.4

주: 1) 증가율은 직전 5년에 대한 연평균 값임.

출처: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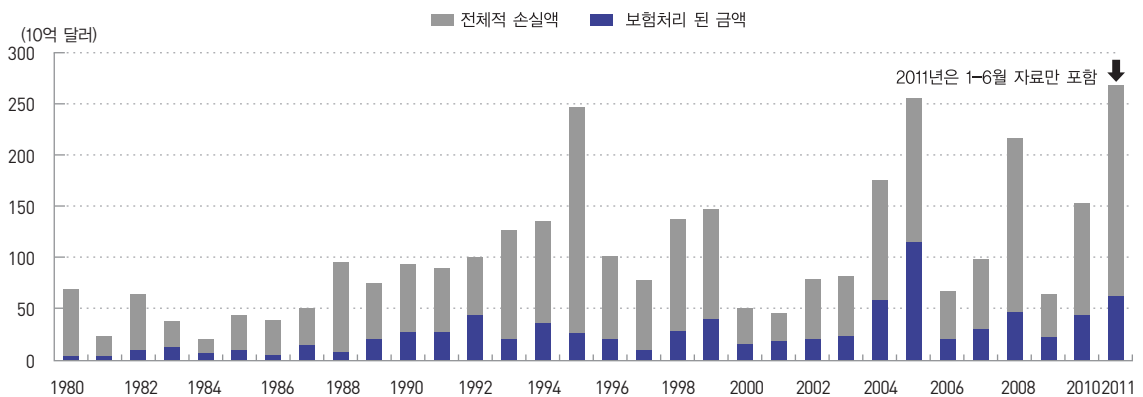
[그림 VI-3] 전 세계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 1900~2010



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권원태, 2005). 그 결과 매년 자연재해 피해액이 어떤 규모의 태풍이 상륙하였느냐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한반도에도 풍속이 67m/s를 넘고, 하루 강우량이 1,200mm를 넘는 슈퍼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극한기후의 발생빈

[그림 VI-4] 자연재해 피해액의 증가추세: 1980~2011¹⁾

주: 1) 2011년은 6월까지의 자료임.

출처: Munich RE, 2011 Half-Year Natural Catastrophe review, 2011.

도 증가를 들 수 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일 최저기온 25℃ 이상) 일수가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4-10일 증가하였고, 열파 지속 지수(일 최고기온이 6일 이상 연속으로 30년 평균보다 5℃ 높은 날이 지속된 일수)도 모든 지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람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기상연구소, 2009). 또 중국 내륙지역에 겨울철 강수량이 감소하여 사막화의 진행이 빨라져 우리나라에 황사 발생일수와 먼지농도가 증가하고, 황사가 시작되는 날도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경익 외, 201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처노력

20세기 중반 이래로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수반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이 총 정리된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에 개최되었던 유엔환경특별회의를 우선 기억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 오늘날 각종 계획과 개발에 고려되고 있는 원칙적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리한 Brundtland 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1988년에는 인류가 자연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목적으로 UN이 IPCC를 출범시켰다.

이 조직에는 세계 각국 정부 대표와 과학자들이 참가하는데, 이들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논문, 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을 맡고 있다. IPCC는 1990년에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100년에는 지구의 기온이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11월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2회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실무자간의 교섭과 각료급 회의가 이루어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상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원칙이 포함된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원칙이란, 첫째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만든 선진국과 책임이 작은 개도국을 구별하여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되 책임에는 차별을 둔다. 두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책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1990년 12월에 유엔총회는 기후변화협약 교섭회의를 설치하였다. 이 회의는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지구정상회의까지 전 세계가 조약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교섭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172개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관, 102명의 정부수뇌, 약 2,400명의 NGO가 참가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회의였다고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의제였던 이 회의에서는 많은 성과를 낳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협약의 체결이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에 50개국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매년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제1회 당사국회의(COP)는 1995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베를린 명령(mandate)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2000년 이후에 실행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수치로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정책 및 구체적 조치를 담은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할 것, ②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행동하되 책임의 정도에는 차이를 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속을 부과하지 않지만, 조약상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촉진한다는 두가지였다. 제2차 당사국회의는 2006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 목표를 정한다는 각료선언을 이끌어내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2008년부터 효력이 시작되어 2012년에 마감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논의해 오고 있다. 그 결실이 2007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회의였고, 여기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로드맵이 채택되

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실천해 갈 목표치를 결정하고 자 노력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향후에 지속적 협의를 통해 포스트 교토 체제를 이어가자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VI-3>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제도적 · 법적 노력의 추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기후변화 적응분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들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표 VI-3>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주요 논의사항
1974	유엔 산하에 세계기상기구(WMO) 설치 - 전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추진담당기구
1979	세계기후회의의 선언(제1회 세계기후회의-기후와 인류의 전문가 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대응을 담당할 세계기후계획(WCP) 설치 합의
198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설립
1990	제2회 세계기후회의/IPCC 기후변화 제1차 보고서/기후변화협약 교섭회의 출범
1992	기후변화협약 조약 채택/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리우환경회의라고 불림)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1995	제1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베를린회의라고 불림) 개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전 세계의 공동책임과 차별적 의무를 확인
1996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제2차 보고서 발표(기후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증가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1997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합의
2001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제3차 보고서 발표
2008 ¹⁾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이 시작됨(2008-2012년)
2009 ¹⁾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코펜하겐회의), post-Kyoto 합의안 도출에 실패
2010 ¹⁾	IPCC 제4차 기후변화평가기보고서 요약본 발표(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 제기)

주: 1) 2005년 이후의 자료는 필자가 가필하였음.

출처: 足立芳寛 외, 『環境 System 工学』, 2005.

온실가스 감축 분야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표 VI-4). 1998년에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대책기구로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2년 마다 한 번씩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정리하여 발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4차 보고서까지 발간되었는데, 이들 보고서에는 국무총리 훈령 제422호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대책, 즉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발이 중심이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세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에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시나리오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전기차·연료전지차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도입강화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표 VI-5>에 제시되어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선정해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애초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관리업체간의 협의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

〈표 VI-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제도적·법적 정비 연표

1998. 04.	기후변화 대응대책팀 구성(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
12.	기후변화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
2002. 03.	기후변화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2005.	기후변화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1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 심의·확정
2008. 09.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심의·확정
2009.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 입법예고(09.2.25 국무회의서 정부안 확정)
07.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수립
11.	국가 중기(2020년) 감축목표 확정
20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1. 0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 입법예고
07.	2020년까지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

〈표 VI-5〉 우리나라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

시행연도	주요 시책	내용
2008.02	탄소중립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상쇄 방안의 실행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프로그램
2009.07	탄소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2009.05	탄소캐쉬백	저탄소 제품 구매 및 실천 매장 등을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 적립된 포인트는 제품 재 구매, 대중교통 결제 등에 사용
2010.0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부와 관리체간 협의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여, 절감 목표를 달성해 가는 제도
2011.02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과해, 이를 넘기면 현금으로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2010.

받침하는 관리체제 등을 설정하여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과해, 이를 넘기면 현금으로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11월에 2020년까지 배출 전량치(BAU)에 대비해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에 원가부담이 커진다는 기업체의 거센 반발로 정부는 2013-2015년을 준비기간 성격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그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의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체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시행(2010년 4월 14일)에 따라서 최초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하도록 되었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201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위한 부문별 소요예산을 제시하였다(표 VI-6). 〈표 VI-6〉에서 2015년까지 예상된 기후변화 적응에 투입될 예산의 60.5%(약 31조 원)가 물 관리 분야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산은 수질관리와 유량관리에 투입된다. 이 예산의 소요 분야를 살펴보면, 물 관리 예산의 약 60%(18조 3,581억 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홍수 및 가뭄대책 중 〈마. 항목〉으로 분류된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2006년 11월에 발간된 N. Stern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표 VI-6〉 부문별 소요예산(안): 2011-2015

(억 원, %)

구분	연차별 소요예산 ²⁾						
	합계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¹⁾	512,643	[100.0]	128,044	116,084	94,741	89,161	84,613
건강	13,496	[2.6]	1,960	2,415	2,845	3,140	3,136
재난/재해	86,136	[16.8]	10,728	14,058	17,658	20,481	23,212
농업	49,621	[9.7]	7,843	8,962	11,034	10,875	10,907
산림	29,062	[5.7]	5,102	5,347	6,067	6,257	6,290
해양/수산	9,872	[1.9]	906	1,678	2,242	2,517	2,529
물관리	310,181	[60.5]	99,341	80,124	52,012	42,929	35,775
생태계	3,949	[0.8]	704	1,240	652	685	669
기후변화 감시·예측	6,830	[1.3]	463	1,195	1,582	1,853	1,738
적응산업/에너지	1,319	[0.3]	656	455	61	66	81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2,175	[0.4]	340	611	589	358	277

주: 1) 예산규모는 물 관리(61%), 재난/재해(17%), 농업(10%), 산림(6%), 건강(3%) 등 순임.

2) 예산의 연간 배정은 2011년 25%, 2012년 23%, 2013년 18%, 2014년 17%, 2015년 17%의 순임.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

지속으로 나타날 관련 문제를 각국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1%(약 6,500억 달러, 618조 원)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예정대로 기후변화 적응에 향후 5년에 약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2%에 상당하여 N. Stern의 지적보다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21세기 말까지 한반도의 누적 피해 비용은 2,800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많게는 2경 7,791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2100년까지 300조 원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에 투자하면 누적 피해 비용을 80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IPCC 제1차 보고서(1990)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약 60%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병행하여 기후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책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래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장기적 기후변화 예측 기술의 개발과 각 분야의 적응 노력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수준의 기후변화에도 적응대책을 준비한 선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개도국 사이에는 피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 사회도

정부의 지원 하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노력이 활성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혁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간과 동물의 힘으로부터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 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대체시키는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부분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강이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전 지구적으로 아주 다양하고도 불규칙한 이상 기후를 유발한다. 이러한 불규칙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안정적 삶을 크게 위협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

정한 물질이어서 일단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1백년 이상 제거되지 않고 대기 중에 잔존한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 기후변화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발생감축을 위한 노력의 지속과 함께 장래 닥쳐올 심각한 기후변화의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를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향후 5년 간(2011~2015년) 약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갈 대책을 개발하려는 정책수단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적응대책 수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대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국민적 이해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이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인데, 예산 배정(0.4%)이 매우 낮은 점은 향후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원태, 2005, 「기후변화의 과학적 현상과 전망」.
- 기상연구소, 2009, “한반도 기후변화: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 이해하기 II」.
- 김경익 외, 2011, 「환경대기과학」.
- 에너지관리공단, 2010, 「2010년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 지식경제부, 2007,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 IPCC,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limate Change 2007」.
- 足立芳寛 외, 2005, 「環境 System 工學」, 東京大學出版會.

김해동(계명대학교)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요약

- 지난 10여 년간 한국인의 체감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수질과 대기분야에 대한 체감환경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반면 소음/진동과 같은 도시환경문제가 체감환경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감은 수입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고,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작다.
-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인상이나 환경부담금 부과에 대한 저항감은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의사는 크지 않다.
-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제외한 친환경행동 참여 노력은 지난 10여 년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 남성과 젊은 세대의 친환경행동 참여율이 여성과 기성세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환경이다.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문제는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보다 화학물질이나 화석연료의 남용 같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들이 주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초래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고,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하다.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은 단지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혹은 환경가치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확산되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무

엇보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는 일상생활에서 친환경행동을 이끌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친환경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힘이다. 친환경정책이나 행동은 비용과 불편함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희생을 무릅쓰고 친환경정책이나 행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 주어 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체감환경

환경의식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측면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의식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환경의식의 다차원적 성격을 고려할 때, 환경의식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정도(知),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情), 그리고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의지(意)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복합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은 아마도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정도일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하는지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지표의 하나가 된다.

〈표 VI-7〉은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분야별로 보여준다. 대기, 수질, 녹지환경, 토양, 소음/진동의 다섯 가지 분야의 체감환경을 물었을 때, 보통이라는 응답이 평균 45%로 가장 많았고 약간 좋음과 매우 좋은 합이 평균 34% 그리고 약간 나쁨과 매우 나쁨의 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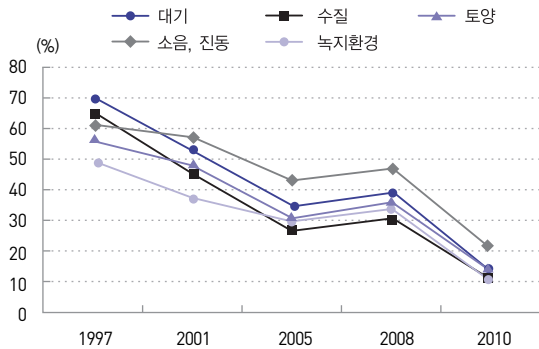
평균 21%였다. 분야별로 볼 때, 한국인의 체감환경이 가장 나쁜 분야는 소음/진동 분야로 도시의 과밀화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체감환경에 대해 약간 나쁨이나 매우 나쁨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3.2%로 약간 좋음이나 매우 좋음이라고 대답한 비율 27.3%보다 크다. 다른 네 분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모두 체감환경이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국의 전반적인 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인식이 보편적임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체감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의외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은 한국인의 체감환경의 변화추이에서 찾을 수 있다.

〈표 VI-7〉 한국인의 체감환경: 2010

	(%)				
체감환경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
매우 나쁨	3.1	1.9	2.7	7.4	3.8
약간 나쁨	17.7	12.9	17.1	25.8	13.3
보통	43.2	51.3	49.9	39.5	40.9
약간 좋음	26.5	26.5	24.2	20.7	29.9
매우 좋음	9.5	7.4	6.2	6.6	12.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0.

[그림 VI-5]는 체감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1997년부터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1년 전에 비해 해당 분야의 체감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간 나빠짐과 매우 나빠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5]의 모든 분야에서 약간 나빠짐과 매우 나빠짐의 합은 분명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인의 체감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같은 조사에서 49%(녹지)-70%(대기)가 각 분야의 환경이 약간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

[그림 VI-5] 한국인의 체감환경 변화 추이¹⁾: 1997~2010

주: 1) 1년 전과 비교하여 각 항목의 환경이 나빠졌다(약간 나빠짐 + 매우 나빠짐)는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면 2010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0%(대기환경)~21%(소음/진동)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장 큰 폭의 체감환경 개선을 보여준 분야는 수질환경과 대기환경 분야로 1년 전에 비해 이 분야의 환경이 나빠졌다(약간 나빠짐 + 매우 나빠짐)는 응답은 수질환경의 경우 1997년 64.0%에서 2010년 10.6%로 그리고 대기환경의 경우 1997년 70.0%에서 2010년 13.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표 VI-7>에서 가장 체감환경이 나빠졌던 소음/진동의 경우 같은 비율이 1997년 60.5%에서 21.2%로 감소했으나 그 감소폭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가장 작다. 녹지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체감된 개선 폭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환경문제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사회에서 환경담론이 커져가면서 환경 관련 문제들이 자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상 한국인은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단지 인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산업화와 개발만이 사회적 목표였던 20세기 중반과 비교할 때는 자연환경이 분명히 나빠졌지만 적어도 삶의 질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난 10여 년 동안은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소음/진동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에 비해 환경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더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소음/진동과 같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높아진 환경의식수준과 함께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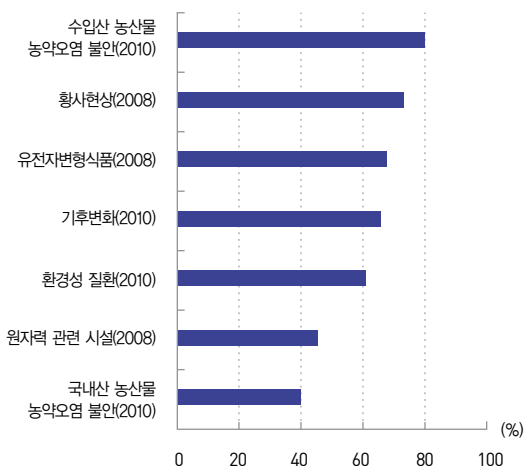
한국인의 체감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도는 높은 수준이다. <표 VI-7>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분야들에 대한 체감환경을 보여준다면, [그림 VI-6]은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 쟁점인 환경문제들에 대한 우려도를 보여준다. [그림 VI-6]은 각 환경문제들에 대한 불안정도를 ‘매우 불안하다’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합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6]에서 가장 우려도가 높은 분야는 수입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우려로 무려 81%의 응답자들이 수입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모든 사람에 관계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우려도가 높은 편이

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최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수입 농산물의 각종 문제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우려도가 높은 환경문제들은 대체로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많고 언론을 통해 자주 조명되는 것들이다. 응답자의 62~74%가 불안감을 표시한 황사현상, 유전자변형식품, 기후변화, 환경성 질환이 수입농산물 농약오염의 뒤를 이어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관련시설과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한 응답자는 각각 45.7%와 40.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에 제시된 7가지 환경문제에 중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우려도가 가장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수입 농산물과의 대비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불안정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크게 변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그림 VI-6] 사회적 쟁점이 된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도¹⁾: 2008, 2010



주: 1)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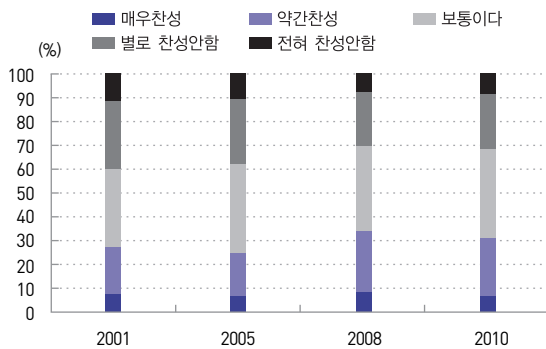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외에 환경의식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결방안에 얼마나 기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환경의식의 의지적 차원은 주로 환경정책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림 VII-7]은 만약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인상 혹은 환경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인의 답변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질문문항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30%의 응답자가 매우 찬성한다 혹은 약간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인상 혹은 부담금 부과에 전혀 혹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반면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인상 혹은 부담금 부과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자와 보통이라는 응답자만 각각 5% 이내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인상이나 환경부담금 부과에 대한 저항감은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의사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환경보호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약 36%로 비교대상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The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2005).

이러한 결과들은 환경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아직 환경보호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의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 중 약 3분의 1만이 환경보호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식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의지의 강도는 강하지 않은 상태가 한국인의 현재 모습이다.

[그림 VI-7] 한국인의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용정도¹⁾: 2001-2010



주: 1) 정확한 질문 문항은 2001년과 2005년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귀하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미세한 차이가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친환경행동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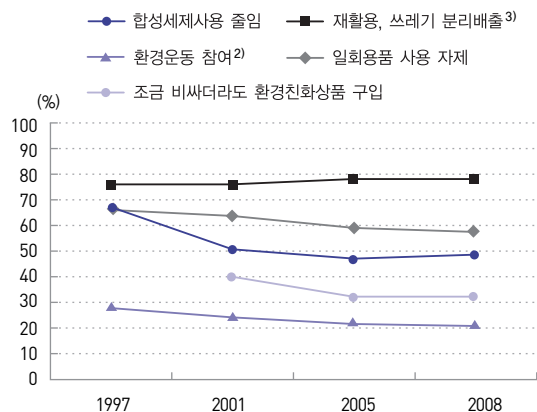
환경문제가 물리적 문제인 만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의식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의지 이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친환경행동은 보통 개인적 친환경행동과 집합적 친환경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에너지절약, 쓰레기분리수거, 친환경제품 구매처럼 개인적인 차원인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환경정책을 위한 청원서명이나 환

경운동단체가입 및 환경운동에의 참여처럼 집단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8]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친환경행동 참여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조사는 응답자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행동에 대한 보기를 주고 각각에 대해 '매우 노력함'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음'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있다. [그림 VI-8]은 이들 문항들 중 질문내용이 대동소이해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한 합성세제 사용감소,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자제,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입이라는 네 가지 개인적 친환경행동과 환경운동 참여라는 집합적 친환경행동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VI-8]은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노력함' 또는 '약간 노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내

[그림 VI-8] 한국인의 친환경행동 참여정도¹⁾: 1997-2008



주: 1) 각 항목에 '매우 노력' 또는 '약간 노력'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2) 환경운동 참여 문항은 1997년은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다"인 반면 2001년 이후는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다"임.

3) 재활용/분리배출 문항은 1997년과 2001년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린다"인 반면 2005년과 2008년은 "분리배출(일반·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한다"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고 있다. 그림에서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위해 약 75%의 응답자들이 매우 혹은 약간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다섯 가지 친환경행동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1997년 이후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많은 지자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법으로써 강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많은 법규들이 시민들의 저항이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참여노력을 단지 법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저항이 미미한 것은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나머지 친환경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참여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997년 66.3%에서 2008년 57.2%로 감소했고, 합성세제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4%에서 48.8%로 감소했다. 친환경제품 구입 역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자가 2001년 39.6%에서 2008년 31.5%로 감소했다. 비록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는 완만하나 그동안 정부부처들이 각종 친환경마크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인증과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수도 2006년 4,639개에서 2010년 8,021개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제품 구입을 위해 노력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집합적 친환경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운동참여는 가장 참여정도가 낮아 20%대의 응답자만이 환경운동참여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 비

율 역시 1997년 27.5%에서 2008년 20.4%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환경행동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환경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그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동체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운동 차원의 집합적 친환경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바 친환경 소비자를 넘어 친환경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표 VII-8>은 친환경행동 참여정도를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환경의식의 경우 환경주의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인구사회학적 범주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친환경행동은 여전히 인구사회학적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범주들 중 가장 일관되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과 연령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성에 따른 친환경행동 참여율의 차이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친환경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친환경행동이 가사활동과 관계되고 아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가사활동을 담당하는 성별분업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사활동이 아닌 환경운동참여 부분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친환경행동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정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 VI-8〉 성별, 연령대별 친환경행동 참여정도¹⁾: 2008

(%)

	분리배출	음식물 낭비를 줄임	일회용품 사용 자제	합성세제 사용 줄임	환경친화 상품 구입	환경운동 참여
성별						
남자	70.1	62.7	49.1	40.5	28.6	20.0
여자	84.7	76.7	65.0	56.6	34.5	20.9
연령별						
15-19세	58.5	47.0	33.7	25.7	16.6	13.5
20대	68.4	56.9	43.0	35.0	24.7	13.7
30대	80.1	66.6	53.6	43.1	33.7	15.8
40대	82.6	75.3	62.5	53.0	37.9	23.9
50대	83.3	79.7	67.4	60.2	37.7	27.7
60대 이상	81.1	81.6	70.5	64.2	29.7	25.2

주: 1) 각 항목에 '매우 노력' 또는 '약간 노력'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0대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가사활동에서의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30대 이상 연령대가 주로 가사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친화 상품 구입과 환경운동참여에 60대 이상 노인층의 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활동이 노년층이 습득하기 어려운 상당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젊은 층에서 친환경행동 참여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년시절 궁핍을 체험한 기성세대들의 몸에 밴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은 친환경행동을 증가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표 VI-9〉는 한국인의 친환경행동이 얼마나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고 있다. 비록 연도별로 누적된 지표의 범위가 크지 않아 추세를 분명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표 VI-9〉는 실제 친환경행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먼저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배출 부문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하던 가정부문의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두 지표 모두 뚜렷한 증가나 감소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경차 등록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여객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어, 경차비중의 증가가 기존의 중대형 자동차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자가용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송부문에 사용된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역시 분명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결국 1인당 물 사

〈표 VI-9〉 한국인의 녹색생활 성과지표: 2006-2011

지 표	현 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¹⁾
1인당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 ²⁾)	0.444	0.435	0.435	0.421	0.443	-
1일 1인당 물 사용량(ℓ)	346	340	337	332	-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7.2	57.8	59.8	61.1	-	-
1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kg)	0.28	0.30	0.31	0.29	-	-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³⁾ 배출량(kg)	1.01	1.04	1.07	1.04	-	-
1인당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	0.756	0.765	0.736	0.737	0.749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4.2	44.2	44.0	-	-	-
경차 등록비율(%)	6.5	6.3	7.5	7.9	8.3	8.7

주: 1) 2011년 자료는 7월말 기준임.

2) 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의 가치를 석유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3)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수치임.

출처: 통계청, 「녹색생활 성과지표」, 2011.

용량과 폐기물 재활용률을 제외하면 친환경행동의 실제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은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주위 환경에 대한 체감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나 수질 분야처럼 일반적인 분야의 환경개선이 체감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인상 혹은 환경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국인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한국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의지의 강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쓰레기분리수거처럼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친환경행동에 참여

하려는 노력 역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회용품이나 합성세제 사용자제 노력, 환경친화적 제품 구입 노력 그리고 환경운동 참여노력 등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친환경행동 노력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많은 부문에서 친환경행동 노력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의식의 성장과 환경개선이 일정정도 있었지만 환경개선을 위한 의지가 약하고 실제 친환경행동 참여수준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젊은 세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행동 참여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개선노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설부른 것임을 보여준다. 환경개선을 위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은 지금 기로에 서있다.

참고문헌

- The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2005. *World Value Survey*.

박희제(경희대학교)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 사회

요약

- 2010년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단위 투입 에너지량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에너지 다소비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이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가정, 상업 및 공공 부문은 에너지원에서 전력,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빠른 전력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소득계층에 따른 에너지 불평등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이원화로 인한 환경 불평등도 존재한다.

한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물질 기반을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수입 조건의 악화 등은 경제는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 유지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까닭에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기본 정책이 되어왔고 이들 정책의 변화는 또한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에너지 문제는 이런 경제, 산업을 지탱해주는 물질 기반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연계되어 조명되기 시작했다.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전 지구적 규제도 시작되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세계에너지 기구를 비롯하여 몇몇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 구조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 대응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특성, 산업과 가정 부문에서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특성, 에너지 소비에서 보이는 불평등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 구조

한국 사회의 현재 에너지 소비 현황은 어떠한가? 2008년도 에너지 관련 통계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가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탄이나 석유 등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원의 소비를 보여주는 1차 에너지 소비¹⁾는 2억 4천 7만 toe²⁾로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에너지원별로 세분해서 현황을 보면, 석탄 소비는 6천 6백만 toe로 2.0%를 차지하고 세계 8위, 석유 소비는 8천 9백 62만 toe로 세계 12위, 전력소비는 430.3TWh로 세계 10위, 인구당 전력소비는 8,853kWh/인으로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경제적 지위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에너지 소비의 위상은 한편으로 한국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 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만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81년에 1,475억 달러(2000년 불변가격)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에 7,50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1990년 1만 달러에서 2008년에 19,296달러로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이런 경제 성장은 한국의 경우, 제품 수출 신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에 따르면, 이들 수출은 반도체,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와 부품, 석유 제품, 평판디스크 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컴퓨터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이들의 공통 특징은 많은 에너지 자원의 투입을 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에너지 소비 현황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에너지 소비 추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는 <표 VI-10>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성장률은 약간 완화되었다. 1인당 에너지 소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총에너지 소비에는 약간 떨어진 연평균 5.5%로 증가하였다. 이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연평균 11.4%의 고성장을 지속한 에너지 수입으로 충당되어 왔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고, 2008년에는 전체 수입의 32.5%

〈표 VI-10〉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1981-2008

	1981	1990	1997	2008	연평균 증가율
GDP (조원)	145.9	369.0	611.5	978.5	7.3 %
에너지수입액 (억\$)	77.6	109.1	273.1	1,414.8	11.4%
총에너지소비 (백만 toe)	45.7	93.2	180.6	240.8	6.3%
총 수입 중 에너지비중(%)	29.7	15.6	18.9	32.5	0.3%
1인당 에너지 소비 (toe/인)	1.18	2.17	3.93	4.95	5.5%
에너지원단위 ¹⁾ (toe/백만 원)	0.292	0.253	0.295	0.246	-0.6%

1) 1차 에너지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 등을 말한다.

2) toe란 석유환산톤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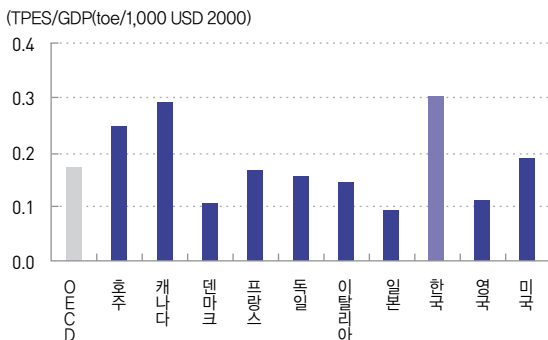
주: 1)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수요전망 및 목표안」, 2010.

에 달하고 있다. 즉, 현재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지표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의 변화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 현황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소비량을 총부가가치로 나눈 것으로 경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VI-10>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에서 1997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그 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0달러 국내 총생산에 투입되는 1차 에너지 양을 비교한 [그림 VI-9]는 한국이 0.2987로서 일본의 0.0964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OECD 전체 평균보다도 높고,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서도 높아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의존이 높아지는 것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그림 VI-9] 에너지원단위 국가 간 비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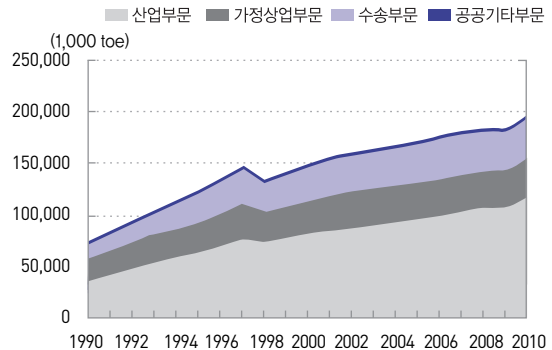


주: 1) 단위는 2000년 불변 미국 달러임.

출처: OECD,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

한편, 에너지 소비가 어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VI-10]에 보이는 것처럼 2010년 현재에도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자가용의 증가나 도심 대형 건물들의 증가 등으로 수송 분야,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는 부문은 산업 부문이었다. 2010년 현재, 산업 부문에서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115.4백만 toe로 가정·상업 3,800만 toe와 수송 부문 3,600만 toe의 합계를 상회하고 있었다. 1990년도부터의 추이를 보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산업 부문 증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의 비중은 1990년의 48%에서 2010년 현재 59%로 증가하였다.

[그림 VI-10] 부문별 에너지 소비: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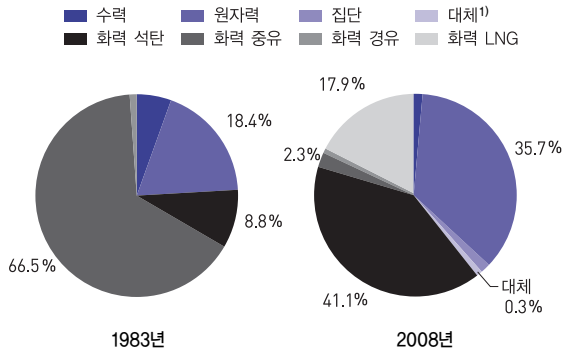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원별 구성을 보면 한국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 수송연료, 난방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65%가 석탄, 석유에서 유래하고 있었다. 난방 연료로 연탄 사용이 줄어들고, 도시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여 석탄에 대한 의존은 1981년보다 62% 정도가 줄어들었다. 전력 생산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석유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증

가로 인한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율은 15% 정도의 감소만을 보였을 뿐이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력비중이 198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연평균 3.1%씩 지속적 증가를 보인 전력 소비는 1978년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설비 확충으로 충당되어왔다. 1980년대 원자력 발전 설비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면서 1990년에 발전원 전체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에 이르기도 했는데, [그림 VI-11]에서 보이듯이 2008년 현재 발전에서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35.7%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프랑스의 76.3%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OECD 평균인 21.8%, 일본의 26.9%를 앞서고 있다.

[그림 VI-11]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비의 변화: 1983, 2008



주: 1) 대체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등이 포함됨.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³⁾ 역시 높아져서 현재는 프랑스의 1.5배를 넘어섰다.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중은 2024년에 48.5%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원자력 비중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란 국토 면적 1km²당 원전 설비용량(kW)을 뜻함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에 비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비중은 0.3%에 머물러 OECD 평균 4.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원자력과 더불어 현재 전력 생산은 여전히 화석 연료인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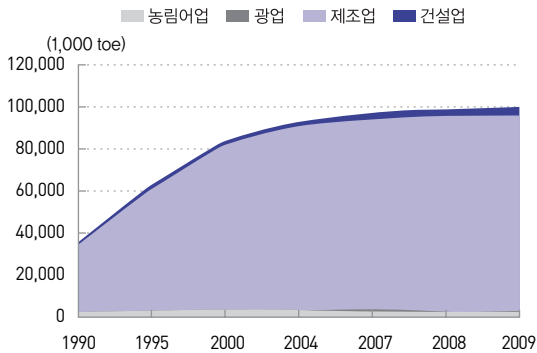
이렇게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이후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계속해왔으며, 에너지원별 구성에서도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화석 에너지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아서 에너지 생산성이 낮은 다소비형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특성

산업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 증가

산업 부문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 현재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9%를 차지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산업 부문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농림어업의 경우, 2004년 이후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광업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그림 VII-12]가 보여주듯이, 2009년 현재 산업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9%의 소비 증가를 보였다(지경부, 2008).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3% 증가로 이전에 비해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그림 VI-12] 산업 부문 업종별 에너지 소비: 1990-2009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증가는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1990년 대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들은 석유화학, 1차 금속, 비금속을 들 수 있다. 2009년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 총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은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1990년 대비 총량에서 5배가 증가하였다. 1차 금속은 석유화학 업종보다는 낮아서 2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1차 금속과 비금속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이 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비교해보면, 2007년도에 0.38toe/백만 원을 기록하여 2004년도의 0.40toe/백만 원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앞서의 세 업종에서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업 전체 에너지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즉, 200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에너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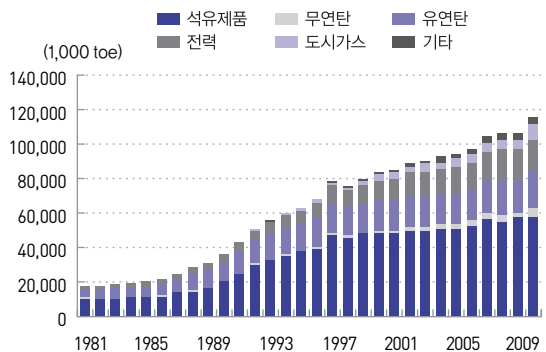
소비 업종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부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VI-13]의 에너지원별 구성은 우리 산업이 여전히 화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2009년 현재, 산업 부문의 에너지원 구성에서 석탄,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이르고 있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 석탄의 비중은 30%에서 22%로 줄어들었으나 석유제품은 55%에서 53%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산업 부문에서 이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는 유전 발굴의 감소 등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경고하는 석유 정점 위기에 우리 산업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1990년 이후로 도시가스와 전력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1990년에 원별 구성에서 1%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가스 소비는 2010년에 6%로 증가하였고, 전력은 14%에서 17%로 증가하였다. 전력량 전체로 보면, 1990년에

[그림 VI-13]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원별 구성: 1981-2010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대비하여 4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전력량은 2010년까지 연평균 6%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 증가는 2009년 현재 OECD 전기 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 요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업, 제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전기는 현재 주택 전기요금 판매가인 120원에 비해 36%나 싼 77원에 판매되고 있다(정한경, 2011).

〈표 VI-11〉에서 보듯이, GDP 대비 전기 요금 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생산에서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빠른 수출 증가를 도모한 정부는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왔고, 이런 정책의 결과로 산업 부문에서의 전기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

농림어업을 포함하는 생산 부문 전체에서 전력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농림어업 분야 전력 소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총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는 값싼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전기로 난방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용도별 요금 체계, 주택에만 적용되는 단계별 누진제 등의 현행 요금체계가 생산 분야 전체 소비 증가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상업·공공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의 특성

총 에너지 소비에서 가정, 상업,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약 22%로 1990년 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상업과 공공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9.4%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서 2007년에는 4.3%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지경부, 2009). 가정 부문의 경우는 소비 비중에서는 1990년의 22%에서 2009년의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량에서 상업이 1990년 대비 2009년에 3배 증가를 보여 이 부문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들 세 부문에서 소비량 증가보다 수송 부문 소비량 증가가 앞서면서 부문별 구성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재 수송과 가정, 상업 및 공공 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상업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처럼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아 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세 부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원별 구성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I-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석유에 대한 의존율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과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문에서는 석유 에너지원이 전력과 도시가스 대체되고 있었

〈표 VI-11〉 국가별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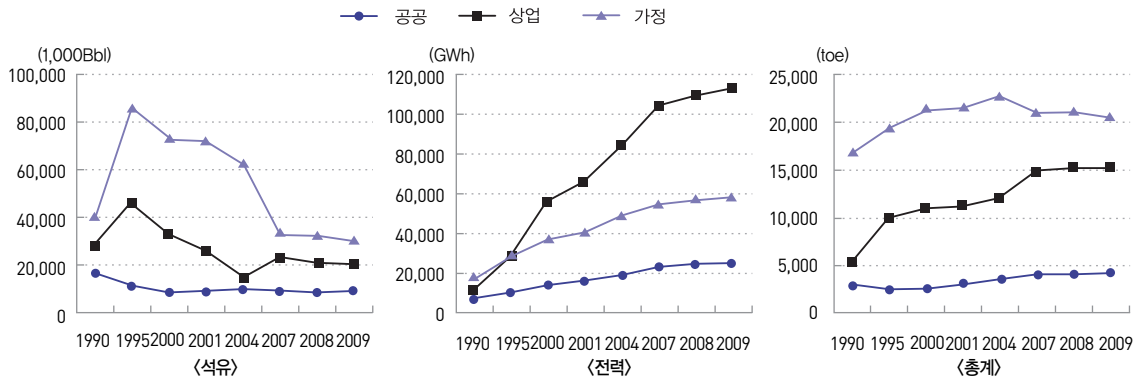
	산업 전력 소비 ²⁾ (Mtoe)	전기요금 (주택용) (USD Cent/kWh)	전기요금 (산업용) (USD Cent/kWh)	GDP PPP (billion 2000 USD)
캐나다 ¹⁾	16.2	6.8	4.9	1,034.6
덴마크	0.8	36.6	11.1	166.0
프랑스	12.1	15.9	10.7	1,729.9
독일 ¹⁾	20.8	21.2	8.4	2,276.2
이탈리아	12.2	28.4	27.6	1,498.0
일본	26.1	22.8	15.8	3,420.9
한국	17.9	7.7	5.8	1,162.0
영국	9.8	20.6	13.5	1,778.9
미국	78.7	11.6	6.8	11,591.8

주: 1) 캐나다와 독일의 전기요금은 2006년도 자료임.

2) 산업전력 소비는 2008년 자료임.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

[그림 VI-14]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1990-2009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0.

다. 가정 부문에서는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석유 소비의 증가가 있기는 하였으나 199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1990년 이후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어 2000년부터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산업 부문 역시 199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취사, 난방이 도시가스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주택 보급이 증가하고 있고, 상업 건물들에서 전력 냉난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공공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원별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는 것이 전력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전력 소비량은 2009년에 1990년 대비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에서도 전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2007년도 toe로 환산한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과 공공 부문은 전력이 62.6%, 도시가스가 22.9%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1990년 대비 9배가 늘어나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는 양적인 측면에서 가정 부문의 2배에 이르고 있었다. 도

시가스의 경우는 가정 부문이 산업 부문에 비해 3배가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소비하고 있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이들 통계는 전력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은 산업 부문 다음으로 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는 사업체의 정보화, 사무자동화 진전에 따른 전기기기 및 시설 증가,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 및 조명 서비스 증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정부, 2009). 건물 냉방의 경우, 76.9%가 전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미비된 상황에서 대형 신축 건물들이 늘어날 경우, 이 부문의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업무용 전기 요금의 현실화, 건물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감축, 전력원의 전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업 부문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보다 높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1년 138.1원에서 2007년도 124.9원으로 낮아져 소비 증가를 이끌고 있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상업용 보다는 전력 소비 증가가 높지는 않지만 가정 부문에서의 3배에 비

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건물의 조명, 냉난방 장치 가동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정 부문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와 전력이 석유, 석탄을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2008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석유류 소비 비중은 2001년의 41.3%에서 2007년의 17.9%로 감소하고 도시가스가 35.9%에서 48.4%로 증가하여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정부, 2009). 그렇지만, 상업과 공공 부문에 비해 석탄, 석유 의존은 높았다. 여기에는 높은 유류가로 인해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늘었고, 도시가스에 연계되지 않아 석유 난방에 의존하는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부문의 석유 소비는 상업 부문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 부문의 경우 석유, 석탄에 난방을 의존하는 가구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난방 취사원으로 쓰이는 도시가스, 다음이 전력, 석유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는 난방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에너지 소비는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고, 2인 가구 이하가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지정부, 2009).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감 정책은 아파트, 소형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업 부문과 비교하여 가정 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24.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는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7%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도시가스 증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증가는 가전제품 대형화로 인한 소비 증가, 조명 설비의 증가 등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1992년에는 평균 용량이 284.2리터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450리터 이상의 대용량 냉장고를 보유한 가구가 77.6%를 차지했다(지정부, 2006). 2007년에는 이 용량이 491.8리터까지 증가했다. 한편, 2인 가구나 1인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는 5, 6인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전력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난방 설비가 없어 전기 난방으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전력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 부문에서 난방을 전력으로 하는 가구들이 생겨나는 것은 등유 가격 급등에 비해 전기요금 가격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낮은 가격이 GDP가 높은 프랑스, 독일의 1인당 전력 소비를 앞지르는 전력 소비를 결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기 요금 체계의 개편, 전기 요금 현실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 부문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정, 상업과 공공 부문에서는 산업 부문과 달리 석탄, 석유에 대한 의존은 줄어드는 대신 도시가스와 전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문에

서 소비 증가가 전력 부문에서 주로 이어지면서 석탄,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에 기여하고 있었다. 각 부문의 특성에 맞추어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소비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요금 정책 등이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보이는 에너지 불평등

에너지 소비를 가구 통계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한국 사회 에너지 소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과 마주하게 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형태, 냉난방 설비, 가전제품 이용 현황 등이 달라지면서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원별 소비는 달라지게 된다. 2008년도 『에너지총조사』는 이런 에너지 소비에서의 소득 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연탄, 석유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VI-12>에서 알 수 있듯이 6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들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만 원 소득 가구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도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에너지 소비를 위한 지출이 높다는 것이었다. 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300-399만 원 가구에 비해 3배나 더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교육비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계층 완화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에너지 불평등은 에너지원별 가격 변동에서도 기인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서 이용하는 에너지원일수록 가격 상승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

〈표 VI-12〉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07

(천 kcal, 천 원, %)

	100만 원 미만	10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소비량	8,963.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에너지비용	815	982	1,104	1,248	1,341	1,473	1,630
지수 ¹⁾ (100만 원=100)	100	60	41	33	27	25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탄	5.6	3.4	0.9	0.2	-	-	-
석유류	26.5	14.1	12.2	7.6	4.6	5.8	3.4
가스류	38.4	53.5	56.5	58.9	58.1	51.6	46.3
전력	25.1	25.2	24.6	24.5	24.6	24.5	24.3
열에너지	3.4	3.0	5.5	8.7	12.7	18.1	25.9
임산연료	0.9	0.8	0.3	0.0	-	-	-

주: 1) 지수는 소득 만원당 에너지 소비 지출 비용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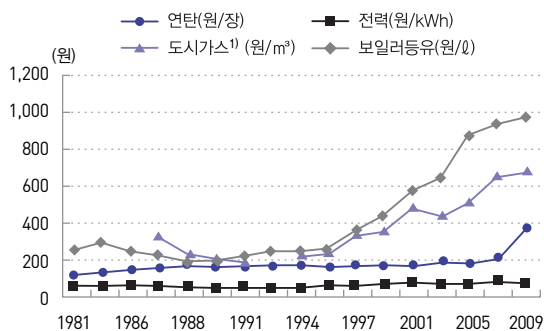
출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총조사」, 2009.

하는 등유의 경우, 1990년 대비 2009년의 가격은 5.1배 증가하였다. 연탄의 경우도 같은 기간 2.2배 증가하여 전력(1.6배)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런 가격 요인이 가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는 대개 단열이 낮은 주택들이어서 에너지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고, 소득 계층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그대로 둔 채,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등의 현물로 상쇄하는 방식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 난방 시설 개량 등이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약화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VI-15] 에너지원별 가격 변동: 1981- 2009



주: 1) 도시가스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소비 지출에서 보이는 불평등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도 존재한다. 최대 전력 소비지인 서울의 경우, 전력 생산의 37배가 넘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력 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자리 수의 자급률은 원자력 발전이 위치한 부산, 화력 발전소가 있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 차원에서 충북과 충남을 비교하면, 충남은 소비 전력의 300%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충북은 겨우 5.3%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전력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지역들의 대부분은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경우, 주민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환경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전력기반기금으로 이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의 경우,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화력 발전소 인근의 경우도 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원자력과 화력 중심인 현재의 중앙 집중식 발전 시스템은 환경 위험의 불평등한 집중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역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열,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은 소비와 생산을 일치시키게 됨으로써 이런 위험의 집중을 피해갈 수 있다. 지역의 조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전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 설비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중심인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적 잠

재량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량은 이 잠재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박년배, 2011).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부분은 또한 폐기물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공급 부문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으며,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부가가치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도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 다소비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석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석유 화학 업종과 1차

금속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정체를 보이면서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업과 가정 부문의 경우,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은 낮아졌지만 전력 소비의 높은 증가로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가정 부문에서는 또한 소득 계층 간의 에너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석유 의존도가 높아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의존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 부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위험도 높아지고 이는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 현황이 기후 변화 위기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정제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전기 요금제 개선 및 건물 에너지 사용 규제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강화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를 가속할 수 있는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도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1. 「월간경제동향」.
- 박년배. 2011.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시나리오 분석」. 에너지전환 탈핵교실 발표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에너지통계연보」.
- 정한경. 2011. “전기요금 정책 및 체계 개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 자료집.
- 지식경제부. 2006. 「2005년도 에너지통조사」.
- 지식경제부. 2009. 「2008년도 에너지통조사」.

용어해설



용어해설

I. 교육

공교육비: 공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공·사립 각 학교급의 교비(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와 육성회비를 포함하는 교육경비를 말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구매력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대안학교: 서구 교육계의 '얼터너티브 스쿨(alternative school)'에서 나온 말로, 억압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함.

보육시설: 어린이를 보호하며 기르는 곳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 가정보육, 부모협동, 민간보육 시설 등으로 구분됨.

- **국·공립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 **법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시설:**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을 말함.

실업계고등학교: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영유아보육법: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탁형학교: 1998년 특성화학교 정책 이후 교육 관계 당국의 대안교육 정책 중 하나로 2001년에 생김. 자퇴 의사나 퇴학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임.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으로 3곳이 있음. 교육과정은 특성화 학교와 비슷하며 주로 수시모집으로 학생들을 뽑음.

유아교육: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아교육 및 유아(乳幼兒) 교육을 통틀어 유아교육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음.

인가학교: 정부에 의해 인가를 받은 학교. 일반 학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며, 특성화 학교와 위탁형 학교로 나누어짐. 교과과정의 50%는 학교의 특성을 살린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됨.

장학금 수혜율: 장학금 수혜 인원은 1학기 수혜 인원 과 2학기 수혜 인원이 모두 합산된 값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적 학생의 2배수로 평균 장학금 수혜율을 산출함.

$$\text{장학금 수혜율(\%)} = \frac{\text{장학금 수혜 인원}}{\text{재적학생수} \times 2} \times 100$$

전문계고등학교: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 2007년에 전문계 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다시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로 명칭이 개정됨.

종일제유치원: 2000년 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반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각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text{취학률(\%)} = \frac{\text{취학자수}}{\text{취학적령인구수}} \times 100$$

특성화고등학교: 1998년 3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함. 경기 두레자연고 등 13개 고등학교와 성지송학 중 등 중학교 한곳이 있으며 정규학력을 인정받음. 교과과정의 절반은 국·영·수 등 국민공통교과를 가르치고 나머지 50%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함.

평생학습: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형식교육:**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을 말하며, 일정한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성, 방향성, 조직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소정의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의도적 교육, 협의의 교육과 그 개념이 유사함.
- **비형식교육:** 무의도적 교육으로서 일명 기능적 교육이라고도 하며, 무의도적 교육 또는 광의의 교육과 그 개념이 유사함.
- **무형식교육:**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교육활동.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육적 활동, 박물관·과학관 등의 비정규적 교육활동, 가정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형식교육인 학교교육, 비형식교육인 사회교육 등에 비하여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교육활동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에 대한 교육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해당 교육단계의 연간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 총액)를 해당 단계의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학업중단율: 각 학교급별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임(94~99년에는 학업중단자에 유학·이민자가 포함되었음).

홈스쿨링: (재택학습)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함.

$$\text{학업중단율}(\%) = \frac{(\text{제적} + \text{중퇴} + \text{휴학자수})}{\text{재적학생수}} \times 100$$

II.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등으로 구분됨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고용주: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임.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 현재 직장의 총 근무기간으로 휴직 기간도 포함됨.

노동기대여명: 취업자의 특정 연령에서 향후 노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기대 년수임. 현재 연령에 노동기대여명을 합하면 예상은퇴연령을 산출할 수 있음.

노년부양비: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단카이세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함.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사람으로 취업자로 분류됨.

베이비붐: 특정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출생이수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며, 한국 및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전후 출산율 급증을 경험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구현상임.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 등)를 포함한 개념임.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설정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함.

생명표: 사망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대여명을 산출한 표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실망실업자: 구직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 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함.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임.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एको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로 본문에서는 1979~1985년 출생자로 정의함.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

유배우율: 인구 100명당 현재 혼인상태에 있는 인구임.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미설정자의 경우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

임금상승률: 전년도 대비 임금총액의 상승률로 이 보고서에서 임금은 명목임금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영업자(자영자):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 중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중위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의미함.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임.

평균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함.

III. 소득과 소비

가격탄력성: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임.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 함.

가계저축률: 전체 저축률 중에서 법인이나 정부의 저축을 제외한 저축률로, 가계저축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것임. 신용을 통한 차입이나 예금인출, 투자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상회하는 지출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음.

경상소득: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

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개인순저축률: 개인의 소득(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돈(순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임.

구매력: 보통 화폐의 구매력을 말하는 것으로 화폐 1단위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수량을 의미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내구재: 예상 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임.

$$\text{민간저축률(\%)} = \frac{\text{민간저축}}{\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임.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화한

것을 말함.

소득탄력성: 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수요는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소득탄력성 또는 소득탄성치라고 함. 정확하게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임.

소비지출: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임.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자산총액: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인 유동자산과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고정자산의 합임.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료 등이 해당됨.

$$\text{정부저축률(\%)} = \frac{\text{정부저축}}{\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임.

총저축률: 총저축은 국민경제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국민의 처분가능 총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함. 총저축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저축률임.

평균소비성향: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text{평균소비성향} = \frac{\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times 100$$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계하여 산출함.

IV. 사회복지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임.

1인 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4세대 가구: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 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

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재(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재(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의미함.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주요 지표로는 공적연금수혜자 비율과 공적연금 평균급여비가 있음.

다문화가정: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함.

빈곤선: 빈곤과 비빈곤의 경계선.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보는 절대개념과 필요한 의식주 및 오락, 교육 등 기본수요 충족으로 보는 상대개념이 있음. 소득 보장사업의 급수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정성, 형

평성, 균등성에 입각해서 조처해야 하는데 이중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빈곤선을 정하는 일임.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크게 기업연금과 협약연금으로 구분된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데, 기업연금은 기업 내부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며, 협약연금이란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다수의 노동조합과 다수의 사용자 간에 성립되는 연금제도임.

상대빈곤율: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사회보험: 보험료를 받아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자,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사회적 욕구에 서비스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시설보호사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전달하는 전문인과 사회복지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함.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전문인임.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

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임.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임.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함.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12월에 발표되며 다음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V. 문화와 여가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이라고도 하며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주차장·식당·카페·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지칭함.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140~15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의 일종으로 미니블로그(miniblog)라고도 함.

미니홈피: 미니홈페이지(mini homepage)의 줄임말로 개인 인터넷 공간임.

블로그: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함.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임.

사회자본: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함.

스마트폰: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 기능에 일정관리, 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 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폰과는 달리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임.

스트리밍: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임.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함.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

터 주5일제를 도입하기로 함.

자아존중감: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을 의미함.

캐릭터산업: 친숙하고 생명력있는 캐릭터를 창작해 영화나 텔레비전·비디오·게임·상품·테마파크 등에 적용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차세대 전략산업임.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만화와 미술을 표현수단으로 하여 고도의 창작능력과 기획력을 통하여 창출되며 그 자체로 경제적인 효과가 막대하며 비디오게임과 테마파크·출판·영상산업과 결합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등 산업적 연관과 파급효과가 뛰어나.

트위터: 140자 이내의 텍스트로 이용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SNS. 주로 정보와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음.

- **Following:** 트위터의 이용자 A가 이용자 B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함.
- **Follower:** 트위터의 이용자 A가 이용자 B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용자 A는 이용자 B의 Follower가 됨.
- **맞팔:** 상호소통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임.

$$\text{맞팔률} = \frac{\text{나의 Follower 중 내가 Following한 사람의 수}}{\text{Follower}} \times 100$$

페이스북: 인맥을 중심으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SNS임.

BGM: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배경으로 연주하는 음악임.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임.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임.

SNS: 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킴. 국내의 대표적인 SNS로는 '싸이월드'를 들 수 있음.

VI. 환경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공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 동안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고,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함.

1차 에너지: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 등을 말함.

과불화탄소(PFCs):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₂) 및 메탄(CH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기후변화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

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함.

녹색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는 물론,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도시열섬 효과(도시화 효과) : 도시 열섬 또는 Urban Heat Island는 주위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임.

메탄(CH₄):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서 가연성, 공기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서 연료용으로 쓰임.

수소불화탄소(HFCs):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질로 여겨지고 있음.

아산화질소(N₂O):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을 가진 무색의 기체로서 수술 시 흡입마취제로 사용됨. 지구온난화에 이산화탄소(CO₂)의 230배에 달하는 영향을 미침.

에너지원단위: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됨. 부가가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은 그만큼 낮은 것을 의미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의미함.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이 있음.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임.

원자력 밀집도: 국토면적 1km²당 원전 설비용량(kw)을 뜻함.

육불화황(SF₆):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1960년대부터 절연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이산화탄소(CO₂),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둘이 결합한 화합물(CO₂)이며, 고체 상태일 때는 드라이아이스라고 부름. 대기 중에도 존재하며, 화산의 배출 기체에도 포함되어 있다. 유기물의 연소, 생물의 호흡, 미생물의 발효 등으로 만들어지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이기도 함.

재생가능에너지: 고갈할 우려가 없는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함.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로 식물이나 해조류에 의해 만들어지

는 바이오매스 연료 등이며,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와 우라늄 등의 원자 연료와 대비됨.

환경부담금: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 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임.

BAU: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미래 전망치를 나타냄.

TOE: 석유환산톤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를 말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부문별 논문 주제

부문	주제	연도
인구	·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가족과 가구	·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교육	·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노동	·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
	·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 청년층 노동시장	2009
	· 노사관계의 변화	2009
	·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부문	주제	연도
소득과 소비	·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 소득원천별 구성	2009
	·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문화와 여가	·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주거와 교통	·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보건	·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 건강불평등	2010
	·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복지	·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부문	주제	연도
환경	·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 친환경 소비성향	2009
	·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사회안전	·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 산업재해의 변화	2010
	·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사회통합	·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2009/2010
	·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11』 연구진

연구 책임자 : 이동명 (한국통계진흥원)

공동 연구자 :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박희제 (경희대학교)

이현승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희길 (통계개발원)

박시내 (통계개발원)

김미영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연구보조원 : 김종환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수행기관 : 한국통계진흥원

